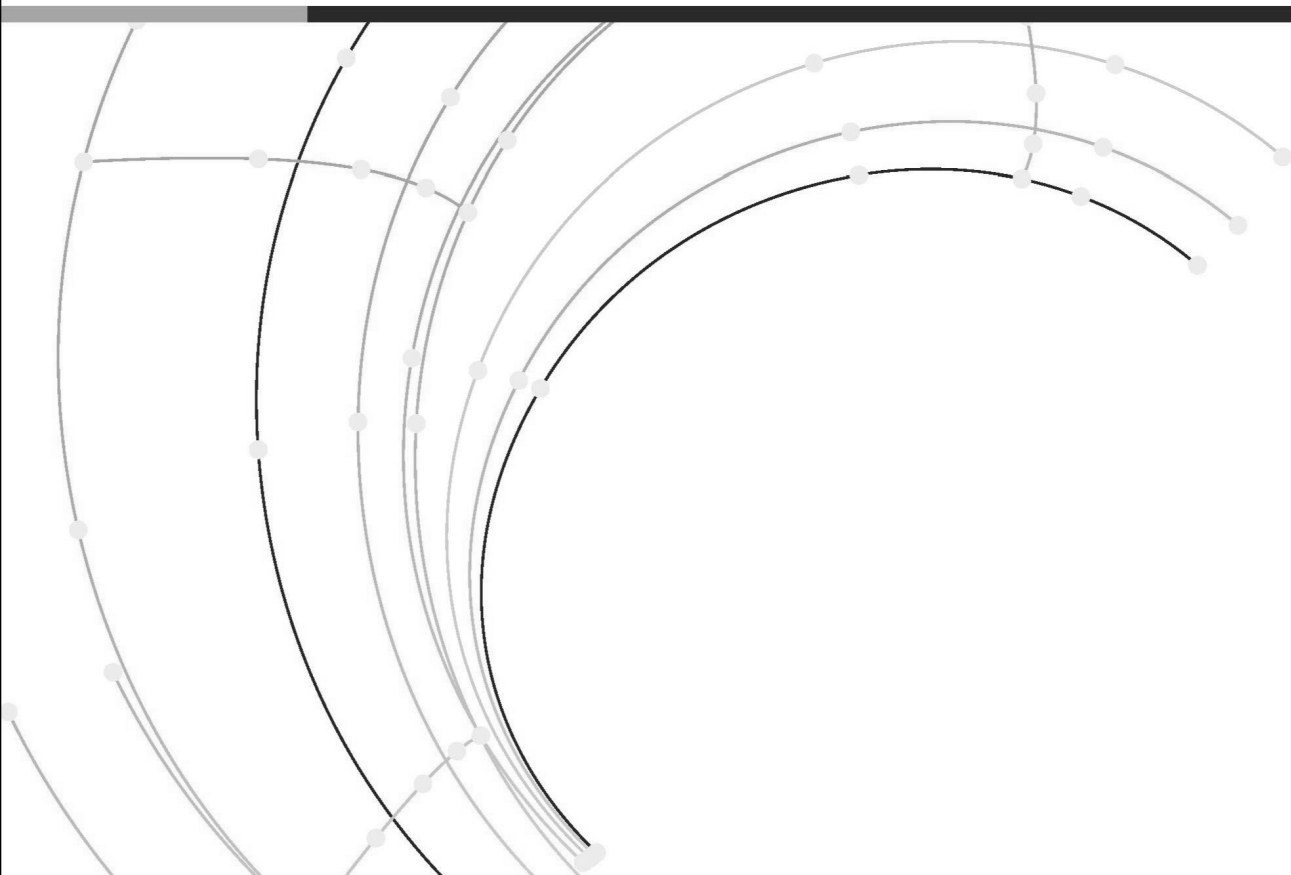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The Effective Operation of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in Gyeonggi-do

이장욱 외

jangwook@gri.re.kr





정책연구 2023-21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The Effective Operation of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in Gyeonggi-do

인쇄 2023년 6월
발행 2023년 6월
발행인 주형철
발행처 경기연구원
주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3
ISBN 979-11-6853-187-1 93320

연구책임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덕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건의

□ 지방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방소멸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음
 - 행정안전부 등의 정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에 기인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 못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의도 존재함
 - 이는 인구감소 또는 지방소멸에 대한 기관마다의 지표가 혼재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의 위험 수준이 각 지표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반영한 지방소멸지수 산정이 필요하며,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지자체별 배분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발전 정책,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자체에 배분되나 지자체별 평균 배분액은 80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에 불과하여 인구감소 추세를 단기간에 변화시키기에는 재원규모가 크지 않음
 -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및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에 대한 규제, 법정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는 생활인구, 인구감소 대응기본계획 등이 유관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등 법정계획과 인구감소 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인구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필요성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조로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발굴, 지역여건 분석 등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함
 -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등 지방소멸을 위한 정책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발굴을 기조로 함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책발굴 단계에서 면밀한 지역여건 분석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나 지역여건 분석, 성과지표 발굴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지역 입주기업 중소기업육성 자금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 기업 유치와 육성에 지원 확대 검토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경기도는 연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자치단체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광역계정 내에서 용역과제 추진 요구됨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지역산업체-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확한 지방소멸 여건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필요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강화

-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필요함
 - 향후 경기도 조례를 통해 중앙부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지원과 부합하면서 경기도만의 차별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 제시 필요함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 주요 사업 선정 추진체계 구축 필요함
 - 경기도 중심의 광역계정을 기준으로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 지원사업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함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및 경기도 추가 자체재원 투입을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사업의 부합성, 시의성, 중복성, 실효성 등 선정기준 제시 필요함

- 향후 우선 지원사업 선정 평가단 구성(안) 등 추진체계 필요함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일률적인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실천과제 분류를 제시하기보다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지원 전략 및 실천과제 제시가 필요함

정책건의

제1장 | 서론 _ 1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5
2. 과거 선행연구	6
1) 지방소멸 연구	6
2)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인구감소지역 연구	9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의 내용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 인구소멸위험 대응 정책 계획 분석 및 고찰 _ 17

1. 중앙-지방의 인구소멸 대응계획 추진 현황	19
1)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	19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6
3) 수도권 정비계획	33
4)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35
2. 국외 인구소멸 대응 정책	37
1) 일본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지방창생정책)	37
2) 프랑스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45
3. 시사점	50

제3장 | 경기도 인구감소 대응 현황 및 인구감소 요인 분석 _ 55

1.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현황 분석	57
2.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62

3.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출입 요인분석	64
1) 가평군	64
2) 연천군	80
4. 현안 및 시사점	96

제4장 |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전략 _ 99

1. SWOT 기반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발전 방향	101
1) 경기도	101
2) 가평군	103
3) 연천군	104
2.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및 목표	107
1)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107
2)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목표 및 실천 과제	110
3. 인구소멸위험 대응 추진 방향	112
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추진 방향	112
2)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역점시책	112
3)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분야별 주요 사업	113
4. 기초단체별 인구소멸위험 대응 분야별 주요 사업	119
1) 가평군 인구감소 대응 사업	119
2) 연천군 인구감소 대응 사업	120
5. 소결	122
1)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 지원 전략 제시	122
2) 효과적인 인구소멸지역 지정 자치단체 정책지원 방안 제시	123

제5장 | 부문별 전략사업(안) _ 125

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전략사업 추진 개요	127
2. 광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주요사업 선정 및 법제화(안)	128
1) 인구소멸위험지역 주요 사업 선정 방안 설정	128
2)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안)	132
3. 기초자치단체 부문별 전략사업(안)	134
1)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134

2)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151
3)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162
4)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172

제6장 | 요약 및 정책제언 _ 189

1. 요약	191
2. 정책제언	194

참고문헌 _ 197

Abstract _ 201

표차례

[표 1-1]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관련 주요 선행연구	8
[표 3-1] 제5차 국토종합계획 기초	19
[표 3-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	27
[표 3-3]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추진계획 기본 방향	34
[표 3-4] 2023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기본 방향	36
[표 3-5] 지방창생정책의 기본원칙	40
[표 3-6] 일본 중앙정부의 지방창생정책 지원수단	42
[표 3-7] 중앙정부의 지방창생정책 지원수단	44
[표 3-8] 지방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추진 사례(도카마치시)	45
[표 3-9] 도시계약의 주요 내용	48
[표 3-10] 도시계약의 주요 내용	49
[표 3-11] 국내 주요 계획의 인구소멸 관련 정책 현황 요약	51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57
[표 2-2]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소멸 관련 현황(2022년 12월 기준)	59
[표 2-3]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61
[표 3-12] 2023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기본 방향	63
[표 2-4]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65
[표 2-5]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66
[표 2-6]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임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68
[표 2-7]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인구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69
[표 2-8]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72
[표 2-9]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73
[표 2-10]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74
[표 2-11] 가평군 주간인구지수	75
[표 2-12]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76
[표 2-13]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77
[표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78
[표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79
[표 2-16]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81

[표 2-17]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82
[표 2-18]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임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84
[표 2-19] 연천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85
[표 2-20]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88
[표 2-21]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89
[표 2-22] 최근 5년간 연천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90
[표 2-23] 연천군 주간인구지수	91
[표 2-24]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92
[표 2-25]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93
[표 2-26] 최근 5년간 연천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94
[표 2-27] 최근 5년간 연천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95
[표 4-1] 경기도 SWOT 분석 결과	102
[표 4-2] 가평군 SWOT 분석 결과	103
[표 4-3] 연천군 SWOT 분석 결과	105
[표 4-4]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14
[표 4-5]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15
[표 4-6]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17
[표 4-7]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1인가구 지원사업)	118
[표 4-8] 경기도 추가 예산 보조를 대상 인구소멸위험 지역 사업 가평군 예	131
[표 4-9] 경기도 추가 예산 보조를 대상 인구소멸위험 지역 사업 연천군 예	132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6
[그림 3-1] 일본의 총인구 추계와 전망	38
[그림 3-2]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 체계	40
[그림 3-3]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추진체계	41
[그림 3-4] 프랑스 수도권 인구 변화	46
[그림 3-5] 프랑스 지역별 인구수 변화	47
[그림 2-1] 경기도 31 시·군 인구소멸 관련 현황(2022년 12월 기준)	58
[그림 2-2]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60
[그림 2-3] 가평군의 인구증감률 현황	64
[그림 2-4]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65
[그림 2-5]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66
[그림 2-6]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임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67
[그림 2-7]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69
[그림 2-8] 가평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70
[그림 2-9]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71
[그림 2-10]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72
[그림 2-11]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73
[그림 2-12] 가평군 주간인구지수	75
[그림 2-13]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76
[그림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77
[그림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78
[그림 2-16]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79
[그림 2-17] 연천군의 인구증감률 현황	80
[그림 2-18]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81
[그림 2-19]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82
[그림 2-20]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임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83
[그림 2-21] 연천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85
[그림 2-22] 연천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86
[그림 2-23]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87

[그림 2-24]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88
[그림 2-25] 최근 5년간 연천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89
[그림 2-26] 연천군 주간인구지수	90
[그림 2-27]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92
[그림 2-28]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93
[그림 2-29] 최근 5년간 연천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94
[그림 2-30] 최근 5년간 연천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95
[그림 4-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108
[그림 4-2]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가평균)	109
[그림 4-3]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연천군)	109
[그림 5-1] 에코캠퍼밸리(Eco Camper Vallley) 조성으로 캠핑인프라 고도화	139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과거 선행연구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①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특성은 OECD 인구감소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인구변화율과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장인수 외, 2021)
 - 2022년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총 등록 인구는 5,143만9천38명으로 전년도(2021년 5,163만8,808명) 대비 -0.39%(199,771명) 감소하였음(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감소는 118,003명)
 - 2022년 12월말 기준, 1인 세대는 총 972만4,256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41.0% 비중)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2인 세대가 전체의 65.2% 비중 차지)
- 지방소멸의 개념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에 따라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함(김현호 외, 2021)²⁾
 - 마스다 히로야(2014)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지방소멸의 상태 및 인과적 주요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음
 - 지방소멸 지역의 인구감소 규모는 지역의 인구 및 산업구조, 지리적 위치, 역사적 맥락,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환경적 요소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제시(김현호 외, 2021)
 - 따라서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상을 개선하도록 노력이 요구됨

1) 행정안전부 주민과 보도자료(2023.01.15.).

2) 지방소멸의 개념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2014)가 최초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렵고,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지방소멸의 진행 단계를 ‘지역의 인구감소’ - ‘공동체 기능의 저하’ -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로 제시함(김현호, 2021; 이상대, 2021).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중점관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2022년6월10일]
-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대응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2021년 10월 18일)
 - 경기도 내 일부지역(가평군, 연천군)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인구감소 심각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향후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여건을 분석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필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수립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함
 -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 및 시행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관련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강화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시행을 통해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원)으로 지원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75%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25%를 각각 배분하도록 함
 - 광역지원계정 배분으로 재원의 90%(22년 1,687.5억원, '23년 2,250억원)는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에 배분함(재원의 10%는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자치단체 11개 배분금액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배분금액 규모가 큰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예, '22년 전남(378억원), 경기(4억원); '23년 전남(505)억원, 경기(5억원) 등)

□ 연구 목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 관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현상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전략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정책수립에 활용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 (연천군, 가평군)
- 시간적 범위 : FY2022년 ~ FY2026년

□ 내용적 범위

○ 연구방향

- 경기도 인구감소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정책발굴을 위한 방향 제시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출입 요인분석을 통한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전략 제시함 (효율적·안정적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과 역할 검토)
-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구안정화 및 지역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 제안함

○ 주요쟁점

-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한시적인 운영 (10년 운영기간 예정) 기간 및 단기적 성과 추구 사업추진 등 제도운영 관련 추가적인 검토 필요함
- 경기도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총 등록인구 수가 매년 증가해 왔으며 타 15개 시·도(서울 제외)와 비교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북부 일부 기초자치단체 연천 및 가평 등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수도권지역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시군의 인구감소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복사업 등 검토 필요함

2) 과거 선행연구

1) 지방소멸 연구

□ 인구감소지역 특성

○ 인구감소 최근 연구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이동을 제시하고 있음(최예술, 2022; 이상림 외, 2018)

-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로 설명할 수 있으나 지역 수준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인구이동을 제시함(최예술, 2022)

-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내 공급 상황이 역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제시함(제현정, 2019)

- 따라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쇠퇴가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인구감소 위험 측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제시함(제현정, 2019; Casterline, 2003; Martinez-Fernandez et al., 2012)

-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연관된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용어보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김현호 외, 2021)

○ 우리나라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는 일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청년 계층의 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와 함께 출산률이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감소 특성은 다른 OECD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인구변화율과 동시에 연평균지수 성장률이 동시에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장인수 외, 2021)

□ 인구감소 주요 지표 특성

○ 합계출산율 지표는 산모의 연령을 가임기 여성으로 표준화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나타내는데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인구 규모 변화와 함께 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출생아 수 변화를 과대 측정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표 설명 시 유의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장인수 외, 2021)

- 높은 합계출산율이 반드시 인구규모 증가를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

인구 규모 변동의 자연적 변화 및 사회적 인구이동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정합계출산율은 미혼 특성을 포함한 결혼 이후의 출산연기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합계출산율 지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장인수 외, 2021; 박경애, 2007; 변용찬 외, 2010)

□ 인구감소지역 인구이동 특성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장인수 외, 2021)
 - 20~30대 청년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이동비율이 다른 직업군 종사자에 비교하여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감소를 주도한 이들은 20~30대 청년층(44.28%),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2년제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 48.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67%), 임금 근로자(83.77%)로 나타남
 -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특성으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인구(예: 중학교 졸업 이하, 56.38%), 50대 이상 연령 인구(63.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6.02%)로 나타남
 - 2000년~2019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연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감소로 총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는 총 9단체로 나타남(최예술, 2022)³⁾
- 따라서 해당 기간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내 산업 분야별 구직 수요에 대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산업구조 및 개인별 구직 분야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함

3) 사회적 감소에 따라 총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9단체)는 강원 양구군·화천군·태백시·철원군, 전남 영암군·화순군, 충북 제천시, 대구 남구·서구.

[표 1-1]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저자	제목	주요내용
이상대 외 (2022)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수도권 가평군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성장형' 접근과 '지역적응형' 사업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장인수 외 (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과 사회경제적 특성 간 연관성, 사회적 불평등과 공간적 불평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 - 인구감소지역의 추진 정책에 필요한 합의 도출
김현호 외 (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한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함
강동우 외 (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연구	-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내외 지역 정책 및 사례 검토함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함
제현정 (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연구	-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 대응 정책에 반영하여 예산, 조례,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박승규·이제연 (20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위한 지정기준을 제시함 - 선정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안별 인구감소지역을 제시하고자 함
안소현 외 (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정주민구 측면에서 체류인구 측면으로 대체하여 제시함 -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최예솔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인구유출 특성 분석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인구유출의 특성에 대해 분석함
류영아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 제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경과 운용체계 분석
박관규·주윤창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비판적 분석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가 지닌 내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 향후 인센티브체계의 도입(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및 국고보조율 제도개선),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방안 제시

2)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인구감소지역 연구

□ 인구감소지역 지정

- 출산을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박승규 외, 2017)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 저출산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기준의 파악이 필요함
-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시함(김현호 외, 2021)
 - 지방소멸을 측정하는 8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종합지수를 산출함
 - 전체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및 제시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 2021년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면한 재정사황을 도출하고 해당 기금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함(류영아, 2021)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배경과 운용체계를 분석하고 유사한 재정지원 제도와 비교를 통해 쟁점사항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 운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논함
- 기금의 운용성과를 매년 분석하므로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 대수가 될 것을 우려함(류영아, 2021)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은 지방정부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보다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하려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제시함(박관규 외, 2022)

□ 인구감소 대응 방향

-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인구감소지수 선정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

및 보완될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장인수 외, 2021)

-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하여 지역별 인구 동태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지역별 인구 연령대의 세분화 및 단계별 변동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변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행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정책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 감소 상황에 뚜렷한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체하는 대응 방안으로서 생활인구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발생 위험 가능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인구감소 대응 관련 법제 현황

- 과거 다양한 법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과 낙후·노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김현호 외(20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과거 법령에 따라 지역별 낙후·노후 문제 개선 또는 사회복지 개선을 통해 인구감소 측면의 일부 개선효과가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위험 해소에는 제한적임
 - 유일하게 최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행·재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국내 인구감소 대응 관련 법제 현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지역 간 자립적 균형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특정지역으로는 성장 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상정하고 관련 정책을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은 지역소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특수상황지역 등에 대한 개념을 확대·적용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는 별도 없음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 저출산 대책으로서 출산 및 보육시책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인 고용과 복지 관련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법률은 인구 문제에 대해 전국적 범위에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지역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 낙후지역 및 거점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투자 선도지구 및 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해당 법률은 개발의 관점에서 낙후지역 해소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소멸이나 청년 유입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농어촌 정비법]

- 농어촌을 대상으로 생산기반, 생활환경, 관광자원 개발 등 종합적인 개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낙후된 농어촌의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관여하지 않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지역의 쇠퇴하는 경쟁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특별 재생지역 등에 관한 다양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법률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개발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인구소멸 위험 해소를 위한 대응은 해당이 없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3.1.1. 시행)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
- 지자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등 강화 (동법 제3장)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국가지원의 원칙, 지방교부세 지원,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설명함(동법 제4장)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보육기반의 확충, 교육기반의 확충, 의료기반의 확충,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문화기반의 확충,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동법 제5장)

국가 및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함 (동법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수립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는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수립됨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규모는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으로 향후 지원 기간을 10년('22년~'31년)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총 12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107개)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및 세종은 제외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지원대상으로 함
 - 지방소멸 대응 목적을 위한 사업발굴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하여(95%) 지원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치단체별 배분은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투자를 위한 배분을 차등적으로 실시함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⁴⁾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며 기초지원계획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FY2022년~FY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은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을 하기로 결정함
 - FY2022년~FY20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22년 48억,

4)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보도자료(2022.8.6.).

'23년 64억) 지급함

* 인구감소지역: 201억원/ 168억원/ 140억원/ 126억원/ 112억원 (5개 등급)

* 관심지역: 53억원/ 42억원/ 35억원/ 32억원/ 28억원 (5개 등급)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현황 분석 실시함
 - 행정안전부 지정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연천, 가평) 인구감소 추세 및 현황
 - 해당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역적 입지, 환경여건 등 특성 관련 시사점 도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함(Bottom-up 방식)
 -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 현황 분석함
 - 인구이동 발생과 관련 지역별 현안 검토함
 - 입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인구소멸 대응 현안 발굴함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지역여건, 환경여건 등 인구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경기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비전과 목표 및 전략사업 제시함
 -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인구소멸 대응 기본전략 제시함
 - 경기도 관내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 대응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 전략 발굴 및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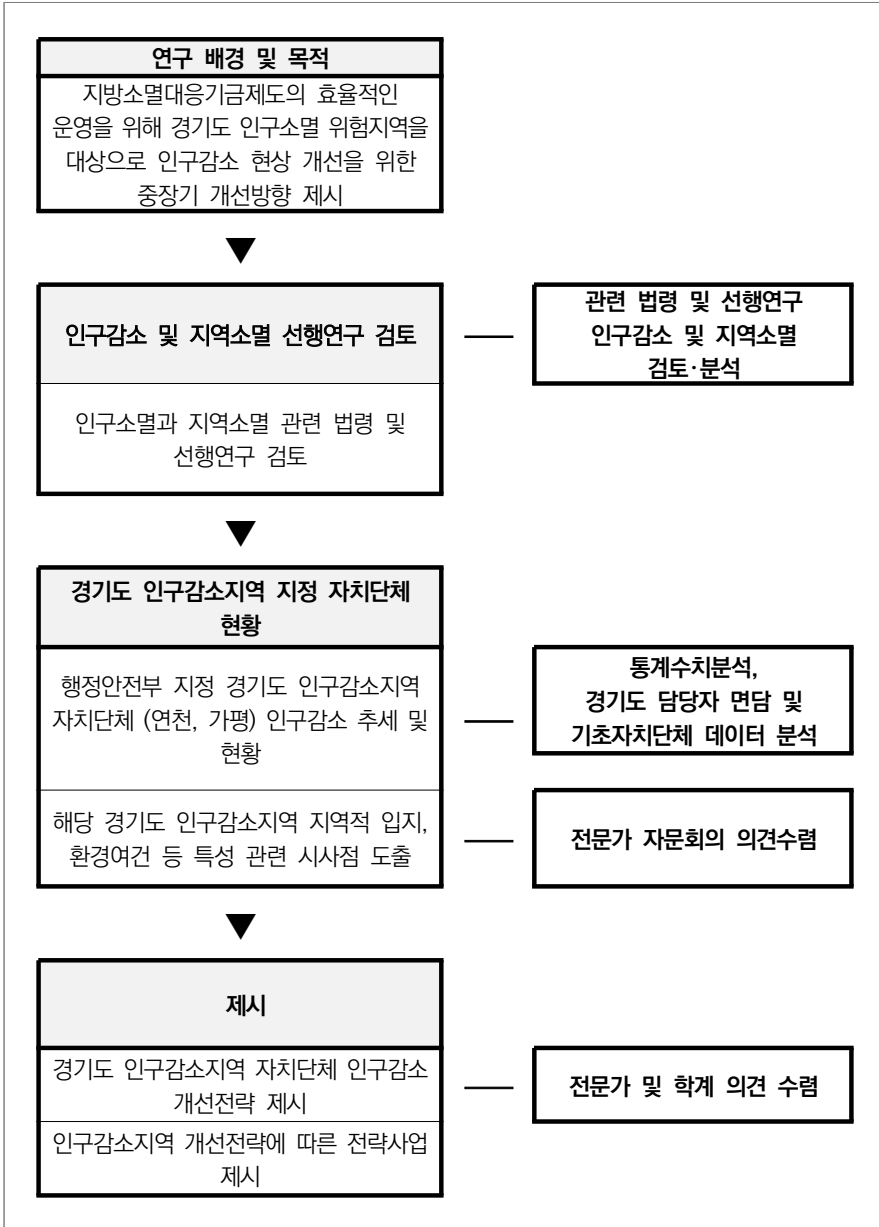
□ 연구방법론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현상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향 제시함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관련 제도 및 법령 분석함
 - 학술논문 등 문헌분석 실시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황 분석함
 - 국·내외 주요 인구감소대응 사례 제시함
 - 전문가 및 관련 실무자 자문을 통한 인구감소 위험 개선전략 도출함

□ 연구추진체계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 관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현상 개선을 위한 증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역여건 및 입지환경 분석 등을 기반으로 경기도 인구감소 개선전략을 제시함
- 경기도 관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대응 전략 및 사업발굴과 계획수립 방향 제시함
 - 지방소멸 대응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전략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범주 제시함
 - 시·군 간 생활권 연계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방안 검토함
-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함
 - 한시적 기금제도 운영방식 등 검토함
 - 유사 중복제도 및 지자체 중복사업 운영 관련 효율성에 대한 검토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02

인구소멸위험 대응 정책 계획 분석 및 고찰

1. 중앙-지방의 인구소멸 대응계획 추진 현황
2. 국외 인구소멸 대응 정책
3. 시사점

제2장 인구소멸위험 대응 정책 계획 분석 및 고찰

① 중앙-지방의 인구소멸 대응계획 추진 현황

1)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⁵⁾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
- 헌법 제120조와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립됨
- 최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에 수립된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임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하에 4대 목표, 6대 전략으로 구성됨

[표 3-1] 제5차 국토종합계획 기초

구분	내용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목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혁신 국토
공간 구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현
발전전략	①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②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③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④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⑤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 국토 조성

5) 해당 내용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요약함.

- 국토종합계획 중 “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라는 단어는 세부 전략 중 두 가지 전략에서 등장하나 문제점 또는 전망 수준에서의 논의
 - ①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전략의 「현황 및 문제점」 중 하나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명시되어 있으나 「주요 정책과제」에는 소멸에 대응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음
 - “지방자치 실시 20여 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하며,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저성장·양극화 등 위기의식이 확대”
 - ③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전략의 「여건 변화 전망」에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을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책과제」에는 소멸에 대응한 전략이 제시되지 못함
 - “시·도별로는 2047년에 이르면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의 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에 노출 전망”
- “인구 소멸”은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수행하는 지역별 발전방안 중 강원도 발전방안에서 제시되고 있음
 -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 지대”라는 비전을 갖고 ① 체류인구 250만명 달성, ② 전국 4% 강원 경제권 실현, ③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지대 육성 등 세가지 기본목표를 수립함
 - 이중 “활력 넘치는 도농 생활공간 환경조성” 전략 중 인구 소멸대응 전략이 제시됨
 - 강원도는 인구소멸에 대응해 농촌과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기초공공서비스를 집적한 스마트 생활공동체타운 모델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있음

(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 실천계획은 2019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관련 소관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
-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게 될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각 소관기관별로 향

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둠

□ 실천계획에서는 “인구 감소” 또는 “소멸” 등에 대응한 논의가 계획에 비해 확대

연번			담당부처
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국토교통부
	①-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①-1-1.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 목표 및 추진 전략

- 인구감소가 지역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기능의 압축(compact)과 연계(network)를 통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인접 시 군을 연계한 생활 인프라 향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거점지역과 주변 중소 도시 및 낙후지역 등을 연계한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도입방안 마련

연번			담당부처
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국토교통부
	①-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 발전	
	①-2-1.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	

○ 목표 및 추진 전략

-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관리를 통한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 수립 운영

연번			담당부처
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국토교통부
	①-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 발전	
	①-2-3.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혁신도시 건설)	

○ 목표 및 추진 전략

- (지역경제 거점화)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산학연 연계 구축 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창출 도모
-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별로 문화 체육 보육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다양한 타 부처 정주시설 건립도 추진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대전 충청권을 계기로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추진
- (상생발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이 함께 협력·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잠재력 극대화

○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

- 클러스터 활성화
 - : 클러스터 분양률 제고를 위해 기업수요에 맞게 부지규모 조정(20.3), 용지대금 납부기간 연장(20.6~) 추진
 - : 입주업체 제한완화,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건축물 건립(20. 下 선도사업 선정) 등 입주촉진 대책도 시행
-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 : 입주기업 시장확보를 위해 계약우대방안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 :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및 미래신산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정주여건 개선
 - :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급(20.7~) 정주인프라(문화, 체육, 복지)와 스타트업·사회적기업 창업공간을 융합한 복합 혁신센터 10개소(혁신도시별 1개소) 건립 추진(18년~21년)
 - : 어린이 교육(체험, 진로, 관계 등)과 가족 휴게공간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

하는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지원('21~'24년)

: 다양한 도시문제(에너지 교통 환경 안전 등) 해결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지원

-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기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내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추진

: 산학연 협력·사업기획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 재단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발전기금조성 의무화 근거 마련('20.12)

-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20.5)

: 대전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역화를 위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20.5), 광주 호남권 및 울산 경남 광역화 협의 법령 개정('22)

: 혁신도시 인근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원도심 발전 지원 및 상생발전의 기반 구축

- 원도심 발전지원

: 혁신도시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 확대,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등 추진

- 상생발전 기반구축

: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발전 협의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구축 등 추진

연번			담당부처
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국토교통부
	①-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 발전	
	①-2-4.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행복도시, 새만금, 기업도시 건설))	

○ 목표 및 추진 전략

- (목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복도시 단계적 건설

- (추진전략)

- : (1단계) 중앙행정기능 이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 : (2단계) 대학/연구 등 자족기능 유치 및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향상
- : (3단계)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 완성

○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

- 국가행정중심도시 기능 강화
 - :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22),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5-1생) 조성(23), 국제기구 추가 유치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스마트 행정도시로 조성
-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 기업 유치 활성화
 - : 대학재정 부담완화, 산학연 융합효과 극대화 등을 통한 국내외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해 공동캠퍼스 본격 조성('24년 개교)
 - :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지원('22 준공예정), 창업 벤처기업, 공공 연구기관 유치 등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추진
- 지역과 상생하는 광역발전 선도모델 구축
 - :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2040 행복 도시권 광역도 시계획 을 공동으로 수립
 - : 상생발전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10개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공동협력 추진

연번			담당부처
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①-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①-3-1.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목표 및 추진 전략

- (목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공간 이용 등 중장기 국토관리 차원 에서 도시-농촌의 균형 발전 및 살기 좋은 농촌 구현
- (추진전략) 도시계획 수준의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 등 제도를 개편·보완 하고 관련 투자도 제도와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

-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인구 변화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이용 강구(국토부 협조)

-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실증연구('20년 9개소) 후, 시범 사업 실시('21)

연번		담당부처
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행정안전부
①-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①-3-7.	접경지역·도서지역·특수상황 지역 발전 지원	

○ 목표 및 추진 전략

- (인구감소지역)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원
: 최소 생활수준: 전국 어디에서나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um) 이상의 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
: 거주감소지역 육성: 청년층 지원 등을 통한 지역활력 및 소득 제고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거주감소지역 육성

○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

- (지원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공모사업 할당제) 인구감소지역에 특별한 배려와 지원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의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는 공모사업 할당제(quota) 도입
- (지역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지원

(3)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상 인구소멸 대응의 특징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토의 종합관리 기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부재

- 특히 인구소멸에 대응한 전략을 반영되고는 있으나 수립 시점의 한계로 인하여 전략의 구체성이 높은 수준은 아님
-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배경과 특징, 국토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계획의 기본 방향에서 인구 소멸은 핵심 과제이자 문제로 등장하지 않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에서는 인구 감소 또는 소멸과 관련된 정책 과제 5개 제시

- 현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 감소가 도시의 쇠퇴로 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 지역을 육성함
 - 광역과 기초간 연계,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배가 시키기 위한 노력 등
-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제고함
 - 지역인재 육성, 채용 확대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 확대, 혁신도시 확대 등
-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 함
 - 지역균형발전 법의 개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도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유출을 최소화 하는 전략 등

□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상 제시되는 인구감소 또는 소멸에 대한 대응전략은 하 드웨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 즉,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대한 물적 지원 및 인프라 확대가 핵심인데, 보다 근본적인 맥락에서의 인구소멸 원인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임
 -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소멸의 다차원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이 지원정책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이 충실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언적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짐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⁶⁾

- 이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

6) 해당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요약함.

운 과제들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임

- 이 계획이 지역소멸 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이기 때문임
- 즉,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또는 소멸은 출산율 하락에 더해 농촌 또는 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따라서 인구유출이 증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농어촌”이라는 비전 체계 하에 3가지 목표, 4개 분야의 전략 16개 세부 전략으로 구성

[표 3-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

구분		내용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획의 형평성 보장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은 수립을 위한 “미래 여건과 전망”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 먼저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귀농어·귀촌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농어촌 인구는 증가 추세이나, 원격 지역은 과소화가 심화되는 양극화 양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을 파악함
 - (근교지역 인구 증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대도시 근교 시·군으로 집중되어 근교 시·군을 중심으로 농어촌 인구 증가
 - (면 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좋은 읍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면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다 최근 완화 추세
- 소멸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지역 확대추세를 고려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음
 - 농어촌의 고령화는 전국적인 추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어촌의 소멸위험도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을 전망에 포함하고 있음
- 국토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인구구조와 지역소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수행됨. 다만, 이 역시 국가적 계획으로서 인구소멸의 발생 원인별 차별화된 대안의 제시 수준은 높지 않음
- 이 계획의 특성상 범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지역개발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 판단됨. 지역단위의 계획으로 이행될 때 더욱 차별화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한편, 인구소멸이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농어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계획은 농어촌 전반에서 인구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점검하고, 국가적인 맥락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하겠음
- 지역소멸에 직접 대응한 세부 전략은 많지 않으나 지역소멸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 주요 정책 들은 타 지역(특히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인구 유출을 감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계획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고도화,

경제여건 개선, 교육여건 및 학생유출 방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들은 모두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의 선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 대안들 모두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은 동의되나 장기적으로 지역소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요인들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물적 지원을 통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①-1.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내용		<p>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1개소)의 시설·장비 등 보강 지원 -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소, 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농어촌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거나 보건지소를 건강증진 기능 중심으로 개편 <p>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 :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 산부인과 폐원 시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 소아·청소년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23개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①-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내용		<p>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수요가 있으나, 보육시설이 미설치 또는 부족한 농어촌 지역 읍·면읍 중심으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 돌봄시설이 없는 읍·면에 3~20인 이하의 소규모 국공립 돌봄시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기존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장난감 도서관 사업과 연계, '찾아가는서비스'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보육서비스 접근성 향상

②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내용	②-1.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p> <p>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별 통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통학 수단 제공 확대 :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선 공유형 통학버스 (에듀버스) 및 통학 택시비 지원 등 확대 <p>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및 도시 거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생 및 저소득층 등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도입 추진과 함께 사회적배려대상자 10%이상 선발 의무화 추진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p>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및 농업인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 소득분위 조정을 통해 저소득 농업인 자녀에 대해 장학금 중점 지원 추진 <p>ICT 기반 학습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의 낮은 접근성을 고려한 ICT 활용 학습활동 지원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프로젝트 활동 등 ICT기반 개별화 수업 학습 지원을 위한 학교 내 무선망(AP) 구축 <p>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원어민 장학생 배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농어촌 초등학교에 원어민 장학생 점진적 배치 확대 <p>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위한 교·강사 확보 및 시설 등 인프라 집중 지원 추진
	②-3.	<p>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p> <p>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농어촌 체육 공간 조성, 농어촌 생활문화센터 조성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내용	③-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p>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농어촌 정주기반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생활SOC 공급으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 읍면 소재지 대상으로 교육·문화·보건·복지 등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여 복합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 - SOC 시설 공급 시 도시와의 거리(원격, 근교 등)에 따른 중심지의 기능 특성과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시급한 서비스 우선 공급 <p>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안전 기반 구축 -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성 및 농업인 영농편의 도모, 침수피해 농경지는 배수장·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예방 <p>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농어촌유입 촉진을 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 <li style="padding-left: 20px;">: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고,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동 복합·설치 <p>ICT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정주기반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술(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농어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및 지능형 ICT 타운조성 	

④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④-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내용		<p>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내실화 및 지속적 확장 <li style="padding-left: 20px;">: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직매장에 체험·교육 복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 조성 <p>지역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거점유통센터, 대도시 거점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와 연계한 전국단위 유통망 구축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망 등 확충
	④-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내용		<p>청년 취업·창업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농어업인의 농어업분야 취업·창업 지원 <li style="padding-left: 20px;">: 농업계 학교에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지원 -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지원 강화 <li style="padding-left: 20px;">: 22년까지 청년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3년간 월 100만원)·임대농지·창업자금 등 종합 지원 <p>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li style="padding-left: 20px;">: 청년층 귀농어 유입 촉진을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을 지속 확대 하여 맞춤형 교육(업종별 이론·현장실습 교육) 지원 -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주민 초청행사, 동아리, 재능기부 등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융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지자체의 지역융화,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3) 수도권 정비계획⁷⁾

-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
- 이 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2020년 6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마련되었고, 이중 경기도 추진계획이 경기도 고시 제2021-119호로 고시
-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방향은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요약됨

7) 해당 내용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요약함.

[표 3-3]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추진계획 기본 방향

목표	기본 방향
집중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및 산업 과밀화 관리를 위한 접경지역, 동북부지역 균형발전 - 공장 총량제, 공업지역 공급계획 등을 통해 제조업 집중 관리 제고 - 경기도형 지역균형 산단 등 개발이익을 북부에 재투자 균형발전 도모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입지 유도 및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등 난개발 해소 - 공공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철도망 확충, 철도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 등 도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 실현 - 미세먼지 오염 배출원 체계적 관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대기질·수질·녹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및 개선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반도체 신규 조성 및 수원·화성·평택·이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등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연계한 반도체벨트 구축 - 일자리·주거의 복합화 및 지역 맞춤형 첨단산업용지 공급, 산업단지의 재생 구조고도화를 통한 거점 도시 산업혁신 여건 신장
한반도 평화경제 체계 구축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접경지역 평화경제 벨트 형성 -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발굴 - 민족화해·평화의 상징적 공간 DMZ 체계적 활용 추진

□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균형발전과 과밀억제 기초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특화된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권역은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나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녹지와 수질 등 보전을 위한 자연 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됨
- 경기도는 성장관리권역 내 북부와 남부지역의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 권역 관리와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배정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함
 - 접경지역의 인구구조, 재정자립도, 지역경제를 고려 권역 신설 건의 등 차이 해소 방안 추진
 - 경기 남부에 배정하는 공업지역 공급물량이 전체의 70% 범위 내 공급하며, 균형

발전을 고려 점진적으로 북부 배정 확대 추진

- 종합하면 수도권 정비계획상 균형발전은 산업과 인구 등 물적 중심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소멸 등의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예상함
- 수도권 정비계획상 지역소멸에 대한 검토나 논의 등이 부재한 이유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 작고, 계획 수립시기의 특징 때문임
 -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가평과 연천이 포함되었고,
 - 2022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등 5개 자치단체가 해당함
- 그러나 이는 모두 제4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발표된 사안으로 이를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4)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⁸⁾

- 이 계획은 「저출생·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매년 수립되는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 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이 계획이 갖는 함의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 인구 소멸 및 인구 감소가 출생과 관련되어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임
 - 중앙단위의 계획이 주로 인구 유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출산의 상향을 통해 지역별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2023년 경기도 정책 추진 방향은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청년 등 경제활동 인구 확충, 인구고조 변화에 적응함을 목적으로 함
- 정책 추진 방향은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역점시책으로는 ①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②어르신 안전하우징 ③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임

8) 해당 내용은 2023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요약함.

[표 3-4] 2023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기본 방향

목표	기본 방향
더 나은 출산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임신·출산관련 건강관리 - 안정적인 보육과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성 확대 -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더 고른 기회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보장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성장 지원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창업 및 고용 안정 지원
더 공감하는 인구 감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합리적 인구기치관 형성과 시군 공무원 인구역량 강화 -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일상속 성평등 문화확산 및 정책 강화
더 안정된 인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농촌지역의 임신부, 출산 여성농업인, 영유아, 어린이까지 단계별 지원 - 어르신들의 일자리, 주거(안전 하우징), 상담, 무료급식 등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앞서 살펴본 3개 계획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한 구체적인 정책 등을 포함
 - 인구소멸이 발생하는 원인 중 대표적 요인인 저출생, 인구이동 등의 요건을 고려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경기도 본청의 자체사업과 31개 시·군의 사업으로 구분됨.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처한 저출생,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차별화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교육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 구체성과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기도는 시행계획의 실천을 위해 4개 분야 24개 세부 전략을 제시
 - 4개 분야는 ①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임

2 국외 인구소멸 대응 정책

□ 인구소멸 대응 벤치마킹 사례

○ 일본 사례 선정 의의

-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지방창생정책 등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처가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상황에 대응하고자 노력함 (동경권 인구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육아 등에 희망을 실현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창생과제를 발굴)
- 현행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음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결혼·출산·육아 지원, 다양한 인재의 활약, 새로운 동력 확보 등을 추구함)

○ 프랑스 사례 선정 의의

- 유럽국가 중 대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육아여건 개선 정책 등을 추진함
-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유사하게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공당국이 파트너십 형태의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계약에 따라 지역사회의 결속, 도시재생과 삶의 틀, 경제적 발전과 고용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

1) 일본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지방창생정책)

□ 지방소멸대응 정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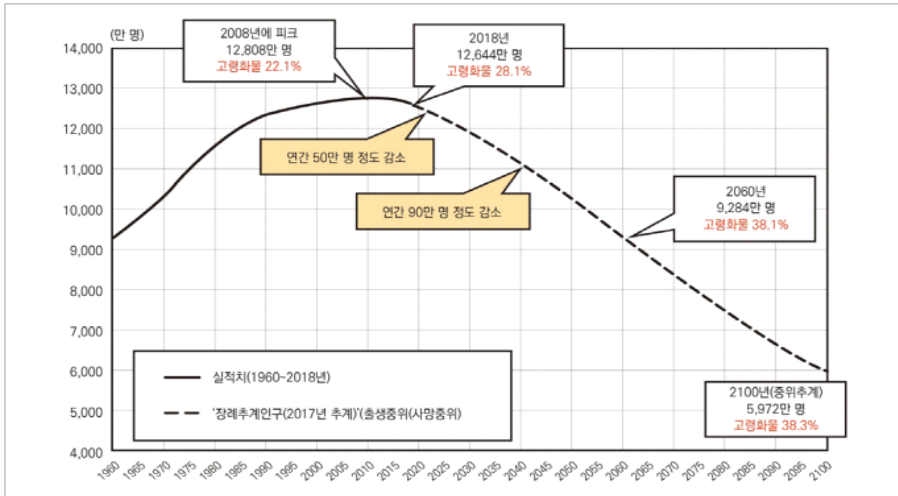
○ 장기간 도쿄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대도시 인구 집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이경은, 2022)

- 1990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져 출산율 저하에 충격을 받게 되었던 '1.57 쇼크'⁹⁾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00년대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지역경제 악화가 심화되자 대도시 중심의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심화됨

9) 일본에서는 병오년이 '히노에우마'로 읽히는데 병오년이던 1666년에 불이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여인이 동경 시가지에 불을 질렀고, 이 방화사건을 계기로 병오년생 여자가 남편의 명을 단축하게 한다거나 남편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해당 연도의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1.57쇼크는 1990년대 출산율이 히노에우마 특수 요인을 반영한 1.58 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대(김현호 외, 2021).

- 일본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인구감소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

[그림 3-1] 일본의 총인구 추계와 전망



자료: 차미숙(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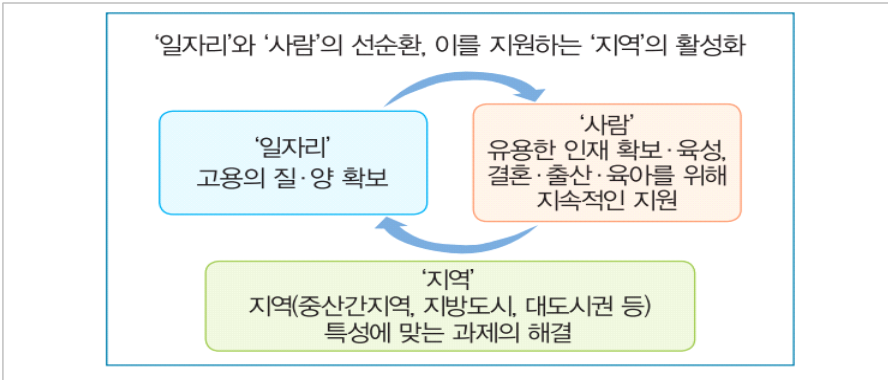
- 일본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창생정책’ 이전의 지역개발 정책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김순은, 2017)
 - 각 부처의 정책들이 부처 칸막이로 인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지 못해 정책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음
 - 정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하향식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들이 일률·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함
 - 지역 간 균등배분에 보다 초점을 두어 정책성과 및 효과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지역 간 나눠먹기식의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지 못함
 -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지역의 자생력 확보에 한계를 나타냄
- 대표적으로 1988년과 1989년에 우리나라의 지방소멸대응정책과 비슷한 ‘고향창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김순은, 2017)
 - 고향창생사업은 시·정·촌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1억엔의 교부금을 지원하고 시·정·촌은 각 지역에 필요한 지역진흥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교부금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의 정비, 학회·예술회의 등의 행사지원, 도로·교량·문화관·회의장·기념탑 등 주요 시설 설치 등 다양하게 사용함
- 2013년 아베 신조 총리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각에 주문하였고(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이후 2014년 지자체 상당수가 소멸할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함
 - 아베 내각은 당시 9년간 이어지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2014년 출생률: 1.42), 동경 중심의 인구 증가, 대도시 중심의 경기 호전과 이로 인한 지역 간 지역차 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행정자치부, 2017; 김순은, 2017 재인용)
 -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3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지방경제 대책을 지시한 이후 내각부에서 지역경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의 심각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 유지의 한계, 아베노믹스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대두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 일본생산성본부 산하 일본창생회의·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1,727개 시·정·촌 중 896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는 일본에서 지방소멸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됨(김현호 외, 2021)

□ 일본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추진현황

-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도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별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활력 있는 미래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함
 - ‘창생’이란 ‘새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지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하였음(김현호 외, 2021)
- 지방창생정책은 ‘마을-사람-일자리’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함. 즉, 사람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김순은, 2017; 차미숙, 2020; 김현호 외, 2021 등)
 - 동경권 인구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육아 등에 희망을 실현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창생과제를 발굴(김현호 외, 2021)
 -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결혼·출산·육아 지원, 다양한 인재의 활약, 새로운 동력 확보 등을 추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그림 3-2]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 체계



자료: 차미숙(2020).

-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상기의 목적 외에도 기본원칙으로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 중시라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정책을 추진함(김순은, 2017)

[표 3-5] 지방창생정책의 기본원칙

구분	내용
자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조, 지방·기업·개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 • 지역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재양성에 관련된 시책을 우선과제로 선정
장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시책 강구 • 중앙정부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며, 지방에 희망을 주는 시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추진 • 중앙정부의 칸막이식 정책 지양,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각 지역의 실정과 장래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시책의 우선적인 추진 지원
직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시책의 우선 지원 • 사람의 이전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우선 지원
결과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어야 함 • 지향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함

자료: 김순은(2017) 재구성.

- 지방창생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하 창생법)을 제정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이하 창생본부)를 설치함(김현호 외, 2021)
 - 2014년 제정된 창생법은 창생정책의 이념과 국가책무, 지방창생본부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이경은, 2022)
 - 특히 창생법은 국가종합전략 및 지방 종합전략 수립 등을 규정하여 창생정책을 국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지자체는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김현호 외, 2021)
 - 또한 체계적인 창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종합전략의 입안, 창생 정책의 입안 및 조정 등을 담당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14년부터 창생본부를 내각에 설치함
 - 창생본부에는 거의 모든 대신이 본부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되며, 창생본부 외에 내방관방에는 2016년부터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을 설치하여 지방의 종합전략 수립 지원,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지역재생, 특구 등 지역활성화 관련 업무를 담당함. 이외의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 대상으로 지방창생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김현호 외, 2021)
 -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조직체계와 유사함(이경은, 2022)

[그림 3-3]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추진체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김현호 외(2021) 재인용.

- 지방창생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정보, 인적자원, 재정의 3가지 지원수단을 구축함(김순은, 2017)
 - 정보지원체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제공함
 - 지방정부의 창생정책 추진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제공과 육성 지원함
 -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의 재원 제공 및 세제혜택 제공함

[표 3-6] 일본 중앙정부의 지방창생정책 지원수단

구분	내용
정보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분석체계(Regional Economy Analyzing System RESAS)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역경제분석체계는 각 도·도·부·현은 물론 시·정·촌별 산업지도, 지역경제순환지도, 농림수산업지도, 관광지도, 인구지도, 소비지도, 지방정부 간 비교자료 등을 분석하여 상시 자료 제공
인적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지방창생대학, 전문인재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창생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인력 공급 및 육성 지원 •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는 중앙정부, 대학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인재를 공모하여 필요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 • 지방창생대학은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 • 전문인재사업은 지역기업에 대해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재정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을 통한 창생정책 추진 재원 보조 • 교부금 외에 세제지원을 통해 감면, 면세 등 제공

자료: 김순은(2017) 재구성.

-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창생교부금 등을 활용한 지방창생예산을 수립(2021년 기준 1조 2,357억엔)하여 창생정책을 추진(류영아, 2022)
 -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성·청 등의 내각이 정책별로 예산을 지원, 예를 들어 내각부는 기업인재 촉진사업, 지역일꾼 전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 설문조사 등을 지원함
 -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하도록 함
 - 한편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지역창생추진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지방창생정책을 직

접적으로 지원함. 창생추진교부금(2021년 기준 1,000억엔)은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사용되나 우리나라와 달리 한시적 기금이 아님

- 일본은 중앙정부가 지방창생정책의 기본 계획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응하여 지방에서 창생정책을 추진함. 중앙정부의 창생 종합전략은 제1기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과 제2기 창생종합전략(2020~2024년)으로 구분됨
 - 제1기 창생종합전략은 활력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위해 1억 명의 인구확보와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 지방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 창출, 청년층의 결혼·육아의 희망 지속,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4개의 목표를 제시함(차미숙, 2020)
 - 제2기 창생종합전략은 1기 창생전략의 목표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도쿄 일극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지방이주·정착 촉진과 지방과의 연결성 강화, 인구감소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Society 5.0 및 SGD를 정책목표로 추가함(차미숙, 2020)

[표 3-7] 중앙정부의 지방창생정책 지원수단

장기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도 활력있는 지역사회 실현 • 도교권 일극 집주의 시정 	
기본목표	주요 시책	횡단목표
1. 돈 버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원·산업을 활용해 지역경쟁력 강화 • 전문 인재의 확보·육성 •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취업환경과 담당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추진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활약하는 지방창생 추진 •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추진
2. 지방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으로 인구 흐름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이주 추진 • 청년의 교육·취업에 의한 지방정착 추진 •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 • 지방으로 자금의 흐름 창출·확대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육아 지원 • 일·육아 양립 •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한다. • 지역 Society 5.0 • 지역 창생 SDGs 실현 등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생활을 위한 마을의 기능 충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지역 형성 • 안심하고 생활이 가능한 마을 만들기 	
▲		
인적지원	재정지원	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 지방창생공세르주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창생교부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분석시스템

자료: 차미숙(2020) 재구성.

- 창생종합전략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점포·유희농지 및 오래된 민가 등의 유희 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생산성 향상, 관광지역 개발, 지역대학 진흥, 지역기업에서의 동경권 학생들의 인턴십 실시, 지역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앙부처의 위성사무소 운영, 콤팩트 시티 형성, 교통 네트워크 개선, 생활서비스 기능 집약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함(류영아, 2020)

[표 3-8] 지방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추진 사례(도카마치시)

기본목표	기본방향	시책
1. 안정적인 일자리 증대, 인재 육성 및 활력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육성·확보·지원 •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모노 산업 계승 • 지역산업 진흥
	신규 창업·신분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창업자 육성·지원 • 신분야 진출 지원
2. 지역의 매력을 살려 선택받는 마을을 지향	지역의 기반이 되는 인재·조직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이 되는 조직과의 협동 추진 • 고등학교 등에서 직업교육 연계
	도시지역에서의 이주·정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세대의 UJ턴 촉진 • 지역부흥협력대의 활용 추진 및 정주촉진
	향토애의 육성·도카마치 팬덤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을 사랑하는 지역교육 총실 •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 고향에 대한 기부·투자 추진
3. 결혼·출산·육아 환경의 총실,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남녀의 만남과 결혼 지원의 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만남과 결혼 후원의 환경 조성
	출산·육아 환경의 정비·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서비스 및 육아 환경 총실 • 출산·육아 지원제도 총실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 고령자나 장애인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새로운 시대의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를 지표로 한 지방창생 •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응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 대책 추진 •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추진

자료: 김현호 외(2021)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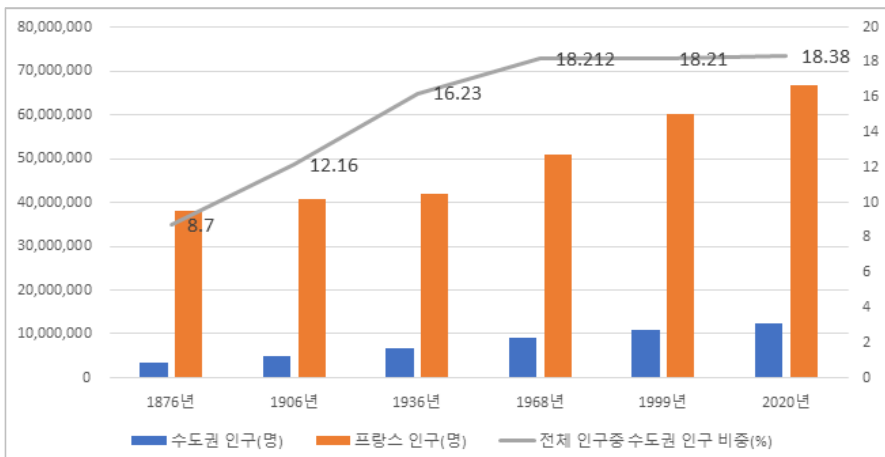
2) 프랑스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 지방소멸대응 정책 배경

-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파리로의 인구 과밀화로 인해 지역균형정책을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함(이상대 외, 2021)

-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효율적인 경제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도가 높으며, 선진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김은경 외, 2022)
 - 1963년에는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을 설치하여 지역정책과 지역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1971년에는 중소도시 육성정책 등을 추진,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함(이상대 외, 2021)
- 장기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특정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속됨(김수진, 2021)
- 수도권인 파리를 포함한 ‘일드프랑스(Île-de-France)’와 나머지 비 수도권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만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속도는 둔화됨(김은경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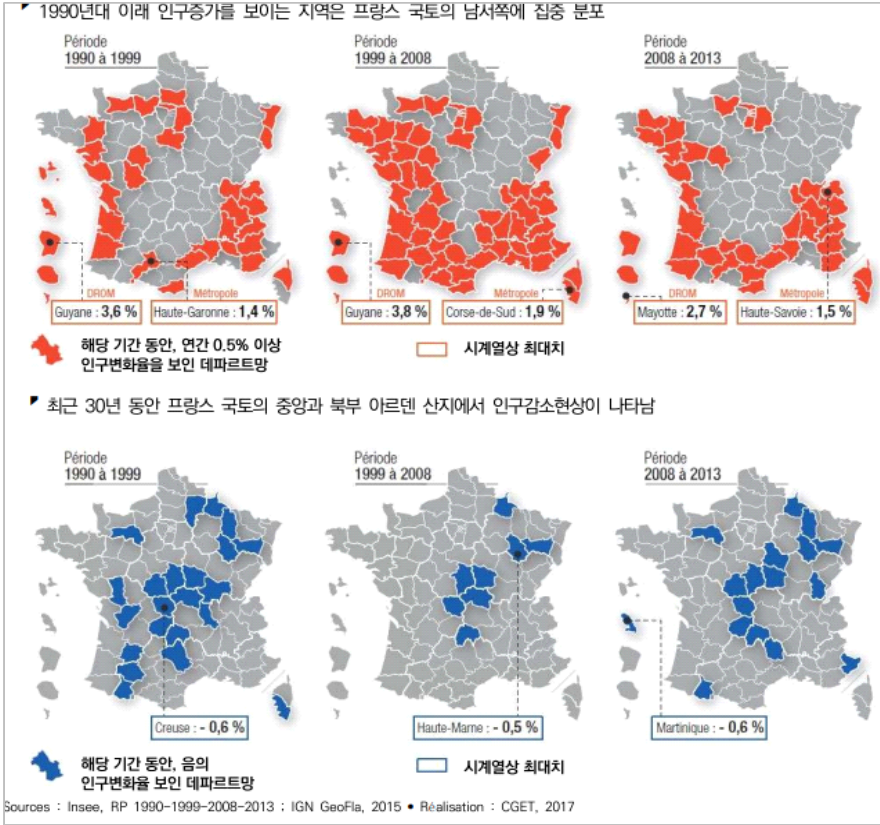
[그림 3-4] 프랑스 수도권 인구 변화



자료: INSEE(2012); 김은경 외(2022) 재구성.

- 남부지역의 인구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동부지역의 인구는 교육환경과 일자리 격차, 고령화 등으로 감소경향이 지속됨(김수진, 2021)
- 일부 지역의 인구감소 경향은 주로 북동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에서 유발되나 지역별 인구감소 경향은 도시마다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필요함(김수진, 2021)

[그림 3-5] 프랑스 지역별 인구수 변화



자료: 김수진(2023) 발췌 및 인용.

- 2000년대 들어 프랑스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제로섬 방식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제속에서의 지역간 경쟁적 협력을 강조하고,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는 국토 전체의 균형개발과 영토의 통합, 그리고 지역간 협력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함(김은경, 2022)

□ 지방소멸대응 정책 추진 현황¹⁰⁾

- 프랑스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10) 김은경 외(2022) 및 김수진(2021)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지원을 하는 정책을 추진함(김은경 외, 2022)

- 2014년 「도시 및 도시결속을 위한 프로그램화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어려운 지자체에 정책 수단을 집중하는 기조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250유로 미만인 지역을 낙후지역(가장 낙후된 구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수단을 집중하고 있고 전체 859개 코민 내 1,514개 구역이 지정됨
- 낙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공당국이 파트너십 형태의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계약에 따라 지역사회의 결속, 도시재생과 삶의 틀, 경제적 발전과 고용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2020년 기준 435개 계약 운영)

[표 3-9] 도시계약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회적 결속	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협회 및 사회·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
도시재생·삶의 틀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 및 건설, 공동소유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접근, 단체시설의 실현과 구역의 매력도 증가 등
경제발전 및 고용	고용 관련 공공서비스 정책 수단 활용

자료: 김은경 외(2022) 재구성.

- 2020년 ‘농촌성부처공동위원회’가 모호한 농촌공간에 대해 법적 정의를 새롭게 내리기 전까지 농촌은 도시가 아닌 공간으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체계화된 지역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음(김수진, 2021)
-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코핀 지역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인구밀도가 중간/매개 지역,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 2018년 ‘국토통합및지자체연대부’는 인구 희박, 취약지역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취약지구, 지역도시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함(김수진, 2021)
- 농촌지역보조금(DETR)은 2011년에 설치되었으며 소규모 코핀 및 인구가 가장 희박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함(약 9.63억 유로, 2018년 기준)
- 취약지구보조금(DPV)은 2015년에 도시발전보조금에서 취약지구보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코핀에 직접 전달하여 사용함(1.49억 유로, 2018년 기준)
- 지역투자지원보조금(DSIL)은 2016년 설치되었으며,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발전사업(도심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며 해당 보조금은 레지옹

- 에서 코민 등의 신청내용을 평가하여 지원을 결정함(6.09억 유로, 2018년 기준)
-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함

[표 3-10] 도시계약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규모 (2018년 기준)
농촌지역 보조금 (DE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설치, 소규모 코민 및 인구가 매우 적은 EPCI 지원을 위한 보조금 • 공공서비스 유지 및 개선 등에 사(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 정비,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시설의 인터넷 장비 개선 등) 	9.36억 유로
취약지구 보조금 (DP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도시발전보조금이 변경 • 도시재생청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인구가 많은 코민 및 취약지구에 지원 	1.49억 유로
지역투자지원 보조금 (DS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설치, 국가우선순위에 놓인 사업 추진에 활용(에너지 전환, 교통, 도심활성화 사업 등) • 레지옹이 평가를 통해 교부 	6.09억 유로

자료: 김수진(2021) 재구성.

- 프랑스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통합정책, 농촌활성화 지역 지원사업, 취약지구, 도심활성화 사업 등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 등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급함(김수진, 2021)
 -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국토통합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투자지원보조금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연계하여 사업 추진함
 - 농촌활성화지역(ZRR)은 인구가 가장 희박하고 인구감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으로 농촌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면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지방세 감면, 사회보장기금 및 가족수당에 대한 고용자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 농촌지역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은 농촌활성화지역 여부에 연계하여 교부함

3 시사점

□ 주요 관련 법령 사례 분석 종합

- 계획수립의 목적과 작성 부서의 기능·특성이 반영되어 인구소멸에 대응한 정책들이 마련됨
-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이슈가 주요 문제점 및 전망으로 제기되나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음
 - 다만, 지역계획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계획에 인구감소 대응 전략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화 수준은 낮음
-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에서는 물적 기반의 균형발전과 인구의 유입 등에 초점을 두고 전략이 계획됨
 -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권역별 거점 구역의 설계,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 경제 및 기업의 유치, 함께 잘 사는 균형 된 지역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마련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년 기본 계획에서는 물적 기반과 삶의 질 향상 등 인구의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 계획됨
 - 우리나라에서 지역소멸 또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농어촌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도시와 삶의 질이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들이 수립됨
 - 대표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 보육·육아, 교육, 소득 상향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됨
 -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농어촌 환경을 마련하는 전략도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촉진, 정주기반 개선 등의 정책들이 수립됨
- 경기도가 수립한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경기도 남부 대비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관리 권역 마련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이 인구 감소 및 소멸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과, 경기도내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의 수가 많지 않고, 당시 계획 수립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의 논의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지는 않음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인구소멸의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인 출산률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별로 사업을 도출해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인구교육운영, 한방난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9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유인의 범주를 교육 및 학생지원 수준까지 상향시키고 있음
- 31개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들을 발굴해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산 장려 및 축하금의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검진 지원, 인구교육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표 3-11] 국내 주요 계획의 인구소멸 관련 정책 현황 요약

계획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정책
국토종합	계획	○ 지역별 발전방안 중 “강원도 발전 방안” - 농촌과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 집적 공공재 공급
	실천계획	○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 수도권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 ○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접경지역·도서지역·특수상황 지역 발전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년 기본계획		○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 성장관리권역 내 북부와 남부지역의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 권역 관리와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배정하여 균형 발

계획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정책
경기도 저출생· 고령사회 시행계획	도 분청	○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한방난임 지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인구교육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31개 시·군	(수원시)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확산 (용인시) 다자녀가구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남양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인구정책 사업운영 (안산시)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안양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출생축하용품'아이좋아 행복꾸러미'지원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운영 (파주시) 아이들 중심의 맘(MOM) 편한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 (의정부) 인구정책 인식개선 홍보,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광명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군포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오산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양주시) 다자녀가정 할인지원 확대(다둥e카드), 출산축하금 지원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출산전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 선물 배부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과천시) 출산키트 제공 및 출산지원 확대 (가평군) 임신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신혼부부 임신전 검사비 지원사업

□ 인구소멸에 대응한 정책의 구체성에 대한 특징

- 국토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차이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한 사업의 구체성에 있는데, 상급 계획에서 실행계획으로 변환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소멸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수립되고 있음

- 그러나 국토종합계획과 실행계획 모두는 직접적으로 인구 감소나 소멸에 대응하기 보다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음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인구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책들이 설계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년 기본계획은 인구 감소가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냄
 - 전반적으로 국토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비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어촌 전반에 대한 대응 계획으로 특정 지역 또는 권역에서의 인구감소 및 소멸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수준까지 정교 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짐. 이는 상급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에 근거해 경기도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기 때문임
 - 또한 도 본청의 정책보다는 31개 시·군의 정책이 산모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유인이 제공되고 있음
- 즉 국내 계획은 실천계획을 구체화 하거나 또는 자치단체(광역-기초) 수준에서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음

□ 인구감소 또는 소멸에 대응한 재정투입의 특징과 관리 방안

- 국가 재정은 반대 급부를 고려해 지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짐
 -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발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 또는 지역으로의 재정 지출이 문제가 되지는 않음. 그러나 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검토될 필요 있음
- 국토종합계획은 총 116조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년 계획 등에서는 총 51.5조원(지방지 10.3조원) 등이 투입 예정임
 - 인구감소 또는 지역 소멸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대부분이 지원 정책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의 평가와 성과 평가가 필요할 것임
- 경기도 저출생 고령사회 시행계획에서는 2023년에만 총 12조 2,854억원(도비 1.5조원, 시·군비 0.6조원)이 투입될 예정임. 경기도 및 시·군 재정 여건상 적은 금액은 아님

- 특히 시·군의 경우 출산을 상향할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에 갖고 있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 특징상 한번 지출되면 쉽게 지출을 축소하거나 일몰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재정 투입에 따른 면밀한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국외 인구감소 대응 정책 시사점

- 일본과 프랑스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사례에서 해당 국가들의 인구감소 대응 및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발굴 및 노력에 기반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창생종합전략은 제1기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과 제2기 창생종합전략(2020~2024년)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에 맞춘 전략 정책 목표가 수정되어 이에 대한 시사점이 나타남
 - 제1기 창생종합전략은 활력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위해 20160년 1억 명의 인구확보와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 지방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 창출, 청년층의 결혼·육아의 희망 지속,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간 연계 강화 등 4개의 목표를 제시함
 - 제2기 창생종합전략은 1기 창생전략의 목표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도쿄일극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지방이주·정착 촉진과 지방과의 연결성 강화, 인구감소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적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이 나타남
- 프랑스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을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균형발전 추진이 시사점으로 나타남
 - 2014년 「도시 및 도시결속을 위한 프로그램화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어려운 지자체에 정책 수단 집중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낙후지역(가장 낙후된 구역)을 지정하여 정책수단을 집중하고 있고 전체 859개 코민 내 1,514개 구역이 지정됨
 - 낙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공당국이 파트너십 형태의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계약에 따라 지역사회의 결속, 도시재생과 삶의 틀, 경제적 발전과 고용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2020년 기준 435개 계약 운영)
 -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코뮌 지역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인구밀도가 중간/매개 지역,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3

경기도 인구감소 대응 현황 및 인구감소 요인 분석

1.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현황 분석
2.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3.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출입 요인분석
4. 현안 및 시사점

제3장 경기도 인구감소 대응 현황 및 인구감소 요인 분석

1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현황 분석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정

-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고시함¹¹⁾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제2021-66호).

[표 2-2]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소멸 관련 현황(2022년 12월 기준)

지역명	20~39세 여성 (명)	65세 이상 인구 (명)	가임여성인구 비율(%)	노령화지수 (%)	인구증감률 (%)
수원시	170,937	147,122	14.35	102.36	6.31
성남시	124,256	144,800	13.47	138.54	-5.73
의정부시	60,331	77,555	13.01	150.49	8.06
안양시	72,849	84,390	13.29	138.34	-10.33
부천시	103,244	125,752	13.07	155.35	-9.17
광명시	35,559	45,128	12.35	130.48	-19.02
평택시	73,362	73,372	12.68	93.82	33.21
동두천시	9,276	20,464	10.13	217.93	-5.79
안산시	84,762	81,511	13.21	124.05	-10.27
고양시	140,536	163,080	13.05	131.71	10.99
과천시	10,632	11,140	13.61	99.00	9.95
구리시	23,861	29,173	12.64	137.91	-1.89
남양주시	84,969	115,165	11.52	114.49	22.99
오산시	29,726	25,237	12.93	75.81	14.76
시흥시	65,374	54,756	12.75	76.43	28.39
군포시	34,280	40,752	12.88	139.59	-7.19
의왕시	20,896	24,954	13.04	133.12	3.53
하남시	44,758	44,618	13.73	90.75	122.92
용인시	132,400	157,226	12.32	105.27	17.36
파주시	60,229	73,543	12.16	105.78	25.65
이천시	26,718	34,750	12.00	125.63	8.69
안성시	19,935	36,284	10.56	172.00	3.98
김포시	60,422	66,858	12.48	85.11	68.48
화성시	121,073	89,334	13.29	57.46	73.33
광주시	46,426	59,448	11.86	119.46	42.01
양주시	26,663	41,886	10.95	130.33	21.53
포천시	13,540	32,863	9.23	257.65	-6.89
여주시	10,413	27,269	9.20	243.76	3.29
연천군	3,387	12,319	8.05	332.14	-7.76
가평군	4,913	17,841	7.91	352.73	2.23
양평군	9,496	34,217	7.76	293.18	19.70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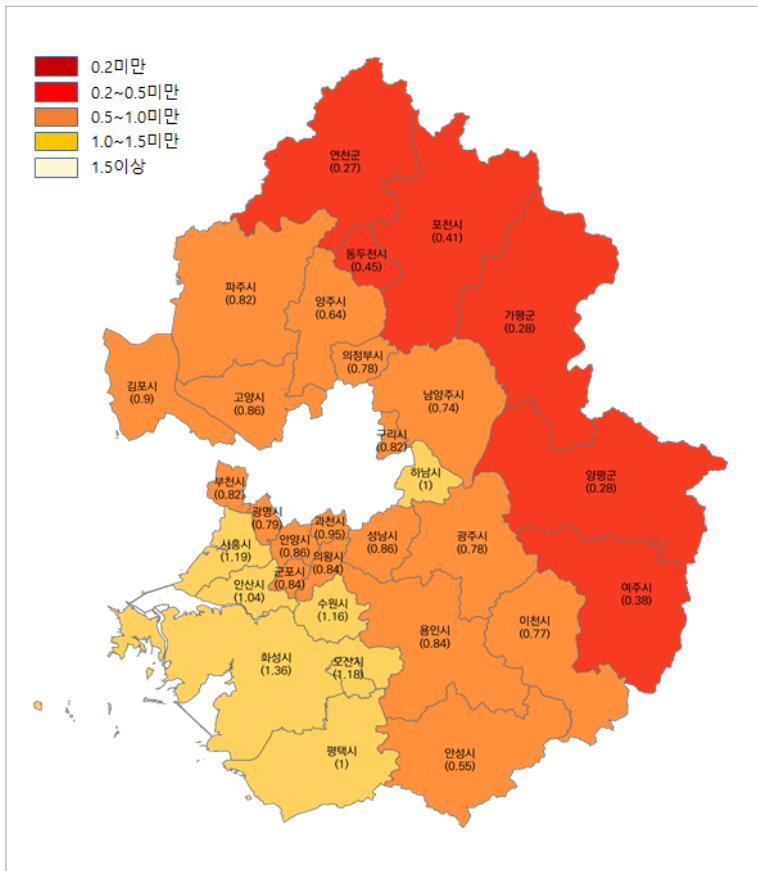
인구증감률은 2011년 대비 2022년 인구증감률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 경기도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연천군이 0.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며 그다음으로 양평군 0.28, 가평군 0.28, 여주시 0.38, 포천시 0.41, 동두천시 0.45 순임
- 이 지역은 경기도 북부 지역들이며 인구소멸위험진입 단계라 할 수 있음
- 반면 화성시는 1.36으로 인구소멸위험이 낮으며 시흥시 1.19, 오산시 1.18, 수원시 1.16, 안산시 1.04, 평택시 1.00, 하남시 1.00으로 소멸위험 보통 단계임
-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지역이 소멸위험 진입 단계, 17개 지역이 소멸위험 주의 단계로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2]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표 2-3]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지역명	인구소멸위험지수	단계
연천군	0.27	소멸위험 진입
양평군	0.28	
가평군	0.28	
여주시	0.38	
포천시	0.41	
동두천시	0.45	
안성시	0.55	소멸위험 주의
양주시	0.64	
남양주시	0.74	
이천시	0.77	
의정부시	0.78	
광주시	0.78	
광명시	0.79	
파주시	0.82	
부천시	0.82	
구리시	0.82	
의왕시	0.84	
용인시	0.84	
군포시	0.84	
안양시	0.86	
성남시	0.86	
고양시	0.86	
김포시	0.90	소멸위험 보통
과천시	0.95	
하남시	1.00	
평택시	1.00	
안산시	1.04	
수원시	1.16	
오산시	1.18	
시흥시	1.19	
화성시	1.36	

주: 인구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수 / 65세 이상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¹²⁾

- 이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매년 수립되는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 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이 계획이 갖는 함의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 인구 소멸 및 인구 감소가 출생과 관련되어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임
 - 중앙단위의 계획이 주로 인구 유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출산의 상향을 통해 지역별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2023년 경기도 정책 추진 방향은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청년 등 경제활동 인구 확충, 인구고조 변화에 적응함을 목적으로 함
- 정책 추진 방향은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역점시책으로는 ①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②어르신 안전하우징 ③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임

12) 해당 내용은 2023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요약함.

[표 3-12] 2023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기본 방향

목표	기본 방향
더 나은 출산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임신·출산관련 건강관리 - 안정적인 보육과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성 확대 -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보장
더 고른 기회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성장 지원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창업 및 고용 안정 지원
더 공감하는 인구 감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합리적 인구가치관 형성과 시군 공무원 인구역량 강화 -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일상속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 강화
더 안정된 인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농촌지역의 임신부, 출산 여성농업인, 영유아, 어린이까지 단계별 지원 - 어르신 일자리, 주거(안전 하우스), 상담, 무료급식 등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앞서 살펴본 3개 계획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한 구체적인 정책 등을 포함

- 인구소멸이 발생하는 원인 중 대표적 요인인 저출생, 인구이동 등의 요건을 고려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경기도 본청의 자체사업과 31개 시·군의 사업으로 구분됨.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처한 저출생,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차별화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교육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 구체성과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기도는 시행계획의 실천을 위해 4개 분야 24개 세부 전략을 제시

- 4개 분야는 ①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임

3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출입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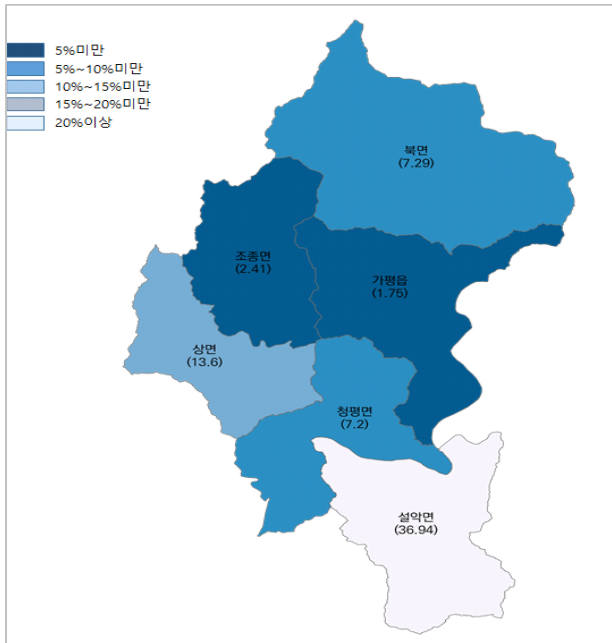
1) 가평군

(1) 가평군의 인구변화와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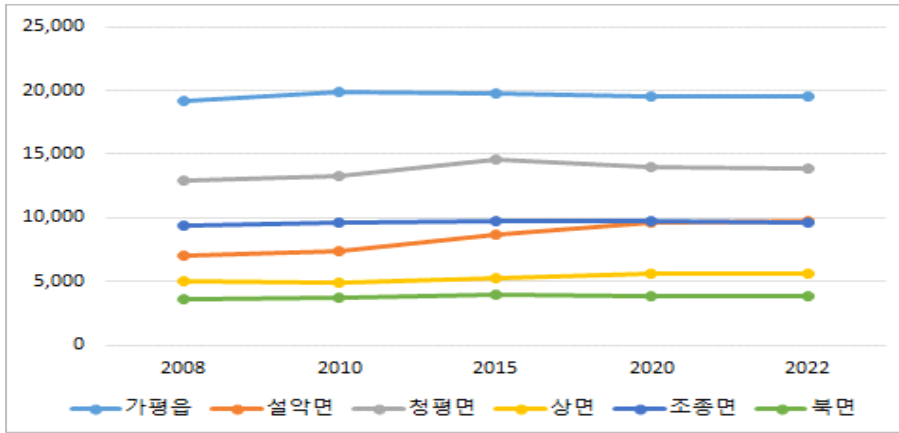
□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가평군의 읍·면·동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없음
 - 설악면이 36.94%로 2008년 대비 2022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상면 13.6%, 북면 7.29%, 청평면 7.2%, 조종면 2.41%, 가평읍 1.75%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분석에서 가평군은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였으나 인구수 변화에서는 모든 지역이 약간이라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수의 문제보다는 인구구조의 문제로 장래 인구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2-3] 가평군의 인구증감률 현황



[그림 2-4]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4]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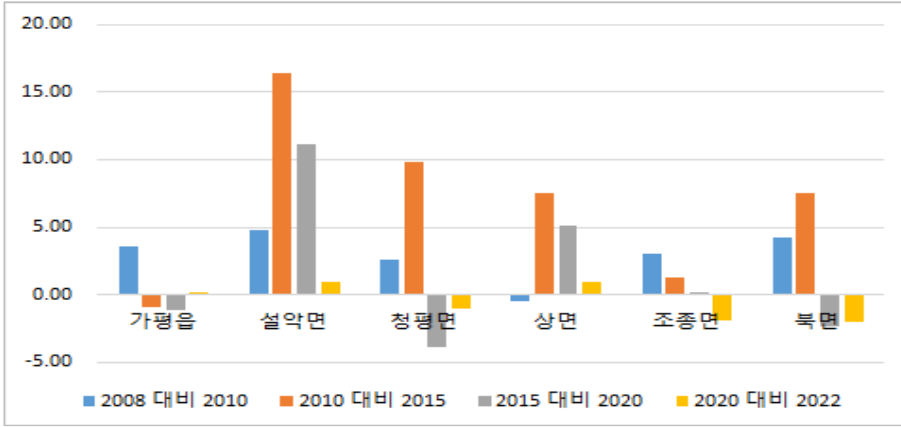
구분	2008	2010	2015	2020	2022	인구증감률
가평읍	19,203	19,894	19,716	19,496	19,539	1.75
설악면	7,077	7,419	8,637	9,598	9,691	36.94
청평면	12,942	13,280	14,588	14,021	13,874	7.2
상면	4,964	4,942	5,312	5,586	5,639	13.6
조종면	9,369	9,651	9,772	9,785	9,595	2.41
북면	3,553	3,704	3,983	3,891	3,812	7.29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그림 2-5]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단위 : %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5]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단위 : %

구분	2008 대비 2010	2010 대비 2015	2015 대비 2020	2020 대비 2022
가평읍	3.60	-0.89	-1.12	0.22
설악면	4.83	16.42	11.13	0.97
청평면	2.61	9.85	-3.89	-1.05
상면	-0.44	7.49	5.16	0.95
조종면	3.01	1.25	0.13	-1.94
북면	4.25	7.53	-2.31	-2.03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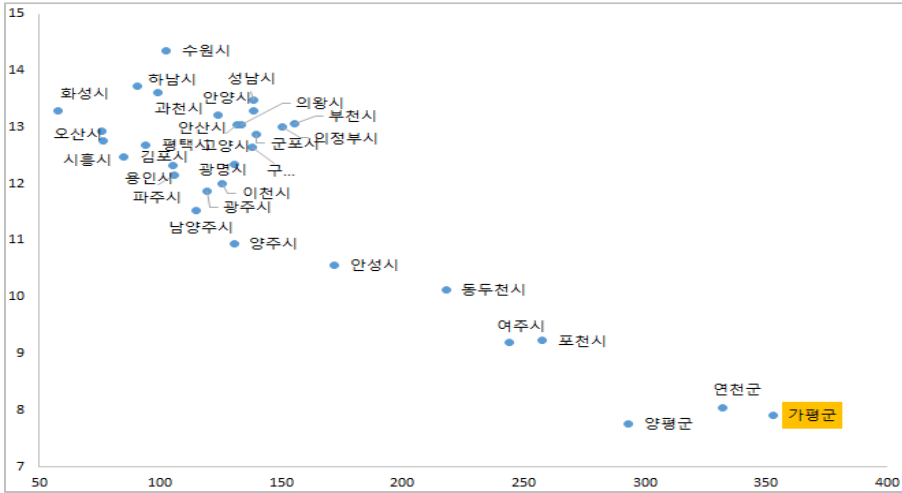
□ 가평군 가임여성인구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

- 가임인구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는 인구소멸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임
 - 가임인구여성비율이 낮을수록 노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 경기도 시·군의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를 보면 가평군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평군의 가입여성인구비율은 7.91%로 두 번째로 낮으며 노령화지수는 35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 가입여성인구비율 평균 11.92%와 노령화지수 평균 149.38과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6]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입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주: 가입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표 2-6]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임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구분	노령화지수	가임여성인구 비율(%)	구분	노령화지수	가임여성인구 비율(%)
수원시	102.36	14.35	의왕시	133.12	13.04
성남시	138.54	13.47	하남시	90.75	13.73
의정부시	150.49	13.01	용인시	105.27	12.32
안양시	138.34	13.29	파주시	105.78	12.16
부천시	155.35	13.07	이천시	125.63	12.00
광명시	130.48	12.35	안성시	172.00	10.56
평택시	93.82	12.68	김포시	85.11	12.48
동두천시	217.93	10.13	화성시	57.46	13.29
안산시	124.05	13.21	광주시	119.46	11.86
고양시	131.71	13.05	양주시	130.33	10.95
과천시	99.00	13.61	포천시	257.65	9.23
구리시	137.91	12.64	여주시	243.76	9.2
남양주시	114.49	11.52	연천군	332.14	8.05
오산시	75.81	12.93	가평군	352.73	7.91
시흥시	76.43	12.75	양평군	293.18	7.76
군포시	139.59	12.88	평균	149.38	1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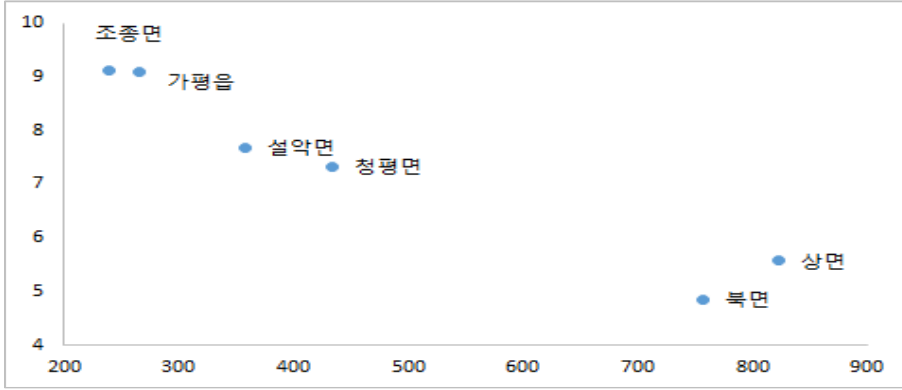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 가평군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북면과 상면이 노령화지수 757.36, 823.65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임여성비율이 4.85%, 5.57%로 낮게 나타났음
- 가평읍과 조종면은 비교적 가임여성인구비율이 높고, 노령화지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평군 내 타 지역보다는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 2-7]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표 2-7]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인구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구분	20~39세 여성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수(명)	가임여성비율(%)	인구수(명)	노령화지수(%)
가평읍	1,779	9.10	4,943	265.61
설악면	744	7.68	2,905	357.76
청평면	1,017	7.33	4,142	434.17
상면	314	5.57	1,985	823.65
조종면	874	9.11	2,374	239.07
북면	185	4.85	1,492	757.36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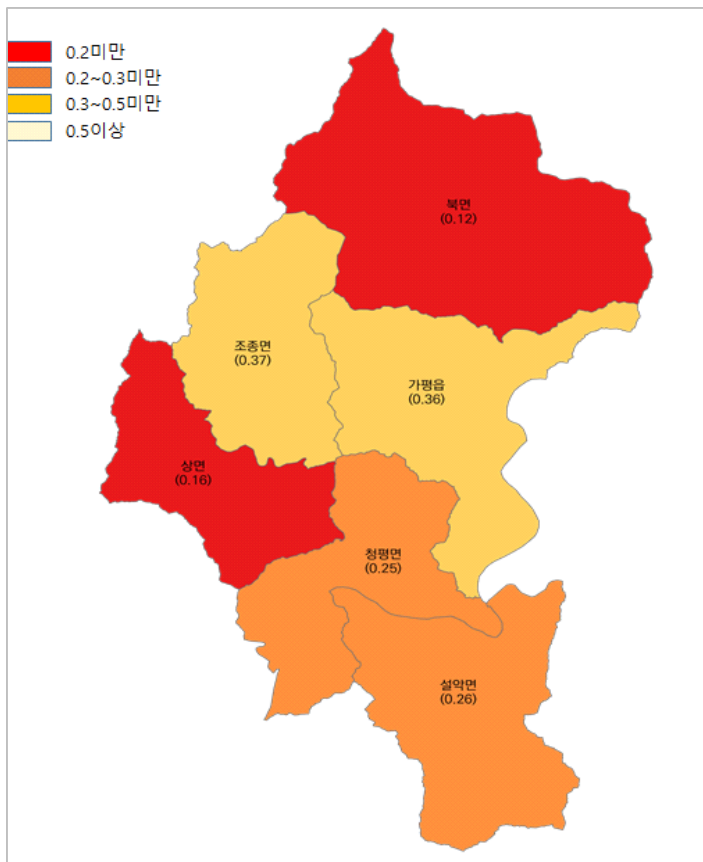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 지수 분석

-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가평군 내 모든 지역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남
 - 특히 북면과 상면은 0.12와 0.16으로 인구소멸고위험지역 기준인 0.2 미만이었음
 - 가평군과 조정면의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36, 0.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인구소멸위험진입 단계 기준인 0.5 미만임

[그림 2-8] 가평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적용한 가평군 분석

○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고, 인구 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① 연평균 인구증감률 ② 인구밀도 ③ 청년순이동률 ④ 주간인구 ⑤ 고령화 비율 ⑥ 유소년 비율 ⑦ 조출생률¹³⁾ ⑧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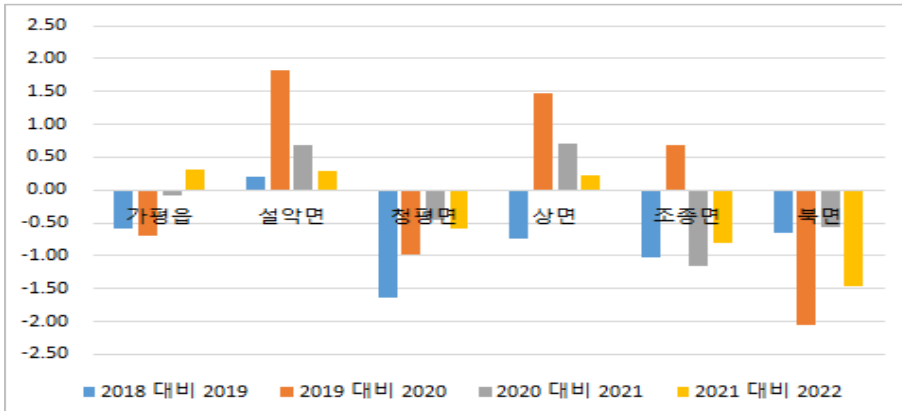
○ 8개의 지표에 대해 통계를 이용해 가평군 내 읍·면·동을 분석함

□ 최근 5개년 인구증감률

○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5개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설악면이 유일함

○ 인구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청평면과 북면으로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북면의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13) 조출생률은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임(네이버 백과사전).

[표 2-8]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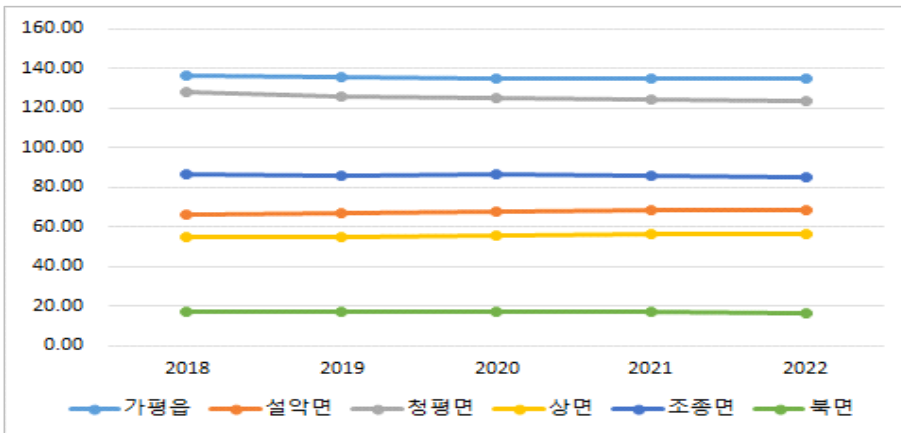
구분	2018 대비 2019	2019 대비 2020	2020 대비 2021	2021 대비 2022
가평읍	-0.59	-0.69	-0.09	0.31
설악면	0.20	1.82	0.68	0.29
청평면	-1.65	-0.99	-0.46	-0.59
상면	-0.74	1.47	0.72	0.23
조종면	-1.03	0.69	-1.15	-0.80
북면	-0.65	-2.06	-0.57	-1.4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최근 5개년 인구밀도 변화

-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5개년 인구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설악면과 상면은 증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평군 내 모든 지역의 인구밀도 변화폭이 크지 않아 유지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북면의 경우 인구감소 폭에 비해 인구밀도의 변화가 낮은 편인데, 이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 자체가 적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됨

[그림 2-10]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자료: 가평군 홈페이지. "<https://www.gp.go.kr/portal/contents.do?key=750>".

주: 가평군 읍·면·동 행정구역 면적은 2022년 12월 기준.

[표 2-9]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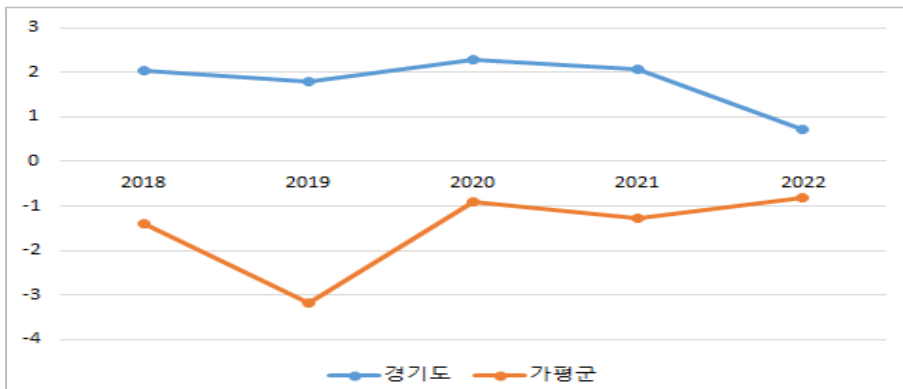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평읍	136.33	135.52	134.59	134.46	134.88
설악면	66.41	66.54	67.76	68.22	68.42
청평면	128.24	126.13	124.89	124.31	123.58
상면	55.16	54.75	55.56	55.96	56.09
조종면	86.85	85.95	86.55	85.55	84.87
북면	17.30	17.18	16.83	16.73	16.49

자료: 가평군 홈페이지. "<https://www.gp.go.kr/portal/contents.do?key=750>".
 주: 가평군 읍·면·동 행정구역 면적은 2022년 12월 기준.

□ 최근 5개년 청년순이동률 변화

- 최근 5년간 가평군 내 청년(20~39세) 순이동률 변화를 살펴보면 가평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마이너스(-) 순이동률을 보임
- 특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큰 폭으로 전출인구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 회복세를 나타냈음

[그림 2-11]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자료: KOSO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주: 청년 순이동률 = 청년(20~39세) 순이동수 / 청년 연앙인구 * 100

[표 2-10] 최근 5년간 가평균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기 도	청년 순이동자수	74,974	66,083	84,258	75,981	26,601
	청년 연양인구	3,654,745	3,675,045	3,684,452	3,688,418	3,644,542
	청년 순이동률	2.05142	1.79815	2.28685	2.05999	0.72989
가 평 군	청년 순이동자수	-176	-389	-109	-148	-94
	청년 연양인구	12,579.5	12,266.5	11,953.0	11,709.5	11,430.0
	청년 순이동률	-1.39910	-3.17124	-0.91190	-1.26393	-0.82240

주: 청년 순이동률 = 청년(20~39세) 순이동수 / 청년 연양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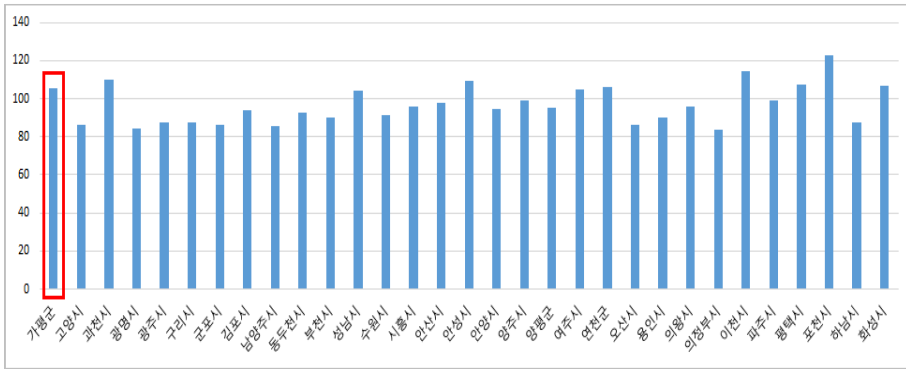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2020년 주간인구지수¹⁴⁾

- 가평균의 주간인구지수는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인 94.5에 비해 약 11.85% 높은 105.7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8번째로 높은 주간인구지수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주간 인구 유입을 유인하는 요인이 지역자원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됨

14) 주간인구는 어떤 지역에 낮시간 동안 존재하여 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상주인구(야간인구)는 그 지역에 행정구역 상 거주지를 두고 살고있는 인구를 의미함. 주간인구지수는 한 지역의 주간인구와 상주인구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데, 주간인구수를 상주인구수로 나눈 백분비로 계산함(네이버 지식백과). 주간인구지수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중 표본조사 자료로, 5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2020년 자료를 활용한 것임.

[그림 2-12] 가평군 주간인구지수



주: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100

자료: 이상대 외(2021).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표 2-11] 가평군 주간인구지수

시군명	주간인구지수	시군명	주간인구지수
경기도	94.5	안성시	109.4
가평군	105.7	안양시	94.8
고양시	86.3	양주시	98.8
과천시	110.2	양평군	95.0
광명시	84.5	여주시	105.1
광주시	87.8	연천군	106.4
구리시	87.5	오산시	86.5
군포시	86.3	용인시	90.0
김포시	94.1	의왕시	95.8
남양주시	85.8	의정부시	83.5
동두천시	92.7	이천시	114.6
부천시	90.2	파주시	98.8
성남시	104.3	평택시	107.3
수원시	91.3	포천시	122.8
시흥시	95.7	하남시	87.7
안산시	98.0	화성시	1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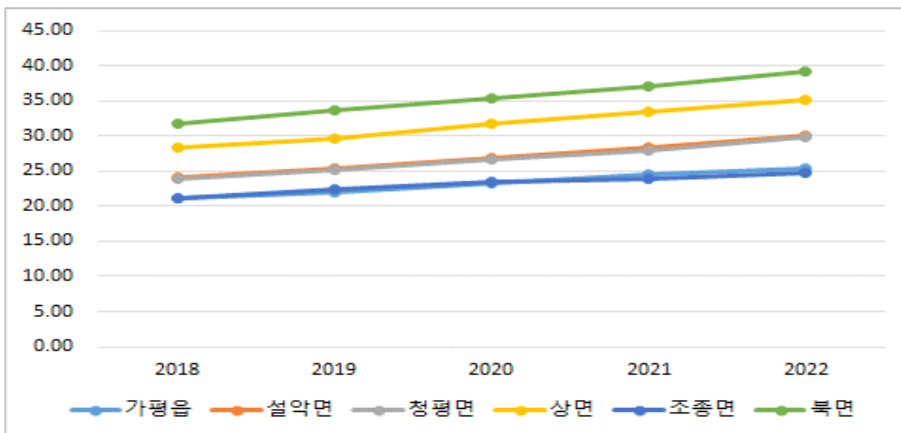
주: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100

자료: 이상대 외(2021).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 최근 5년간 고령화비율 변화

- 최근 5년간 가평균 내 읍·면·동별 고령화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면의 경우 5년간 약 7.43% 상승하며 고령화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면(6.82%), 청평면(6.03%), 설악면(5.94%), 가평읍(4.09%), 조종면(3.5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13] 최근 5년간 가평균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주: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12] 최근 5년간 가평균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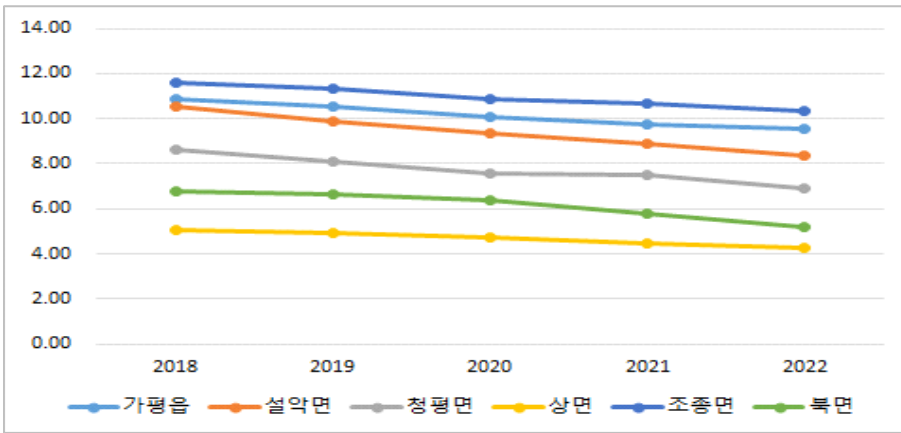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평읍	21.21	22.06	23.36	24.48	25.30
설악면	24.04	25.32	26.88	28.41	29.98
청평면	23.82	25.12	26.69	28.00	29.85
상면	28.38	29.70	31.81	33.38	35.20
조종면	21.18	22.42	23.42	23.83	24.74
북면	31.71	33.60	35.42	36.99	39.14

주: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최근 5년간 유소년비율 변화

-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전과 비교하여 유소년비율이 높아진 지역은 없음
- 설악면이 5년전과 비교하여 -2.18%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청평면(-1.76%), 북면(-1.63%), 가평읍(-1.34%), 조종면(-1.27%), 상면(-0.81%) 순임

[그림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주: 유소년비율 = 0~14세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13]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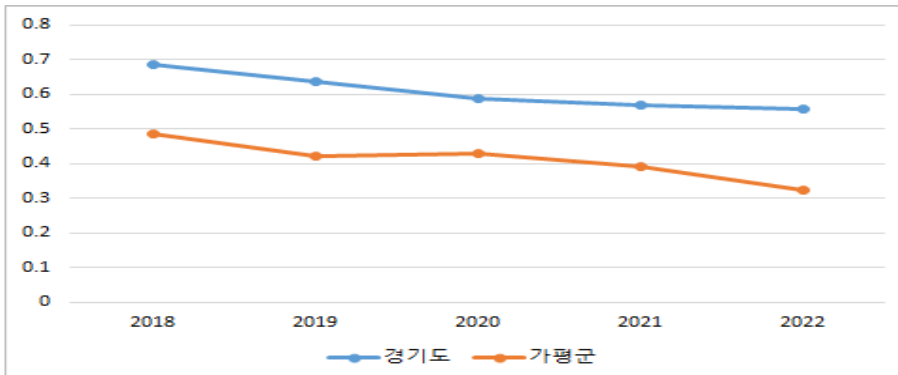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평읍	10.87	10.54	10.06	9.73	9.52
설악면	10.56	9.88	9.34	8.90	8.38
청평면	8.63	8.10	7.58	7.50	6.88
상면	5.08	4.90	4.71	4.48	4.27
조종면	11.62	11.34	10.85	10.67	10.35
북면	6.80	6.62	6.40	5.76	5.17

주: 유소년비율 = 0~14세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최근 5년간 조출생률 변화

- 최근 5년간 가평군의 조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가평군의 조출생률 감소율이 -1.606으로 경기도의 조출생률 감소율 -1.2793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그림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주: 조출생률 = 출생아 수 / 총 연앙인구 * 1000

자료: KOSO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표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기도	출생자 수	88,175	83,198	77,737	76,139	75,300
	총 연앙인구	12,861,428	13,043,732	13,220,207	13,398,945	13,503,169
	조출생률	6.85577	6.37839	5.88017	5.68246	5.57647
가평군	출생자 수	301	261	265	242	200
	총 연앙인구	62,214.0	61,945.5	61,675.0	61,764.5	61,879.0
	조출생률	4.83814	4.21338	4.29672	3.91811	3.23211

주: 조출생률 = 출생아 수 / 총 연앙인구¹⁵⁾ * 1000

자료: KOSO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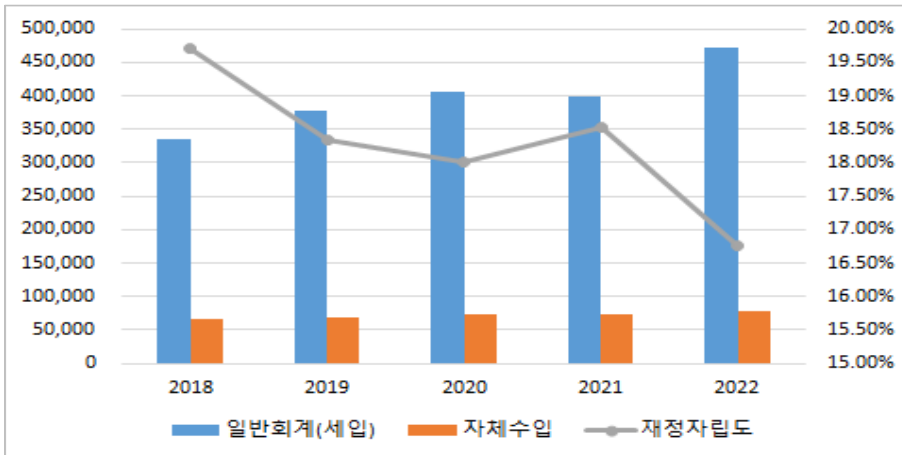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가평군의 세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만에 40.36%나 증가

15)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보통 그해의 중간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인구를 연앙인구라고 함(내이버 지식백과).

하였으나, 자체수입은 19.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가평군의 재정자립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9.71%였으나 2022년 16.76%로 약 2.95% 감소하였음

[그림 2-16]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기준.
 자료: 가평군 홈페이지(<https://www.gp.go.kr/>) 재정공시 자료.

[표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세입)	336,330	377,641	405,528	399,787	472,071
자체수입	66,282	69,215	73,015	74,055	79,113
재정자립도	19.71%	18.33%	18.00%	18.52%	16.76%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기준.
 자료: 가평군 홈페이지(<https://www.gp.go.kr/>) 재정공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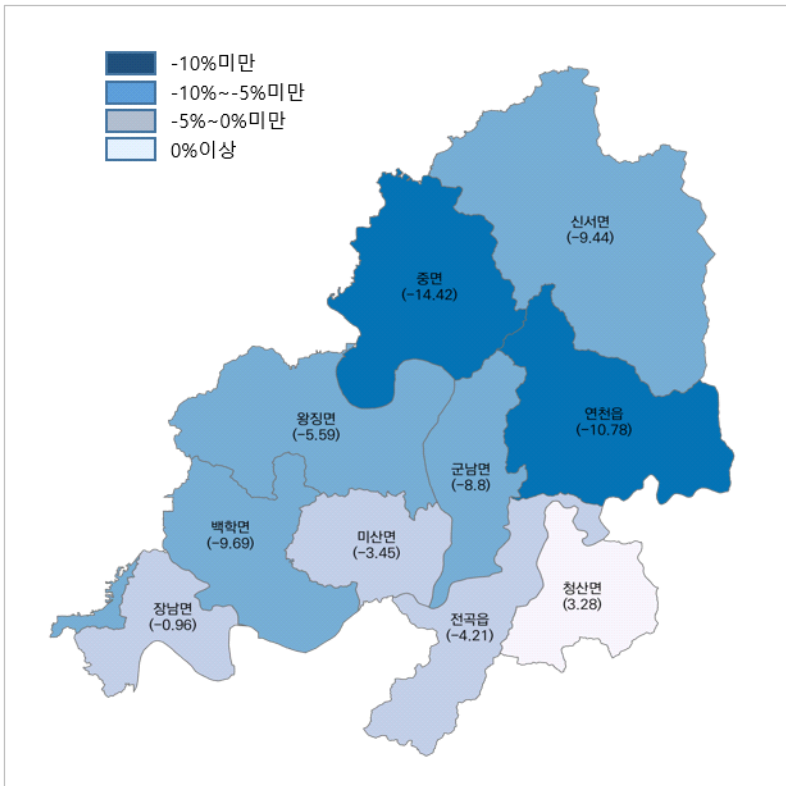
2) 연천군

(1) 연천군의 인구변화와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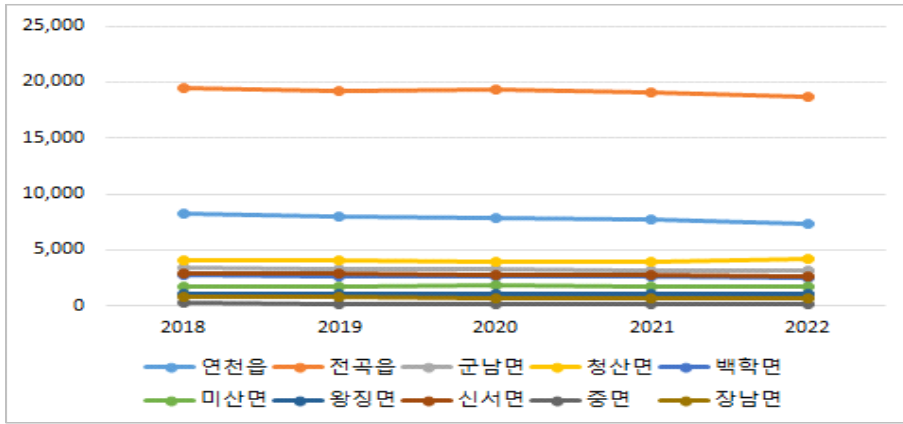
□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천군의 읍·면·동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청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면이 -14.42%로 2008년 대비 2022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연천읍 -10.78%, 백학면 -9.69%, 신서면 -9.44%, 군남면 -8.80%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청산면만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분석에서 연천군은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였으며 실제 청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천군은 인구소멸위험이 높은 상황임

[그림 2-17] 연천군의 인구증감률 현황



[그림 2-18]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16]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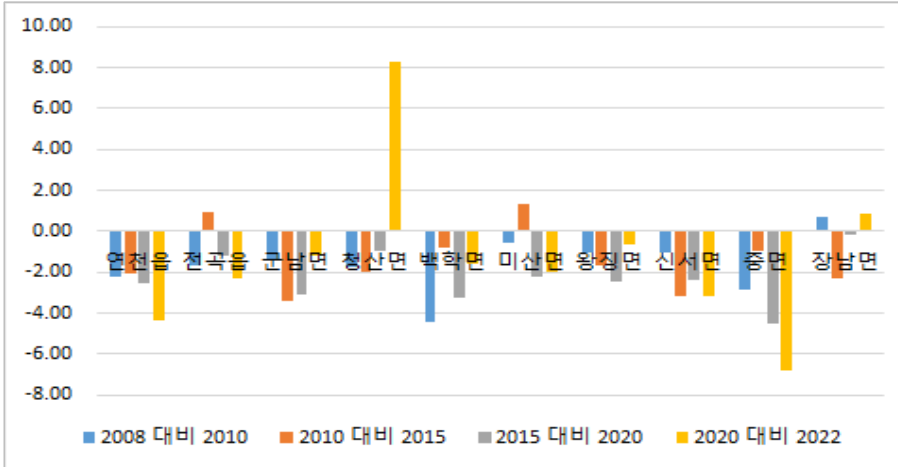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증감률
연천읍	8,220	8,036	7,869	7,670	7,334	-10.78
전곡읍	19,512	19,181	19,358	19,124	18,690	-4.21
군남면	3,376	3,328	3,214	3,116	3,079	-8.80
청산면	4,083	4,012	3,933	3,895	4,217	3.28
백학면	2,798	2,674	2,652	2,567	2,527	-9.69
미산면	1,767	1,757	1,781	1,741	1,706	-3.45
왕징면	1,056	1,045	1,028	1,003	997	-5.59
신서면	2,882	2,853	2,762	2,696	2,610	-9.44
중면	208	202	200	191	178	-14.42
장남면	731	736	719	718	724	-0.96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그림 2-19]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단위 : %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17]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변화율 변화

단위 : %

구분	2008 대비 2010	2010 대비 2015	2015 대비 2020	2020 대비 2022
연천읍	-2.24	-2.08	-2.53	-4.38
전곡읍	-1.70	0.92	-1.21	-2.27
군남면	-1.42	-3.43	-3.05	-1.19
청산면	-1.74	-1.97	-0.97	8.27
백학면	-4.43	-0.82	-3.21	-1.56
미산면	-0.57	1.37	-2.25	-2.01
왕징면	-1.04	-1.63	-2.43	-0.60
신서면	-1.01	-3.19	-2.39	-3.19
중면	-2.88	-0.99	-4.50	-6.81
장남면	0.68	-2.31	-0.14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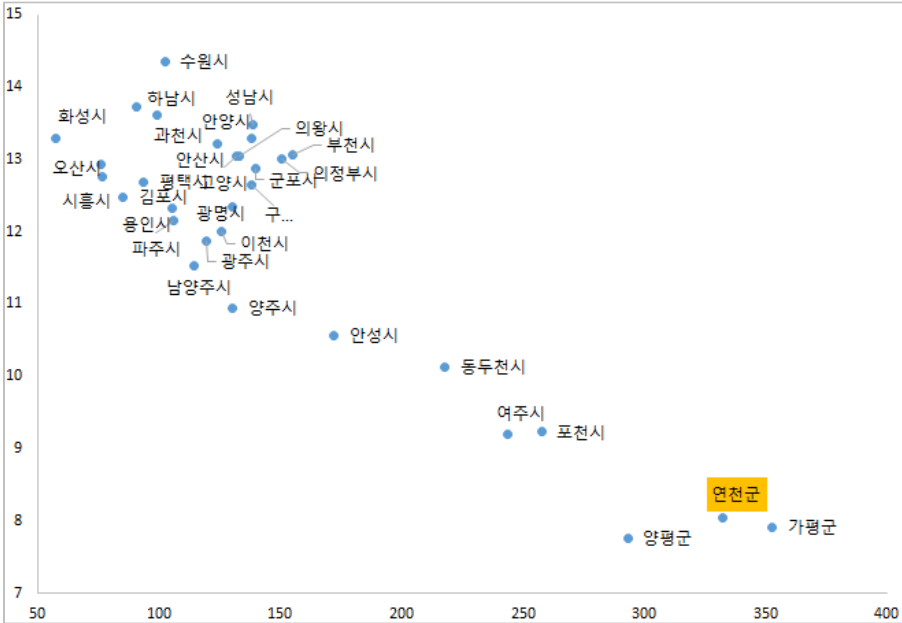
주: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연천군 가임여성인구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

- 가임인구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는 인구소멸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임
 - 가임인구여성비율이 낮을수록 노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 연천군의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를 보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천군의 가임여성인구비율은 8.05%로 세 번째로 낮으며 노령화지수는 332.14으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 가임여성인구비율 평균 11.92%와 노령화지수 평균 149.38과 큰 폭으로 차이가 남

[그림 2-20]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임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표 2-18]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임여성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구분	노령화지수	가임여성인구 비율(%)	구분	노령화지수	가임여성인구 비율(%)
수원시	102.36	14.35	의왕시	133.12	13.04
성남시	138.54	13.47	하남시	90.75	13.73
의정부시	150.49	13.01	용인시	105.27	12.32
안양시	138.34	13.29	파주시	105.78	12.16
부천시	155.35	13.07	이천시	125.63	12.00
광명시	130.48	12.35	안성시	172.00	10.56
평택시	93.82	12.68	김포시	85.11	12.48
동두천시	217.93	10.13	화성시	57.46	13.29
안산시	124.05	13.21	광주시	119.46	11.86
고양시	131.71	13.05	양주시	130.33	10.95
과천시	99.00	13.61	포천시	257.65	9.23
구리시	137.91	12.64	여주시	243.76	9.2
남양주시	114.49	11.52	연천군	332.14	8.05
오산시	75.81	12.93	가평군	352.73	7.91
시흥시	76.43	12.75	양평군	293.18	7.76
군포시	139.59	12.88	평균	149.38	1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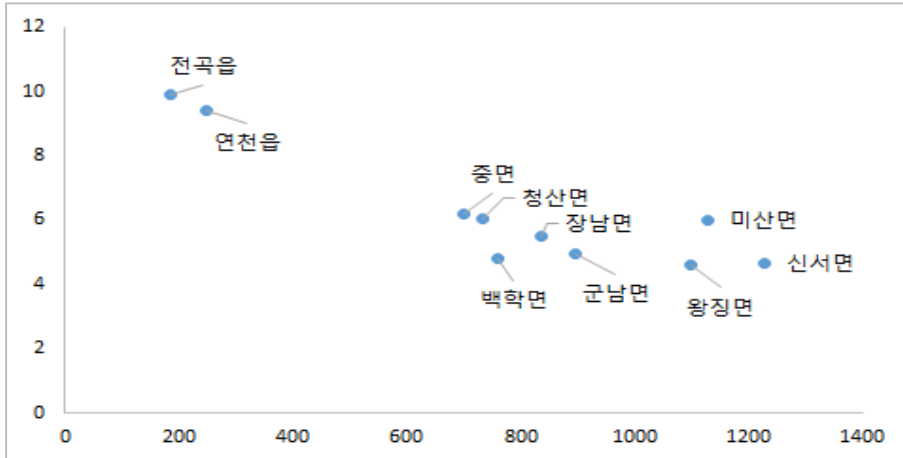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 연천군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노령화지수는 신서면이 1,229.35%, 미산면 1,127.42%, 황장면 1,097.7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임여성비율은 황장면 4.61%, 신서면 4.64%, 백학면 4.84%로 낮게 나타났음
- 연천읍과 전곡읍은 연천군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임여성인구비율이 높고, 노령화지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천군 내 타 지역보다는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 2-21] 연천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표 2-19] 연천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2022년 기준)

구분	20~39세 여성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수(명)	가임여성비율(%)	인구수(명)	노령화지수(%)
연천읍	690	9.41	2,004	247.10
전곡읍	1,848	9.89	4,057	184.33
군남면	153	4.97	1,209	895.56
청산면	254	6.02	1,422	732.99
백학면	122	4.83	957	759.52
미산면	102	5.98	699	1,127.42
왕징면	46	4.61	483	1,097.73
신서면	121	4.64	1,131	1,229.35
중면	11	6.18	56	700.00
장남면	40	5.52	301	836.11

주: 가임인구여성 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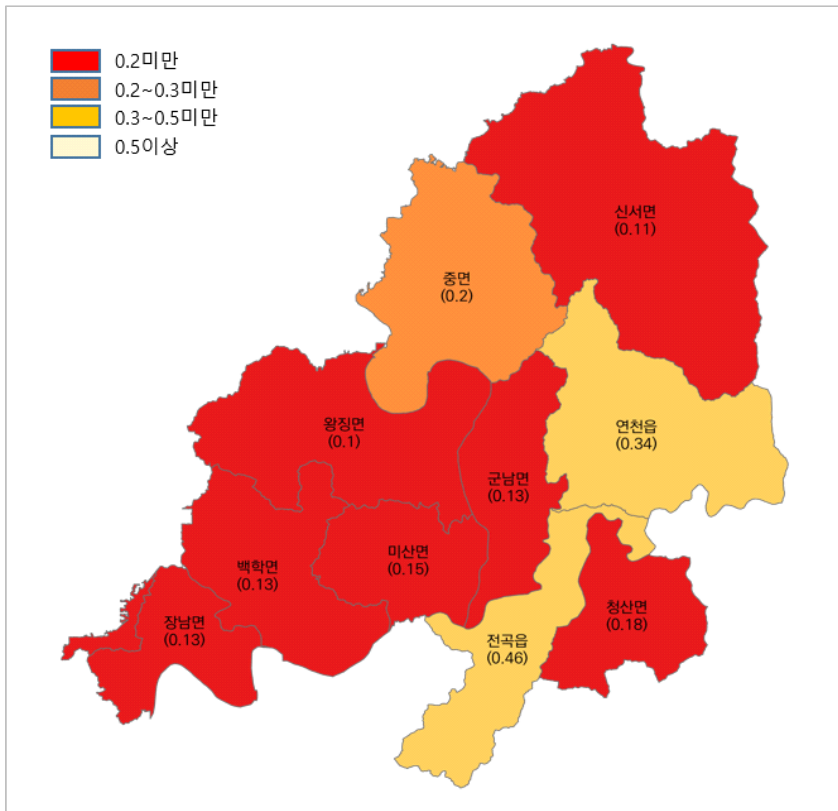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 / 0~14세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년 12월 기준.

□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 지수 분석

-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연천군 내 모든 지역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남
 - 특히 왕징면 0.1, 신서면 0.11, 군남면 0.13, 백학면 0.13, 장남면 0.13, 중면 0.2, 미산면 0.15, 청산면 0.18로 인구소멸고위험지역 기준인 0.2 이하로 나타났음
 - 연천군과 연천읍과 전곡읍은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34, 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인구소멸위험진입 단계 기준인 0.5 미만임

[그림 2-22] 연천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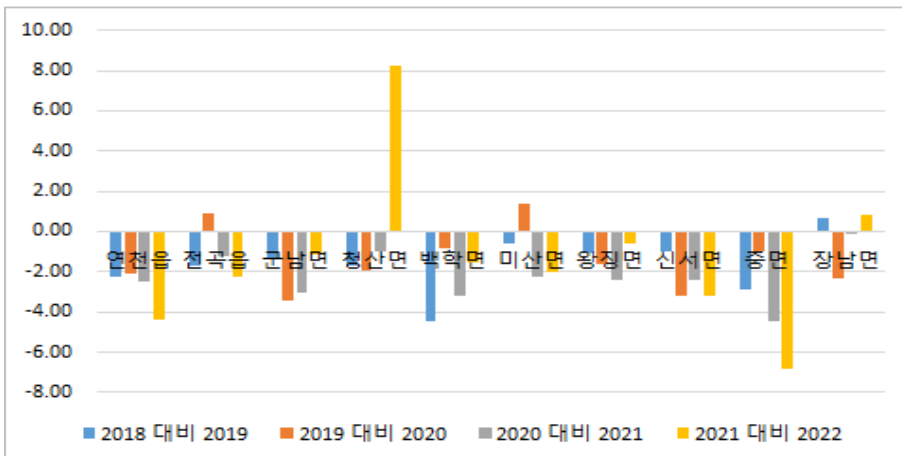


(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적용한 연천군 분석

□ 최근 5개년 인구증감률

- 연천군 읍·면·동별 최근 5개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없으며, 연천읍, 군남면,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증면 모두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증면이며, 청산면은 2021년 대비 2022년 8.27%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남

[그림 2-23]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20]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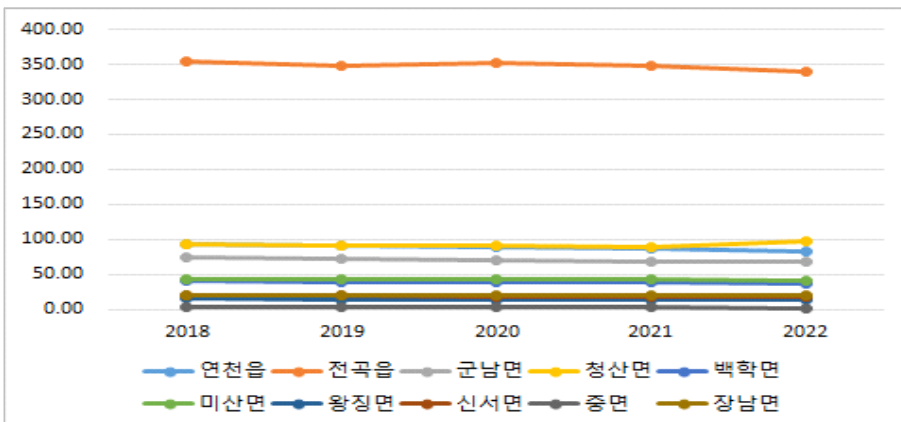
구분	2018 대비 2019	2019 대비 2020	2020 대비 2021	2021 대비 2022
연천읍	-2.24	-2.08	-2.53	-4.38
전곡읍	-1.70	0.92	-1.21	-2.27
군남면	-1.42	-3.43	-3.05	-1.19
청산면	-1.74	-1.97	-0.97	8.27
백학면	-4.43	-0.82	-3.21	-1.56
미산면	-0.57	1.37	-2.25	-2.01
왕징면	-1.04	-1.63	-2.43	-0.60
신서면	-1.01	-3.19	-2.39	-3.19
중면	-2.88	-0.99	-4.50	-6.81
장남면	0.68	-2.31	-0.14	0.8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최근 5개년 인구밀도 변화

- 연천군 읍·면·동별 최근 5개년 인구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청산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천군 모든 지역의 인구밀도 변화폭이 크지 않아 유지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24]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1 제61회 연천통계연보.

[표 2-21]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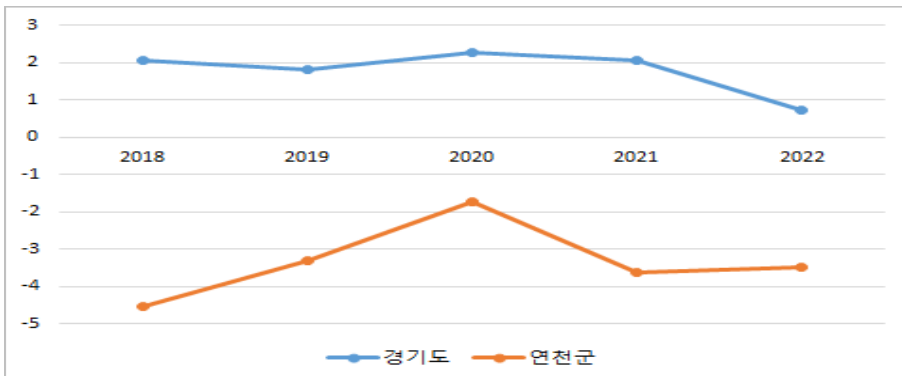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천읍	93.46	91.37	89.47	87.21	83.39
전곡읍	354.31	348.30	351.52	347.27	339.39
군남면	73.97	72.92	70.42	68.27	67.46
청산면	93.48	91.85	90.04	89.17	96.54
백학면	41.53	39.69	39.36	38.10	37.51
미산면	42.81	42.56	43.14	42.18	41.33
왕징면	14.85	14.70	14.46	14.11	14.02
신서면	19.50	19.31	18.69	18.24	17.66
중면	2.58	2.50	2.48	2.37	2.21
장남면	20.45	20.59	20.12	20.09	20.2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1 제61회 연천통계연보.

□ 최근 5개년 청년순이동률 변화

- 최근 5년간 연천군 내 청년(20~39세) 순이동률 변화를 살펴보면 연천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마이너스(-) 순이동률을 보임

[그림 2-25] 최근 5년간 연천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주: 청년 순이동률 = 청년(20~39세) 순이동수 / 청년 연앙인구 * 100

자료: KOSO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표 2-22] 최근 5년간 연천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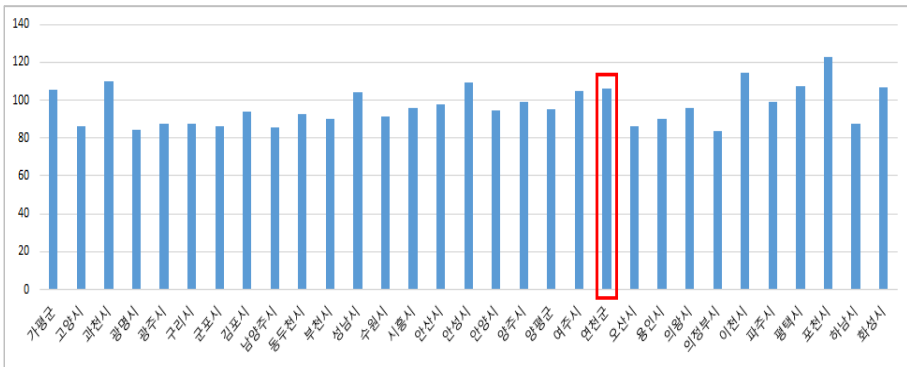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기 도	청년 순이동자수	74,974	66,083	84,258	75,981	26,601
	청년 연앙인구	3,654,745	3,675,045	3,684,452	3,688,418	3,644,542
	청년 순이동률	2.05142	1.79815	2.28685	2.05999	0.72989
연 천 군	청년 순이동자수	-466	-328	-166	-338	-310
	청년 연앙인구	10,312.0	9,900.5	9,635.0	9,352.5	8,950.0
	청년 순이동률	-4.51901	-3.31296	-1.72289	-3.61401	-3.46369

주: 청년 순이동률 = 청년(20~39세) 순이동수 / 청년 연앙인구 * 100
 자료: KOSO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2020년 주간인구지수¹⁶⁾

- 연천군의 주간인구지수는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인 94.5에 비해 약 12.59% 높은 106.4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7번째로 높은 주간인구지수를 나타내고 있음
- 학교나 직장 문제로 주변 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26] 연천군 주간인구지수



주: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100
 자료: 이상대 외(2021).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16)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중 표본조사 자료로, 5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2020년 자료로 활용.

[표 2-23] 연천군 주간인구지수

시군명	주간인구지수	시군명	주간인구지수
경기도	94.5	안성시	109.4
가평군	105.7	안양시	94.8
고양시	86.3	양주시	98.8
과천시	110.2	양평군	95.0
광명시	84.5	여주시	105.1
광주시	87.8	연천군	106.4
구리시	87.5	오산시	86.5
군포시	86.3	용인시	90.0
김포시	94.1	의왕시	95.8
남양주시	85.8	의정부시	83.5
동두천시	92.7	이천시	114.6
부천시	90.2	파주시	98.8
성남시	104.3	평택시	107.3
수원시	91.3	포천시	122.8
시흥시	95.7	하남시	87.7
안산시	98.0	화성시	106.7

주: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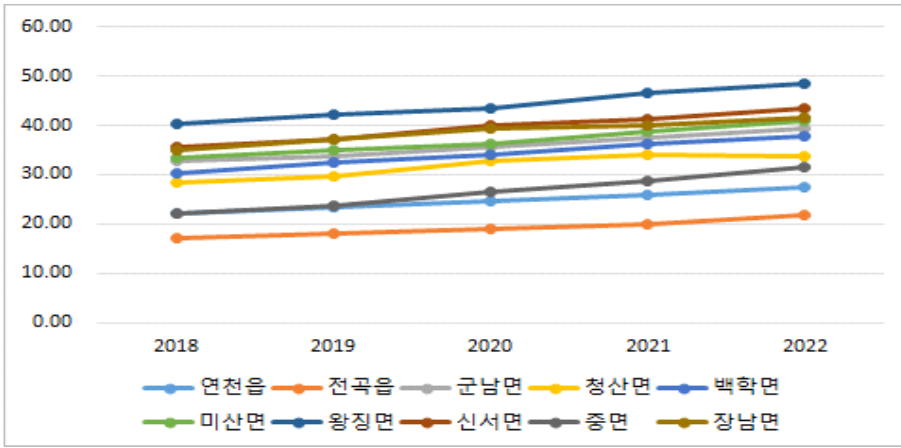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100

자료: 이상대 외(2021).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 최근 5년간 고령화비율 변화

- 최근 5년간 연천군 내 읍·면·동별 고령화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면의 경우 5년간 약 42.26% 상승하며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곡읍(26.85%), 백학면(25.40%), 미산면(22.92%), 연천읍(22.87%), 신서면(22.20%)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27]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주: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24]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 고령화 비율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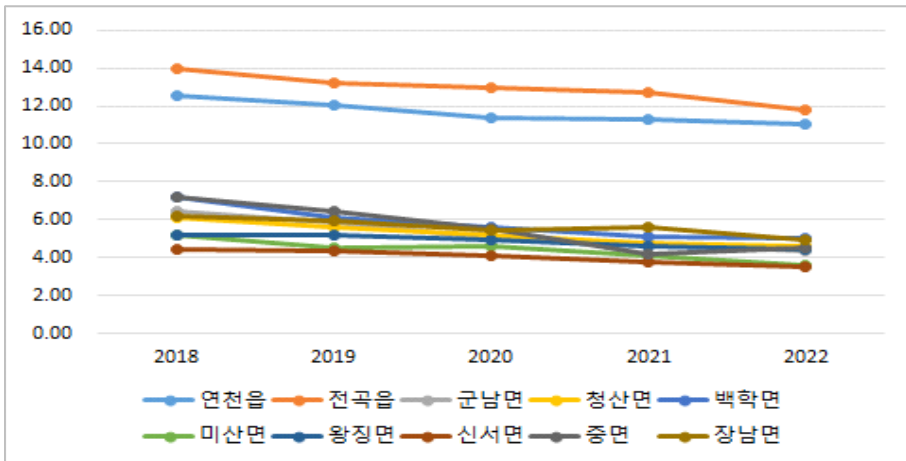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천읍	22.24	23.49	24.77	25.79	27.32
전곡읍	17.11	18.12	18.93	19.99	21.71
군남면	32.73	33.74	35.75	37.58	39.27
청산면	28.26	29.74	32.85	33.89	33.72
백학면	30.20	32.57	33.90	36.07	37.87
미산면	33.33	35.00	36.10	38.66	40.97
왕징면	40.44	42.20	43.58	46.66	48.45
신서면	35.46	37.22	40.12	41.32	43.33
중면	22.12	23.76	26.50	28.80	31.46
장남면	35.02	37.09	39.50	39.97	41.57

주: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최근 5년간 유소년비율 변화

-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전과 비교하여 유소년비율이 높아진 지역은 없음
- 중면이 5년전과 비교하여 -37.68%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군남면(-32.10%), 백학면(-30.93%), 미산면(-29.43%), 청산면(-24.56%), 신서면(-20.01%) 순임

[그림 2-28]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주: 유소년비율 = 0~14세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표 2-25] 최근 5년간 연천군 읍·면·동별 유소년비율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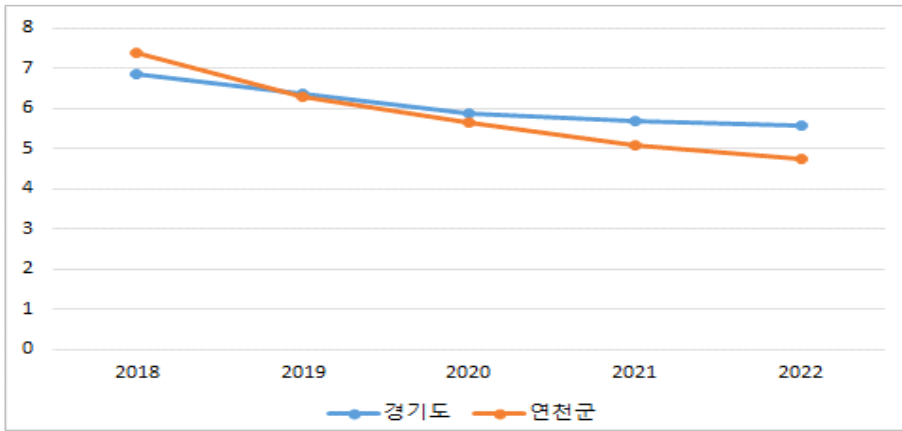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평읍	10.87	10.54	10.06	9.73	9.52
설악면	10.56	9.88	9.34	8.90	8.38
청평면	8.63	8.10	7.58	7.50	6.88
상면	5.08	4.90	4.71	4.48	4.27
조종면	11.62	11.34	10.85	10.67	10.35
북면	6.80	6.62	6.40	5.76	5.17

주: 유소년비율 = 0~14세 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최근 5년간 조출생률 변화

- 최근 5년간 연천군의 조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연천군의 조출생률 감소율이 -2.6509로 경기도의 조출생률 감소율 -1.2793과 비교하여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9] 최근 5년간 연천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주: 조출생률 = 출생아 수 / 총 연앙인구 * 1000
 자료: KOSO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표 2-26] 최근 5년간 연천군 조출생률 변화(2018~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기도	출생자 수	88,175	83,198	77,737	76,139	75,300
	총 연앙인구	12,861,428	13,043,732	13,220,207	13,398,945	13,503,169
	조출생률	6.85577	6.37839	5.88017	5.68246	5.57647
연천군	출생자 수	329	275	243	217	200
	총 연앙인구	44,465.0	43,660.0	43,104.5	42,681.5	42,121.5
	조출생률	7.39908	6.29867	5.63746	5.08417	4.74817

주: 조출생률 = 출생아 수 / 총 연앙인구 * 1000
 자료: KOSO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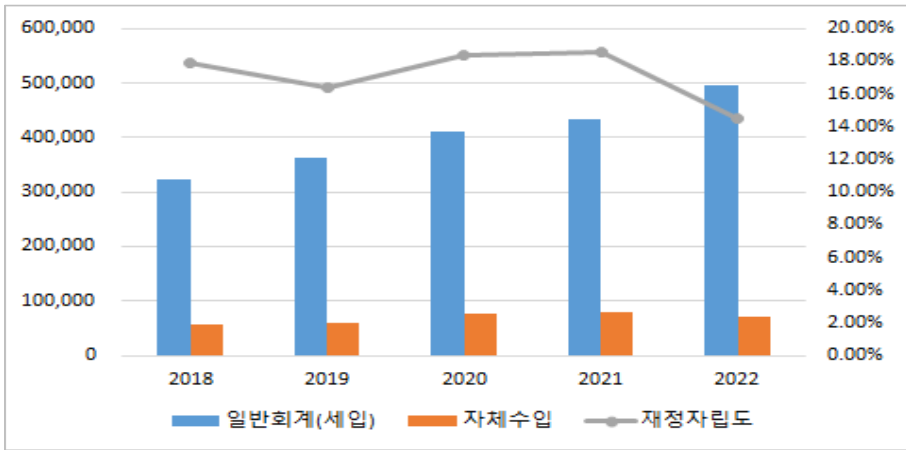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연천군의 세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만에 53.96%나 증가

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천군의 재정자립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7.85%였으나 2022년 14.48%로 약 18.88% 감소하였음

[그림 2-30] 최근 5년간 연천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주: 당초 예산 총계 기준, 일반회계 기준.

자료: 연천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재정공시 자료.

[표 2-27] 최근 5년간 연천군 재정자립도 변화(2018~2022)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세입)	322,260	362,219	410,619	432,713	496,144
자체수입	57,530	59,254	75,276	80,429	71,839
재정자립도	17.85%	16.36%	18.33%	18.59%	14.48%

주: 당초 예산 총계 기준, 일반회계 기준.

자료: 연천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재정공시 자료.

4 현안 및 시사점

□ 경기도

- 경기도의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에서 소멸위험에 진입한 단체는 대부분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소멸위험지수 상 경기도 시·군 중에서 연천군이 0.27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경기 북부 시·군의 노령화지수가 경기도 평균(149.38%)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기간 동안 경기도 전체 청년 전입이 전출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청년순이동률은 양(+)으로 나타나지만 가평군과 연천군의 경우 청년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역외 전출이 전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경기도 관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연천군 및 가평군)의 특성상 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과 다르게 수도권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심 교외지역에 부합하는 선택적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의 인구감소위험 개선을 위해 지자체 내 활동인구 및 생활인구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 필요함
 - 향후 역내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요구됨

□ 가평군

- 가평군의 인구변화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가평군 전체의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 기간 동안 일부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가임여성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 등 인구의 구조적 변화 측면에서 향후 인구감소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가평군 내 2개 면지역(북면, 상면)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4개 읍도 소멸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가평군 내 청년 순이동 측면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청년순이동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가평군의 주간인구지수(105.7)는 경기도 주간인구지수(95.5)에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8번째로 나타남

- 이는 주간인구 유입을 유인하는 요인이 지역자원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연천군

○ 연천군은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서 인구소멸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천군은 과거 15년 동안 청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관내 청년(20~39세)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청년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남)

○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연천군의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고 있음

-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연천군의 가임여성인구비율은 8.05%로 세 번째로 낮으며 노령화지수는 332.14으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천군 내 읍·면·동별 고령화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최근 5년간 연천군의 조출생률은 경기도 전체 조출생률과 비교하여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D4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전략

1. SWOT 기반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발전방향
2. 인구소멸 위험 대응 비전 및 목표
3. 인구소멸위험 대응 추진방향
4. 기초단체별 인구소멸위험 대응 분야별 주요사업
5. 소결

제4장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전략

① SWOT 기반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발전 방향

1) 경기도

□ 경기도 SWOT 기반 발전 방향

-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가평군, 양평군) SWOT를 기반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소멸위험 대응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SWOT 분석 도출
- '21년 합계출산율(전국 0.81, 경기도 0.85),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
 - 혼인건수 지속 하락 등으로 출산율 더욱 하락 전망('24년 0.70명)
 - (전국) '18년 26만 → '21년 19만, (경기도) '18년 6.6만 → '21년 5.5만
 - 2040세대 인식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동의(84%), 결혼과 출산의 의지는 높지 않게 나타남
 - 따라서, 결혼-출산-취업 및 일자리가 병행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의 운영 필요
- 경제활동인구(청년, 중장년 등) 환경 악화
 - 경기도는 생산연령인구가 '23년을 정점(1,001만명)으로 감소세 진입 예정
 - 고령인구는 '22년 1,993명으로 14.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8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
 - 노년부양비가 '20년 17.3명에서 '35년 40.6명으로 2배 이상 증가 전망
 -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와 고령계층의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연금확보가 필요

[표 4-1] 경기도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수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의 견비 ▶ 높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따른 지자체 정책 추진 가능 ▶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연계한 경기도 정책 추진의 높은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시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책 인프라 격차 존재 ▶ 경기도 광역과 31개 시군간 정책 연계를 위한 비전 및 발향 설정 부족 ▶ 도민들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 새정부 출범 공약(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경기,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등) 포함 ▶ 경기도 분도 논의에 따른 경기북부 인프라 및 인구증가의 기회 ▶ 4차산업 관심으로 추가적인 일자리 확보 가능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경기도 아동인구 지속적 감소 추세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 다양성 확대 ▶ 긴 직주거리, 일자리 확대에 의한 육아빈자리 및 공백 발생

□ 경기도 SWOT 분석에 의한 인구감소지역 전략 수립

○ 강점-기회(S-O)전략

- 경기도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한 기회 제공 강화
- 예술인 유입 정책을 활용한 인구정책 수립 필요
- 경기도 재원을 활용한 산업발전 토대 구축으로 일자리와의 선순환 구축
- 고령계층 대상 인구정책 강화 필요

○ 약점-기회(W-O)전략

- 지역간 고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형 standard 수립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연계형 인구정책 수립

○ 강화-위협(S-T)전략

- 기존 지역내 일자리 연계가 어려운 타 인구감소지역과 차별화된 인구정책(창업형, 기존 일자리 연계형, 지역자원 연계형) 수립
- 15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청년형 인구정책 수립
- 경기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 정책 수립

○ 약점-위협(W-T)전략

- leader 지역과 follower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벤치마킹 정책 길잡이 수립
- 일하는 부모가 원활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 내 돌봄체계 형성을 통한 함께하는 양육·경기 조성

2) 가평군

□ 가평군 SWOT 기반 발전방향

-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가평군의 경우 16.8%로 경기도 평균(61.6%을 하회 (2018년 19.7% 대비 2022년 16.8%로 감소)
- 관광자원 간 연계프로그램, 야간 관광인프라 및 음식거리 부족 등으로 경유형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이용,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필요
- 2021년 기준 30년 이상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23.3%, 연립주택이 18.5%를 차지

[표 4-2] 가평군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휴양림 및 군립공원의 생태힐링형 자연 자원 보유 ▶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전철(ITX) 연결로 접근성 향상 ▶ 재즈 페스티벌, 별빛(정원) 축제 등 문화관광 자원 보유 ▶ 귀농귀촌을 위한 전입인구 지속적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중심의 복지시설 집중.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확충 필요 ▶ 재정자립도 및 지역 총생산이 경기도 평균대비 낮은 수준 ▶ 학생수 감소 및 교육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한 청소년 유출 ▶ 체류형 관광인프라 및 프로그램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대비 정부 정책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정책 지속 지원 ▶ 근거리 관광수요 및 시니어계층의 관광 증가 ▶ 40세 이상 장년층 유입인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청년 등 장래 경제활동인구 감소 ▶ 농업인 및 경지면적 지속 감소, 농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 가평군의 총 부양비는 높은 수준 ▶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주민소득 증대 요구 높음

□ 가평군 SWOT 분석에 의한 인구감소지역 전략 수립

○ 강점-기회(S-O)전략

-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산업 투자 확대
-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전통산업 육성을 통한 다양한 지역산업군 육성
-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추진(중앙부처와 경기도청과의 협력)

○ 약점-기회(W-O)전략

-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리더 양성 및 농민역량 강화
- 지역 청년인재를 활용한 청소년 학습 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 강화-위협(S-T)전략

-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책지원 마련
- 청년 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지원 마련
-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약점-위협(W-T)전략

-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돌봄 환경 및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노인 건강, 문화, 체육, 교육, 복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복합문화체육센터 구축
- 마을 공동체 육성을 통한 농촌마을 협력화
- 농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 인구유입 촉진

3) 연천군

□ 연천군 SWOT 기반 발전방향

- 경기도 총인구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0.6% 증가한 반면에 연천군은 1.2% 감소하였고, 연령별 인구는 '23년 3월 기준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임
- 연천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접경지 및 외곽에 위치하여, 산업·문화·보육·의료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인비중이 경기

도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높음

- 연천군 주민들은 도로 및 의료시설에 현황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으며, 도로·의료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가장 큼
- 향후, 전철 및 도로 확충으로 수도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파주시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과 산업연계, BIX 자체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등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양질을 일자리 확대를 기대

[표 4-3] 연천군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및 경기 수도권에 위치한 입지조건 ▶ 사업체의 종사자수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 ▶ 유네스코2관왕 생태관광 자원 보유 ▶ 다수의 잠재 정주인구·노동력(군인)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수 천명 이상의 대기업 부재 ▶ 주민들의 낮은 생활환경 만족도 ▶ 취약한 기업 및 교육환경으로 청년인구 유출 ▶ 경기도 평균 2배에 달하는 노인비중 ▶ 연천군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부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연천 전철건설 완공('23년), 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강화 ▶ 군부대 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 활용 ▶ 경기도 총 인구 증가추세 ▶ BIX 산단 조성 등 기업유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화성 등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 군 재편으로 관내 주둔 군인 및 제대군인 감소 ▶ 금리인상,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한 위축된 소비심리

□ 연천군 SWOT 분석에 의한 인구감소지역 전략 수립

○ 강점-기회(S-O)전략

- 수도권 내에서 교통인프라 확장으로 생활인구 증가
-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관광·체육시설 강화로 인구유입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식품 바이오소재 관련 산단 조성

○ 약점-기회(W-O)전략

- 출산인프라 및 공공의료 기반강화
- 기업 지원사업으로 연천군 내 대기업 유치 전략 수립
-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체육시설 등을 제공

○ 강화-위협(S-T)전략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생태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
- 철도, 도로 확충,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증가

○ 약점-위협(W-T)전략

- 연천군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신설로 정주여건 개선
- 파주시, 동두천시 등 인근지역과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 제대군인 창업 및 일자리지원 정착 유도

2)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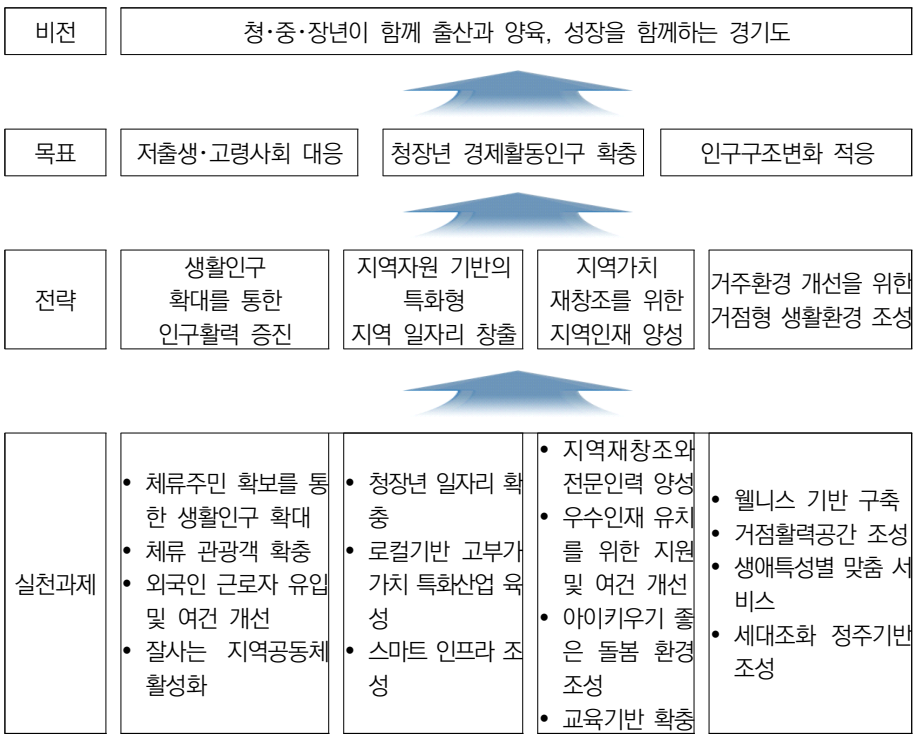
1)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 및 청·중장년 경제활동인구 대상 환경 악화
 - '21년 합계출산율(전국 0.81, 경기도 0.85),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
 - 혼인건수 지속 하락 등으로 출산율 더욱 하락 전망('24년 0.70명)
 - 경기도 생산연령인구는 '23년을 정점(1,001만명)으로 감소세 진입 예정
 - 노년부양비가 '20년 17.3명에서 '35년 40.6명으로 2배이상 증가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내에서도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비중이 증가추세
- 관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 현안 중심의 포괄적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제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자치단체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는 연도별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가평군, 연천군)의 인구소멸위험 대응 전략을 포괄하는 인구소멸위험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전략 제시 필요
 - 관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증가 개선
- 경기도는 청·중장년이 찾아오고 출산과 양육으로 연계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역 건설 필요
 -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원활한 생산력 증가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생산가능인구의 생활기반 수요 충족

- 도시 서비스 증대로 인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확보
 - 인구의 양적 팽창만이 아닌 지역 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건설
- 경기도 격차 완화
 -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에 있던 동일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지역 건설
- 살기좋은 경기도 건설
 - 고령층의 생활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확보로 자연인구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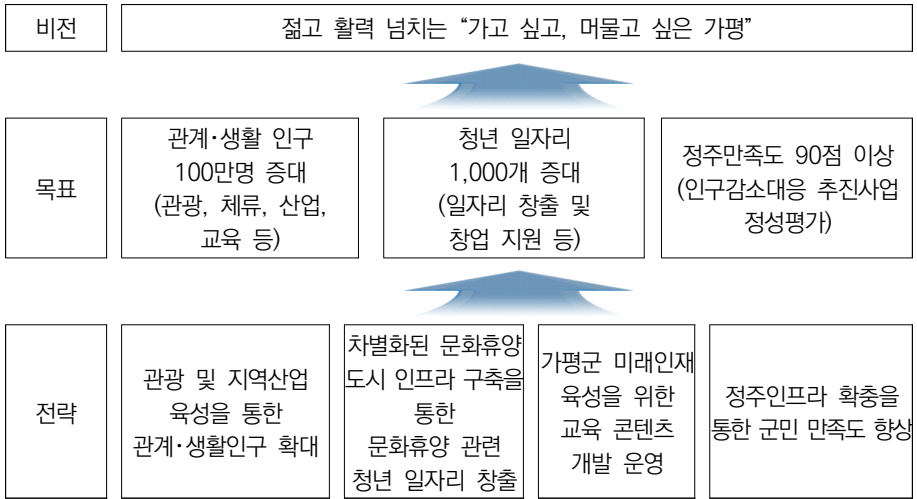
[그림 4-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2) 관내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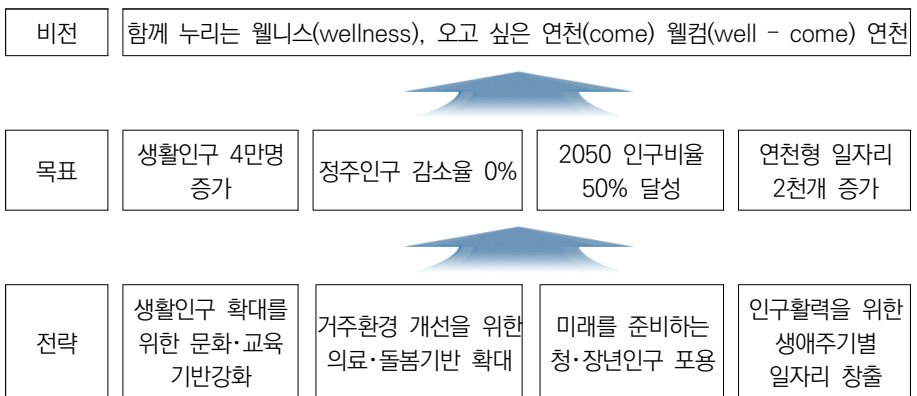
□ 가평군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그림 4-2]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가평군)



□ 연천군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그림 4-3]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연천군)



2)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목표 및 실천 과제

□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목표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 출산을 위한 일자리, 정주여건 등 환경 인프라 조성
- 고령층을 위한 주거, 일자리, 급식 등의 복지 증진

○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통한 미래 세대에 대한 기회 보장
- 학교밖 청소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

○ 인구구조변화 적응

- 더 나은 출산 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 정책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세대주기별/단계별 지원 확대
-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보

□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실천 과제

- 인구활력 증진
 - 체류주민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 체류 관광객 확충
 -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여건 개선
 - 잘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일자리 창출
 - 청장년 일자리 확충
 - 로컬기반 고부가가치 특화산업 육성
 - 스마트 인프라 조성
- 지역인재 양성
 - 지역재창조와 전문인력 양성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여건 개선
 -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 교육기반 확충
-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 웰니스 기반 구축
 - 거점활력공간 조성
 - 생애특성별 맞춤 서비스
 - 세대조화 정주기반 조성

3) 인구소멸위험 대응 추진 방향

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추진 방향

□ 더 나은 출산과 돌봄

-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임신·출산관련 건강관리
- 안정적인 보육과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성 확대
-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더 고른 기회의 청년

-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보장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성장 지원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창업 및 고용 안정 지원

□ 더 공감하는 인구 감수성

- 청소년기 합리적 인구가치관 형성과 시군 공무원 인구역량 강화
-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일상속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 강화

□ 더 안정된 인구 구조

-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농촌지역의 임신부, 출산 여성농업인, 영유아, 어린이까지 단계별 지원
- 어르신들의 일자리, 주거(안전 하우스), 상담, 무료급식 등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

2)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역점시책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 농수산물 공급 (22개 시군)
- **어르신 안전하우징**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주거공간 200호의 안전시설 보강과 주거환경 개선
-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 만19세 ~ 만 34세 도내 저소득 청년에게 해외연수를 통한 자기개발, 문화체험, 기업탐방 등의 프로그램 제공

3)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분야별 주요 사업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아빠하이! 운영: 3~10세 아동을 양육하는 남성 1,000명
 - 일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 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어린이 주1회 제철과일 공급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운영 지원 및 내실화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권역별 설치 및 운영지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 한방난임사업 지원: 난임부부의 선택권 다양화 지원

[표 4-4]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		
	계	도비	시군비 등
소계	396,242	197,002	199,241
경기도 아바하이! 운영	478	478	-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	220	220	
일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765	230	535
경기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인증	180	180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400	400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700	700	
성인지교육 및 성주류화정책 추진	150	150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운영	30	30	
성평등 캠페인 추진	10	10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67,056	47,552	119,50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23,065	19,890	3,175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66	1,466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671	201	470
아동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38	15	23
지역아동센터 지원	21,124	9,216	11,908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	20	20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872	263	609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2,400	1,200	1,200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1,317	15,659	15,659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6,000	3,000	3,000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		
공공임대주택 건설	-		
경기아이플러스카드(I-PLUS) 사업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966	1,589	1,377
경기도 학대피해아동 및 종사자 지원사업	175	175	-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 지원	40	40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1,435	524	911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8,767	8,767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	274	274	-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1,498	1,498	

사업명	2023년 예산		
	계	도비	시군비 등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40,190	28,130	12,060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1,720	1,200	520
한방난임사업 지원	972	972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2,075	24,227	7,8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177	25,472	10,705
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9,600	2,304	7,296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300	60	240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3,091	890	2,201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차지원(일몰)	-	-	-
학교 밖 청소년 1:1 멘토 - 멘티 운영 제도(일몰)	-	-	-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31개소
- 노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노인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시설 보강

[표 4-5]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		
	계	도비	시군비 등
소계	792,200	238,538	553,662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1,225	1,511	9,714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1,728	518	1,210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644	822	822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430	129	301
노인자살예방사업	3,150	1,575	1,575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35,910	3,591	32,319
경로당 운영 지원	29,017	2,902	26,115
노인 무료급식 지원	36,739	3,674	33,065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267,730	26,773	240,957

사업명	2023년 예산		
	계	도비	시군비 등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359,130	179,565	179,565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503	151	352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	10,926	8,140	2,786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3,750	1,375	12,375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1,432	1,432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6,039	4,812	11,227
어르신 안전 하우징	1,020	1,020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680	204	476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1,147	344	803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온·오프 실시간 평생학습
-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미취업 청년과 기업 매칭
-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취준생(100명) 역량개발
-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대학연계 연구개발
-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저소득 만19~34세 해외연수 등
- 장애인 누림통장: 만29~21세 월 10만원 이내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소
-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지원: 중장년 훈련 및 컨설팅

[표 4-6]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		
	계	도비	시군비 등
소계	304,974	249,615	55,359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	2,450	1,555	895
성인문해교육 운영	140	140	-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2,000	2,000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700	700	-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1,000	1,000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사업	3,800	3,800	
경기청년 깎이어 프로그램 운영	4,140	4,140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1,924	1,924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4,140	2,070	2,07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39,723	97,806	41,917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	20,001	20,00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85,086	85,086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1,190	11,190	
경기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4,342	1,428	2,914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2,880	864	2,01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58	158	
여성고용안정 지원	101	101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151	151	
여성창업 지원	1,682	1,185	497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500	500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기술닥터사업)	6,253	2,506	3,747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지원	6,560	6,560	-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1,000	1,000	-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1,189	1,189	
시군 5060 신중년 사업 지원	1,862	559	1,303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2,002	2,00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제외)	-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지역소멸대응 추진: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활력 증진
- 인구교육 운영: 합리적 인구가치관 교육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배달·대리기사 보험료 80%
- 주택수급체계 조정: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표 4-7] 경기도 주요 분야별 사업(1인가구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		
	계	도비	시군비 등
소계	682	205	477
미혼모 원스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90	9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거점기관 구축 및 운영	340	340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586	141	445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354	95	259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323	72	251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130	39	91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157	41	116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236	71	165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853	256	597
경기도 외국인주민인권지원센터 운영	882	88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2,443	733	1,710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108	32	76
경기도 인구교육 운영	110	110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490	490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3,206	3,206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35,485	17,780	17,705
장애인 기회소득	1,000	1,000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485	485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6,720	4,704	2,016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182	182	
주택수급체계 조정(빈집의 효율적 관리, 활용 시범사업)	1,028	308	720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	140	140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918	918	

4 기초단체별 인구소멸위험 대응 분야별 주요 사업

1) 가평군 인구감소 대응 사업

□ 정책 추진방향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저출생 완화를 위한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 결혼장려 및 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강화
 -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강화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누구나 정착할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
 - 청년가구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주민 소통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인구활력이 넘치는 가평
 -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탄탄한 기반 구축으로 인구활력이 넘치는 도시 조성

□ 역점시책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 30만원 지원
-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사업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 진찰 교통비 최대 3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관내 거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2) 연천군 인구감소 대응 사업

□ 정책 추진 방향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3.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명확한 인구대책 수립
- 인구감소 대응위원회를 조성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
- 인구감소지역에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 생활인구의 확장 및 젊은 연천 회복을 위한 가임기 청년 중심 정책

○ 교통개선에 따른 생활인프라 구축

- 2023년 개통 예정인 경원선 전철 및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준공 예정에 발맞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

○ 살기좋은 연천, 젊은 연천

- (살기좋은 연천) 주거환경, 교육, 육아, 문화여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한 소득 증대 실현으로 살기좋은 연천 조성
- (젊은 연천)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를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 확대로 젊은층이 정착하는 연천 조성
- (목표) 단기적으로 '인구 지키기', 장기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소멸 위기 탈피

□ 역점시책

○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지원사업

-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모자보건 증진을 도모함

- 관내 생후 8개월 이내 영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2~3회(생후 2,4,6개월), 수막구균 예방접종 4회(생후 2,4,6,12개월) 전액 비용 지원

○ 신혼부부 임신전 검사비 지원사업

- 신혼(예비)부부의 건강검진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지출을 사전 예방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지나친 사용을 줄이고 연천군의 출산율 증가와 함께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도모함

○ 학력증진 멘토링사업(미라클아카데미)

-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영·수 현장강의 및 입시대비 특강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50명 한정 수강생을 선발하여 국·영·수 강의 및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 지원

5 소결

1)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 지원 전략제시

- 2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 및 청중장년 경제활동인구 대상 환경 악화
 - '21년 국내 합계출산율(전국 0.81, 경기도 0.85),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
 - 혼인건수 지속 하락 등으로 출산율 더욱 하락 전망('24년 0.70명)
 - 경기도 생산연령인구는 '23년을 정점(1,001만명)으로 감소세 진입 예정
 - 노년부양비가 '20년 17.3명에서 '35년 40.6명으로 2배이상 증가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내에서도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비중이 증가추세
- 경기도 청·중·장년이 찾아오고 출산과 양육으로 연계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역 건설 추진
 -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증대
 - 원활한 생산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생산가능인구의 서비스 수요 충족
 - 도시 서비스 증대로 인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확보
 - 인구의 양적 팽창만이 아닌 지역 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건설 추진
 - 경기도 격차 완화
 -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여건 개선
 - 살기좋은 경기도 건설
 - 고령층의 생활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확보로 자연인구 확보
-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목표 제시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 출산을 위한 일자리, 정주여건 등 환경 인프라 조성
 - 고령층을 위한 주거, 일자리, 급식 등의 복지 증진
 -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통한 미래 세대에 대한 기회 보장
 - 학교 밖 청소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

○ 인구구조변화 적응

- 더 나은 출산 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 정책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세대 주기별/단계별 지원 확대
-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

2) 효과적인 인구소멸지역 지정 자치단체 정책지원 방안 제시

□ 향후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 (경기도 인구감소 지역 지원 조례 제정)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등을 도 조례로 제정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는 중앙부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분야와 방향성을 같이 하되, 경기도의 차별적인 특성 반영 필요

- 반면, 지속적인 경기도의 인구 증가로 인해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주목적
- 일자리, 정주여건에 대한 차별적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운영 방안 설정

□ 공약사항 및 경기도 숙원사업과의 연계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약사항과의 병렬 구조로 운영

-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북부특별자치도와 병행하여 지역의 자립권을 부여하며,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운영

○ 경기남북부 격차 해소, 군사제한시설, 접경지역, 수도권 보호구역에 대한 중첩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운영

□ 인구소멸위험지역내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입지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추가적인 검토 필요함

○ 또한, 한시적인 법인세 면제 혜택 부여 등 검토 필요함

05

부문별 전략사업(안)

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전략사업 추진 개요
2. 광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주요사업 선정 및 법제화(안)
3. 기초자치단체 부문별 전략사업(안)

제5장 부문별 전략사업(안)

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전략사업 추진 개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인구대응 기본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자치단체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는 연도별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의 기본계획을 수렴하여 광역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경기도는 관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가평군, 연천군)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광역 포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제시한 전략사업을 포괄하여 전략사업을 제시함
- 관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가평, 연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 포괄 인구감소대응 계획 수립
 - 상향식(Bottom-up) 방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자체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계정 인구소멸위험 대응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과제 및 부문별 실천과제 도출 및 제시함
 - 따라서 5장에서는 경기도 광역계정 사업 선정 방식을 제시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가평군, 연천군)에서 제시한 자체 실천과제 사업을 경기도 부문별 전략에 따라 재분류하여 실천과제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

2) 광역 인구소멸위험 대응 주요사업 선정 및 법제화(안)

1) 인구소멸위험지역 주요 사업 선정 방안 설정

(1) 우선순위 사업 대상

- 인구증대 및 인구감소 상쇄를 위한 지원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대표 운영 사업과 광역 중심의 사업으로 구분
 - 경기도 중심의 광역계정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된 4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우선순위 선정 대상사업으로 구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소멸기금 기초계정을 중심으로 판단
- 가평군 및 연천군 인구감소 사업은 총 181개 사업으로 구성
 - 가평군: 캠핑메카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등 총 14개 사업
 - 연천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조성 및 운영 등 총 167개 사업
 - 따라서, 전체 181개 사업 중 경기도 투자계획서 상 4개 사업을 제외한 177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추가예산 편성에 대상 사업으로 구분

(2) 우선순위 사업 지원 금액

- 경기도의 소멸기금(광역계정)에 의한 사업 구분
 - 경기도 광역계정(4.84억원)에 의한 소멸기금 배분으로 가평군 및 연천군 인구감소사업 중 중점 사업에 대한 지원
 - 가평군: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1억원),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사업(0.42억원),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1억원) 총 3개 사업
 - 연천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2.42억원) 총 1개 사업
- 가평군 및 연천군 대상 경기도 추가예산 편성 (안)
 - 인구감소사업에 대한 경기도 추가적 지원 재원 마련
 - 소멸기금(광역계정) 외 추가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향후 지역의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3) 우선순위 도출 기준

□ 부합성

- 인구감소지원 사업 의의에 부합되는 정도
- 지역에서의 숙원사업이 아닌 인구감소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사업

□ 시의성/시급성

- 지역의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며, 향후 미래 인구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의 운영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
 -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운영으로 인해 향후 인구감소 속도가 감소되거나,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중복성

-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금사업과 타 사업과의 중복 정도
 - 연계사업의 활성화 정도는 용인될 수 있으나,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

□ 실효성

- 추가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인구감소 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향후 지역의 인구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의 경기도 인구 감소기금(광역계정)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4) 우선순위 지원사업 선정 과정

□ 사업 구분

- 전체 사업 list up
 - 전체 대상 사업 181개
- 전체 사업 중 경기도 소멸기금(광역계정) 도출

- 가평군 및 연천군 경기도 소멸기금(광역계정)지원 사업 대상은 4개로 압축
- 광역계정 중복 사업 도출 및 제외
 - 대상 사업 177개 사업 list up
- 우선 순위 도출 기준 적용
- 사업의 계획, 과정, 집행(기대효과)로 구분
 - 개별사업별 부합성/시의성/중복성/실효성으로 구분
- 연구자별 선정
- 경기도 추가예산 편성으로 인한 우선 순위 지원 사업 선정은 개별 연구자들의 평가를 토대로 선정
 - 현 과업을 수행 중인 내/외부 3인의 의견을 기준으로 선정
- 반면, 향후 우선순위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방법 개편 필요
 - 반면, 현재의 우선순위 지원사업 선정 방법은 사업선정의 시급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외부 연구진으로 간소화하여 진행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사업 운영 및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경기도 주관하에 우선순위 지원사업 평가단 (안)을 구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5) 경기도 추가예산 편성으로 인한 우선 순위 지원 사업 선정 결과(안)

- 가평군 추가 지원(안)
- 경기도 추가예산 편성에 따른 가평군 우선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조성, 힐링&행복 종합복지센터, 캠핑메카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순으로 선정
 - 전체 14개 사업 중 광역계정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 3개를 제외한 11개 중 6개 사업 선정

[표 4-8] 경기도 추가 예산 보조를 대상 인구소멸위험 지역 사업 가평균 예

연번	사업명	기금 (광역)	기금 (기초)	우선 순위
1	캠핑메카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	2	3
2	설악 눈매골 힐링둘레길 조성사업	.	4	4
3	가평군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사업	.	.	6
4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	.	.	.
5	가평 재즈 시티 프로젝트	.	.	.
6	솔지음 양조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3	.
7	북한강 천년벚길 조성사업	.	1	.
8	북한강 마리나 건립	.	.	.
9	지역인재를 활용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	.	.
10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	.	.
11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사업	○	.	.
12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	.	5
13	영유아 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조성	.	.	1
14	힐링&행복 종합복지센터	.	5	2

□ 연천군 추가 지원(안)

○ 경기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가평군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체 167개 사업 중 광역계정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 1개를 제외한 166개 중 상위 10개 사업 선정
- 반면, 연천군에서 기 신청한 애견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2순위), 문화,교육 복합시설 IDEA(이테아) 건립(4순위) 사업은 167개 사업과 상이하여 제외

[표 4-9] 경기도 추가 예산 보조를 대상 인구소멸위험 지역 사업 연천군 예

연번	사업명	기금 (광역)	기금 (기초)	우선 순위
78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지역 삶의 질 강화			1
83	접경에서 중심으로(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53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단체지원			3
76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4
71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복지 서비스			5
158	청년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			6
163	1인 1기능(맞춤형 일자리 교육)			7
95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			8
106	원주민과 귀농·귀촌 이주민 간 갈등해소			9
31	인구유입을 위한 연천군 한달살아보기 지원			10
74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	○		
112	연천 친환경 도시근로농업 확대		1	
159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센터 건립		3	

2)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안)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등을 도 조례로 제정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는 중앙부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분야와 방향성을 같이 하되, 경기도의 차별적인 특성 반영 필요
 - 반면, 지속적인 경기도의 인구 증가로 인해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주목적
 - 일자리, 정주여건에 대한 차별적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운영 방안 설정

□ 공약사항 및 경기도 숙원사업과의 연계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약사항과의 병렬 구조로 운영

-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북부특별자치도와 병행하여 지역의 자립권을 부여하며,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운영
- 경기남북부 격차 해소, 군사제한시설, 접경지역, 수도권 보호구역에 대한 중첩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운영
- 인구소멸위험지역내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입지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가점 부여
 - 또한, 한시적인 법인세 면제 혜택 부여

3 기초자치단체 부문별 전략사업(안)

1)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1) 가평군 전략사업(안)

가. 체류주민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사업

○ 추진목적

-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 달간 가평에서 실제 생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골살이와 농촌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 고취
-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획 실천을 위한 사전 정보수집, 기술습득, 농장방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각자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 가평의 정주환경, 경제환경, 농촌문화를 실제 체험하고, 귀농·귀촌 선협자와의 네트워킹의 장을 통해 귀농·귀촌을 위한 최종대상지로서 가평군을 선택하도록 하여 가평군 인구 유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 2026(3년간)
- 사업규모: 36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126백만원, 군비 54백만원, 민자 180백만원)
- 사업대상: 사업대상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 사업내용

- 참가자 선발
- 모집 홍보 계획
 -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농업교육포털 프로그램 등록을 통한 모집 홍보
 - 경기도 각 시군 및 서울시 각 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모집 홍보
 - 지역 매체(가평타임즈, 가평나우 등) 및 가평귀촌귀농신문을 활용한 모집 홍보
 - 가평귀농귀촌학교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한 모집 홍보

- 가평귀농귀촌학교 동문회 SNS(밴드)를 통한 모집 홍보
-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모집 홍보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모집 홍보
 - 서울 및 경기권 현수막 게시대를 통한 모집 홍보 (홍보비 집행)
 - 사회적협동조합공감21의 거래처(펜션)와의 협력을 통한 모집 홍보
 - 가평군과 MOU를 맺은 서울시 강남구, 은평구 및 성남시와 협력을 통한 모집 홍보
 - 내부강사 및 멘토단을 활용한 모집 홍보
- 기타 모집 홍보
 - 가평귀농귀촌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모집 홍보 프로모션 진행
 - 개인 SNS 계정에 모집 홍보 게시글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한 혜택 제공
- 팀 구성 및 지도교수
 - (팀 구성) 귀농·귀촌의 유형(귀농형, 귀촌형, 창업형, 혼합형)이 유사한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토론과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팀당 3명으로 구성)
 - (지도교수) 개인별(팀별)로 진행되는 귀농·귀촌프로젝트 수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점검 및 지도, 주간 체험공유회 운영, 개인별 주간 결과물(블로그) 점검, 개인별 결과보고서 작성 지도 등
 - (운영담당)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 행정업무 담당. 사업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최종발표회 및 평가진행, 기타 운영에 필요한 기안·문서 발송 등
- 프로젝트 결과물 기록(블로그 or 밴드 활용)
 - (기록방법 1)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1일간의 활동내역과 사진, 느낀점, 시사점 등을 수시로 작성하여 게시토록 함
 - (기록방법 2) 가평살아보기 밴드를 개설하고 1일간의 활동내역과 사진, 느낀점, 시사점 등을 수시로 작성하여 게시토록 함
 - (기록지원) 블로그 작성 or 밴드가 서툰 참가자의 경우 운영진(공감21)에서 별도 교육을 하거나 팀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관리방법) 지도교수가 1주일 단위로 개인별 블로그 or 밴드내용 점검
 - (활용방안) 사업 종료시점에 개인별 「가평 한달 살아보기 체험 수기」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데 활용
- 공유회 및 발표회

- (주간 체험공유회) 1주간 진행한 체험에 대해 매주 마지막날에 참가자간 상호 공유하는 시간. 주간단위 진행상황 공유 및 의견교환
- (최종결과 발표회) 본 사업의 최종 결과물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으로 참가자 개인별 귀촌귀농 계획 및 참가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관계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및 평가)
- (최우수 참가자 시상) 최종결과 발표 평가로 선정
- (공모전 제출) 우수한 발표자들을 선발하여 귀농귀촌 공모전 또는 신문보도에 제출
- 사후관리 계획
 -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생성 및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 귀농·귀촌 선배 수료생과 1일 워크샵 진행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제공
 - 가평귀농귀촌학교 멘토단을 통한 멘토 지원 상시 제공
 - 지역강사를 통한 멘토 지원 상시 제공
 - 이장협의회와 귀농·귀촌자 마을 안착을 위한 지원
 - 가평군농민단체협의회와 귀농·귀촌자 마을 안착을 위한 지원
 - 공감21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정보 제공
 - 가평귀농귀촌학교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상시 제공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공감21을 활용한 일자리 연계 지원
 - 가평군펜션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 연계 지원
- 재정지원 연계방안
 -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사업은 가평의 정주환경, 경제환경, 농촌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최종대상지로 가평군을 선택하도록 하여 가평군 인구 유입 촉진하고자 함
 -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통해 농촌체험휴양 마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운영 할 예정
- 성과 목표
 - 가평에 대한 호감 형성과 가평으로의 귀농·귀촌 및 창업 결심 유도
 - 귀촌·귀농 인구의 유입으로 가평군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
 - 농어촌 민박과 관광체험 소득을 증대하고 마을의 유휴자원 활용
 - 지역체험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

나. 작지만 강한 연결-체류 관광객 확충

□ 가평 재즈시티 프로젝트

○ 추진목적

- 앵커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가평만의 킬러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4년간)
- 사업규모: 10,000백만원(지방소멸기금 6,000백만원, 지방비 4,000백만원)
- 사업대상지: 음악역 1939 일원

○ 사업내용

-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들을 가평을 기반으로 활동하도록 지속적인 관계형성 및 지역기여 사업의 토대 마련을 위해 레지던시 프로그램 필요
- “앵커스페이스 조성” 가평 글로벌 재즈 센터 조성
 - 레지던시 및 스테이 공간, 연습공간 및 발표공간
 - 지역 특화 식음료 판매 공간
 -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 사무실 및 편의시설
 - 재즈박물관
- “자라섬 재즈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창작기반) 연습실 제공 및 음반제작 지원(음악역 연계)
 - (체류지원) 참여자에게 소정의 체류비와 숙식 제공
 - (지역공헌)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참여 (마스터클래스)
 - (활동지원) 평가 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라인업 선정(4팀)
 - (성장지원) 가평 재즈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인증 및 활동 컨설팅
 - (정착지원) 향후 재즈 예술촌 등의 정착 사업으로 확대 가능
- 지역 상권 협력형 재즈 굿즈 개발
 - 가평 재즈를 테마로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브랜드 네임, CI, 캐릭터, 폰트, 디자인)을 통해 가평을 통합하는 브랜드 개발
 -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화 가능한 상품 발굴을 통합 협력형 지역 특화 상품 개발

- 지역 상품을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관람객 및 아티스트가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간 상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로컬 마켓을 연계한 온라인 판매 추진
 - 지역의 상권과 연계하여 워케이션과 레지던시,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관람객에게 정보 및 할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가평 아시아 재즈 네트워크 운영
 - 아시아 재즈 네트워크, 포럼 등의 활동을 개최.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재즈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가평이 아시아 재즈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내 문화예술 마켓이나 행사의 일부를 가평으로 유치하고, 세계의 예술 관계자들이 가평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계
- 재정지원 연계방안
- “가평 재즈시티 프로젝트”은 경기도의 “청춘역1979 페스티벌” 및 가평군청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음악역1939 G-SL”와 연계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 할 예정
 - “청춘역 1979 페스티벌”을 통해 싱어송가요제 및 대규모 공연 진행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음악역1939 G-SL”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 초청 및 대규모 뮤직페스티벌 운영
- 성과 목표
- 페스티벌 참가자들과 가평과의 지속적 관계형성을 위한 거점 공간
 - 앵커스페이스 조성, 워케이션,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가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뮤지션 증가
 - 센터 및 워케이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캠핑메카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 추진목적
- 가평군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캠핑인프라 확대
 - 관광객 유입으로 생활인구 증대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규모: 6,050백만원(기금 6,00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 사업대상지: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431-1번지(호명호수공원 내)

○ 사업내용

- 에코캠퍼밸리(Eco Camper Vallley) 조성으로 캠핑인프라 고도화
 - 자연환경, 친환경 문화체험, 농촌체험, 캠핑체험, 관광휴양을 즐길 수 있는 에코캠퍼밸리 조성
 - 자라섬연인산 캠핑장, 호명호수공원, 잣나무 숲 캠핑장 등 지역 캠핑장을 분산 활용한 국제캠핑대회와 국내캠핑대회를 격년제로 매년 개최
 - 국내외 캠핑대회 시 참가자가 지역 캠핑장에서 분산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캠핑 시 불편했던 생활편의시설(세탁시스템 등)을 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
 - 캠핑 입문에서부터 전문교육,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진 육성
 - 캠핑 및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 Eco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림 5-1] 에코캠퍼밸리(Eco Camper Vallley) 조성으로 캠핑인프라 고도화



캠핑 페스티벌 개최



Eco 캠핑 학교 운영

- 캠핑산업과 다양한 지역관광상품 연계
 - '체류인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수여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캠핑장비 렌탈샵 운영, 캠핑학교 전문강사 육성, 로컬푸드매장 및 기념품매장 운영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전통문화, 지역특색을 살린 고유한 스토리를 살린 지역관광상품 개발
 -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캠핑 푸드 개발로 실질적 지역경제 창출

- 고택, 마을회관 등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이색 숙소 조성 및 숙박여건 개선
- 재정지원 연계방안
 - “캠핑메카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사업은 캠핑체험, 관광휴양을 즐기고 에코캠퍼벨리를 추가 조성하여 국제캠핑대회와 국내캠핑대회를 격년제로 매년 개최하여 연간 23만 명 이상의 관광객 확보
 - 가평군청은 “상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갯나무 숲 캠핑장 조성사업”등의 사업과 연계 추진 예정
- 성과 목표
 - ECO 캠핑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체류인구 증대
 - 캠퍼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다양한 테마 이벤트로 수도권 캠핑 메카로 도약
 - 관광수요와 캠핑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북한강 천년벚길 조성사업

- 추진목적
 - 북한강 벚길 복원과 관광스팟 연계 코스개발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 북한강 나루터 정비와 나루터인근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07. ~ 2024. 09.(5년간)
 - 사업규모: 총 사업비 52,4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9,234백만원, 군비 6,171백만원, 민간 37,006백만원)
 - 사업대상지: 가평군 가평읍, 북장리, 남면, 설악면, 청평면 등 북한강 수변 일대
- 사업내용
 - 북한강 벚길 복원
 -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청평호반 숨은 관광자원을 명소화
 - 북한강 내 주요 관광거점, 소외지역을 수상-육상 교통 노선이 연계되는 광역적 벚길노선 마련
 - 북한강 수상교통 노선 및 주변 민간사업자장과의 안전성 확보사업
 - 북한강 나루터 정비
 - 북한강 역사 속 주요 나루터 복원과 자람섬, 남이섬 등 관광거점 내 나루터 신설
 - 지역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각 선착장 별로 특화된 컨셉 및 도입기능 부여

- 친환경 수상-육상 교통의 전환을 위한 주차장, 전기충전소, 전기차 및 순환버스 정류장 등 도입
 - 기존 선착장 정비 및 공공·민간 선착장 신설로 연계관광 거점 형성
 - 육상교통과 연계, 수상레저시설, 관광마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자라섬, 남이섬, 물미연꽃마을, 뿌띠프랑스 등의 북한강 뱃길 관광스팟과 수상레저,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 상품개발(바우처 할인권, 원데이 프리패스, 스템프 투어 등)
 - 뱃길과 나루를 활용한 유람선 관광루트와 순환버스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코스 개발
 - 경춘선 청평역, 가평역, 백양리역의 육상교통과 연계하여 육로로 접근이 어려웠던 숨은 명소들을 관광코스로 개발
- 친환경 유람선 운항
- 북한강의 수변환경을 위해 친환경 유람선 건조
 - 관광, 체험, 숙박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 유람선 승무원, 선착장 운영직원, 선박유지보수 관리원 등 신규 채용
 - 유람선 선착장을 통한 관광유입인구를 상대하는 카페거리, 음식점, 체험시설, 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 등 지역주민 수익 창출
 - 친환경 유람선과 나루터 순환 투어버스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 런치·디너뷔페, 음악공연, 선셋·불꽃 크루즈 등 관광유람선 활성화
- 재정지원 연계방안
-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은 북한강 순환로트를 이용한 새로운 테마 관광사업으로서 뱃길 복원을 통해 수변지역 개발 및 지역발전 마중물 역할을 담당 함
 - 환경부는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민간과 “북한강 유도선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예정
- 성과 목표
- 각각의 관광명소를 연계한 북한강 뱃길 조성과 유람선 운행으로 친환경 수변생태관광 활성화
 - 새로운 자연생태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을 가평군 관광객 방문 증가
 - 신규 일자리 확대, 관광 수입증대,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 추진목적

-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 귀촌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 2026(3년간)
- 사업규모: 3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300백만원)
- 사업대상: 사업대상 : 128개 리 및 관내 공동체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리더 대상 교육 지원, 공동체 소통역량 강화, 마을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공동체 활동 지원
- 마을 자립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마을 발전계획 수립 완료 마을
 - 사업목적: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의 자립
 - 사업내용: 마을별 자원 및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관련 국·도비 사업 연계해 지속가능한 마을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소통 전문가 교육 개최
 - 교육대상: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 주민 및 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주민 등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공동체 업무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
 - 사업목적: 마을·공동체 구성원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사업내용: 마을리더, 공동체 활동가, 공동체 업무 관련 공무원 대상 소통 전문가 교육을 개최하여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의사 소통 기술(퍼실리테이션) 습득을 지원함
- 마을·공동체 워크숍 개최
 - 사업목적: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주민 대상 공동체 교육 및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업내용: 마을 공동체 사업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이 모두 모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 마을 발전계획 수립 지원
 - 사업목적: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계획 수립 지원(위탁형 용역 지원)
 -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교육 및 주민주도의 중·장기 마을 발전계획 수립 지원

○ 재정지원 연계방안

-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과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 농촌 마을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및 교육 전담기관을 운영할 예정

○ 성과 목표

- 마을·공동체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 역량 강화
- 리더 대상 심화교육, 워크숍 등 교육지원
- 공동체 사업 참여 유도 및 활성화
-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2) 연천군 전략사업(안)

가. 체류주민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 인구유입을 위한 연천군 한달살아보기 지원

○ 추진목적

- 생애전환을 원하는 귀농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추세
-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처하는 귀농귀촌 정책프로그램 도입 필요
- 연천군 한달살이 체험을 통한 귀농귀촌 희망자의 인구유입 기대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이외 거주자로 한정(만18세이상), 2회/년(1달)
- 사업비: 60백만원(20명×3백만원/월), 년2회(5월, 10월)
- (1인)체험비: 150만원, 숙박비: 90만원, 실습비: 60만원

○ 사업내용

- 중장년위주 4050세대에게 자유로운 연천살이 제공

- 문화, 관광,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경험제공
- 숙박비(체험마을, 게스트하우스 등), 실습체험비 등 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준용하여 지원

○ 성과 목표

- 막대한 귀농귀촌 희망단계에서 확정적, 안정적인 귀농단계로 유도·유인하여 연천군 인구유입에 기여

□ 연천군 농촌인력지원 사업

○ 추진목적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 사업개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사업기간: 2023. 3. ~ 2023. 12.
 - 사업비: 206백만원(군비)
 - 운영방법: 신청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인력수급: 외국 지자체 MOU체결 및 결혼이민자가족 추천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사업기간: 2023. 3. ~ 2023. 11.(9개월)
 - 사업비: 326백만원(국비 25%, 군비 75%)
 - 운영방법: 연천군농업인단체협회 위탁 운영(일/40명)
 - 농업인력 수요시기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업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일/40명)

○ 성과 목표

- 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농가의 계획적 농업경영
- 농작물 적기 파종·수확으로 농가소득 향상

□ 케어팜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 추진목적

- 한국형 농촌요양시설과 농촌관광의 미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연천형 케어팜(농업+복지) 사업을 구현
- 농업의 대형화 및스마트팜 추세 등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
- 케어팜은 네덜란드에서 환자 복지와 농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1,400개가 운영 중임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일원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 사업비: 6,0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 국비 50%, 군비 30%, 민자 20%
- ICT 기반 스마트팜 육성 및 보급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육성
- 본 사업을 연천형 보급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치매(노인) 환자이거나 자폐 환자, 장기실업자 같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농장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 케어팜의 상당수는 데이케어형(방문형)으로 매일 또는 1주일에 2~3일씩 방문, 거주형도 조성되어 방문형보다는 거주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케어와 함께 농장 운영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가공 판매와 찻집 운영 등으로 추가적인 운영재원을 조달
 - 동물을 키우고 농장에서 채소를 키워 케어와 더불어 농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판매 수익 창출)
- 사업 주요내용
 - 시범 농가 3개소 지정 및 운영 : 1개소당 10억 × 3개소 = 30억

○ 성과 목표

- 농업과 복지의 융복합화를 통한 연천군의 최초 신규 정책 모델 구축 기대

- 생활 SOC 복합화사업을 보다 다양화 및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모티브 제공
-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기대

나. 작지만 강한 연결-체류 관광객 확충

□ 지역체육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농촌관광기반 조성

○ 추진목적

- 생태환경, 목가적 농촌 경관과 더불어 참여 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체육동호회, 학교·직장운동경기부 등이 관내의 다양한 체육인프라 이용을 위해 유입 되도록 체육 및 농촌체험이 융합된 기반 조성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소규모 공공시설 41개소(도로 15, 세천 26)
- 사업기간: 2022. 10. - 2023. 12.
- 사업비: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승마장 조성을 통한 민간 농촌관광휴양단지 활성화
- 친환경 스포츠 산악자전거(민간 및 공영) 코스 조성
- 공공승마장 조성을 통한 민간 농촌관광휴양단지 활성화
- 친환경 스포츠 산악자전거(민간 및 공영) 코스 조성
- 1단계 : 산악자전거 코스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2단계 :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및 한국산악자전거연맹 MOU 체결
- 3단계 : 산악자전거 수리 및 정비 등 클러스터 구축

○ 성과 목표

- 소비성 위주의 단순목적 여가개념이 아닌 체험과 휴식, 교육과 건강이 어울러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추구하여 올레길 및 둘레길과 같은 걷기체험, 캠핑 및 전문화된 스포츠 연계된 참여형태의 목적지향적 여가패턴이 정착

□ 솔지움 양조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 추진목적

- 양조 교육·체험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교육

- 가평의 농산물을 활용한 테마카페 운영으로 지역 소득 증대
- 예비 양조 청년 창업인 유입·육성으로 생활 인구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 2025(2년간)
- 사업규모: 2,100백만원(기금 1,400백만원, 군비700백만원)
- 사업대상지
 - 가평군 상면 덕현리 129-8번지 공유양조벤처센터(술지움)
 - 지상2층, 부지면적 3,045㎡(921평), 건축연면적 981.19㎡(296평)

○ 사업내용

-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조장 체험 운영
 - 양조장 자율 견학·해설 견학 코스 진행 및 시음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체험프로그램과 더불어 테마 카페 및 바틀샵, 기념품샵 쇼핑 유도
 - 산장 관광단지 및 근처 캠핑장, 리조트 숙박과 연계 관광 패키지 구성
 - 술 전문기관 연계, 기업대상 단체 견학 프로그램 진행
 - 가평 농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술 만들기 체험 과정
- 양조 장비를 이용한 창업 교육
 - 양조장 취업준비, 양조장 창업, 자격시험 준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양조사관학교, 양조전문과정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테스트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교육비 환급제도 등 마련으로 청년 유입 지원
- 테마카페 및 가평 술을 포함한 각지역 대표술 바틀샵 운영
 - 논알콜음료, 알콜음료, 양조관련 소품, 기념품 판매
 - 보틀샵에 마련된 한국 술의 다양한 구성, 주제별 구성을 통한 홍보
 - 주종별 시음회 및 품평회 진행과 함께 가평 특산물로 만든 푸드트럭 행사
 - 야외 테라스를 활용한 소규모 주류행사 및 콜라보행사 진행

○ 재정지원 연계방안

- “술지움 양조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양조 교육·체험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교육 진행, 가평의 농산물을 활용한 테마카페 운영으로 지역 소득 증대, 예비 양조 청년 창업인 유입·육성으로 생활 인구 확대 및 청년 고용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 가평군청은 “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 추진 예정

○ 성과 목표

- 양조설비 구동, 양조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테마카페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양조 교육 및 청년 창업 지원으로 생활인구 확대 및 청년 유입 인구 증대
- 인근 숙박업, 식음료업 등 관광 투어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대표 관광지로 도약

다.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

□ 원주민과 귀농·귀촌 이주민 간 갈등 해소

○ 추진목적

- 정부의 귀농·귀촌정책 추진, 도시민의 탈도시 거주의식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농촌이주자 증가
- 이와 같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와 이주자 간 생활문화 차이, 의식차이 등으로 인해 양자 간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화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연천군민
- 사업기간: 2020년 ~ 2026년
- 사업비: 2,0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 사업내용

- 연천군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정책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의 문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문제에서 출발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획이나 설계, 주민참여도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내생적 관점과 원칙에 입각해야 함
 - 특히, 연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주민을 주체로 하되, 연천군이나 경기도는 지역공동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연천군
 - 갈등 문제는 규범적인 주장과 설득이나 강제적인 규제 및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는 연천군과 주민간의 상호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함
 - 연천군민과 연천군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자발적으로 갈등해소에 협조를 하며, 따라서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높을 경우 연천군의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지역의 자 발성과 자율성을 조장하고 인정해 줄 때 연천군과 주민 간 신뢰를 높여 줌
 - 상호신뢰는 갈등해소를 위한 연천군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가 될 때 형성됨

○ 성과 목표

- 원주민과 이주민(도시민) 간 서로 다른 문화와 의식의 차이를 결합시켜 새로운 지역 문화 창조
-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화합의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은 물론 새로운 민-관의 협력관계 형성

라.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 로컬푸드 기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 추진목적

- 지역 푸드플랜은 1980~1990년대의 전세계적 식품사고, 중소농붕괴, 지역공동체 약화와 환경파괴 등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형 먹거리 체계로 인한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시작된 로컬푸드(짧은 거리 유통)와 대안 먹거리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 국가와 연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행프로그램 구축
-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효과적 수립·운영을 지원하고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도모
- 현재 연천군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단체급식, 공공급식, 직거래장터 등 각각 따로 농산물 수급 및 판매와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푸드플랜 수립 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이르는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 수립 추진이 필요
- 연천군 내 군납과 대규모 사업체들의 단체급식을 발굴하여 신규 로컬푸드 출하처의 확보와 추진도 시급함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전역
-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 사업비: 10,0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유통개선/지역단위푸드플랜 구축지원
 - 지방자치단체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지원: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연천군 푸드플랜 구축: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연천군 먹거리 실태조사 및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 연천지역 내 먹거리 공급의 안정성 및 안전성 수준 조사·분석: 주요 품목별 자급률 및 칼로리 자급률 분석,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 정책 연계 및 제도개선 추진
 -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군민의 먹거리 권리선언, 푸드플랜 및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 연천군 지역단위 푸드플랜시스템 구축
 - 연천지역 내 먹거리 공급의 안정성 및 안전성 제고: 자급률 목표 또는 칼로리 자급률 목표 설정, 안전성 제고 목표 설정(먹거리 안전 만족도 등) 등
- 실증연구 사업 추진
 -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도시락 배달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기관 연계 등)
 - 생활협동조합 또는 학교급식소 등과 연계한 공동체지원농업(CSA) 사업 모델 개발

○ 성과 목표

- 연천군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푸드플랜은 연천 군민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영양, 먹거리 안전, 식품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농정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연천군의 도농복합도시 장점을 심분 활용하여 연천군만이 할 수 있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도농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군민들에게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기대

2)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1) 가평군 전략사업(안)

가. 청·장년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정착 촉진

□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

○ 추진목적

- 전통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인재의 육성을 통한 생산·제조·개발·판매에 이르는 원스톱 거점 구축과 창업·창작,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 2027(5년간)
- 사업규모: 245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2,000백만원, 군비 450백만원)
- 사업대상지: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 사업내용

- 1단계(2023 ~ 2024): 기초 산업 육성 및 닥나무 가공창고 신축
 - 대 상: 닥나무·황축규 재배 희망 농가, 한지 재료 구입 희망 업체
 - 장 소: 관내 공유지 중 대상지 선정
 - 내 용: 농가 생산품 전량 수매(원목 및 가공), 가공창고 건립(수매농·임산물 보관 및 가공), 원재료 전국 판매(한지 재료 구입 희망업체)
- 2단계(2024 ~2025): 전통한지 양성소 신축 및 운영
 - 대 상: 수도권 소재 시민 매년 20명(청장년층)
 - 장 소: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 내 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성소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초급(1년), 중급(3년), 고급(5년) 과정으로 나누어 기초한지 및 전통한지 뜨기·전승 과정, 창호지 생산, 용도별 두께 조절 생산,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등록 지원 등
- 3단계(2026 ~ 2027): 전통한지 창업지원 및 지역축제 연계
 - 대 상: 교육프로그램 우수 이수자 중 발굴
 - 내 용: 교육 난이도별 수료자 창업지원 차등 적용, 양성소 내 공방 설비 유상 이용,

전통한지 활용 신제품 개발비 지원, 전통한지 관련 창업 지원 제품 홍보 및 우선 사용 등 후원

- 지역축제 연계사업 추진(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관내 개최 축제)

○ 재정지원 연계방안

-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은 전통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인재의 육성을 통한 창업·창작,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유입을 위해 국고보조 사업을 연계할 예정
- 고용노동부 “청년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확대”등의 사업과 연계 추진 예정

○ 성과 목표

- 기초산업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 안정화
- 전통한지 양성소 운영을 통한 관계인구 증대
- 프로그램 이수 우수자 한지산업관련 창업 활성화
- 제조공방 보관창고 관리인력, 관련 사업 간접 일자리 창출

□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취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전환 가능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가평군 거주 청년(만15~39세 미만) 및 관내 중소기업
- 사업량: 매년 10명
- 지원내역: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고 월 급여(생활임금 적용 230만원 이상)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급여 일정부분을 보전

○ 사업내용

- 관내 참여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 모집
- 3개월간 인턴십 협약 체결
- 청년 인턴십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 청년 및 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반영

○ 성과 목표

-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2024년 10명 추진 및 추후 확대)
 - 관내 청년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넓히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인구유출 방지

나. 로컬 기반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산업 육성

□ 가평군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사업

○ 추진목적

- 푸드플랜의 적극추진을 위해 필수조건인 저온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공공급식, 직매장, 가공·외식업체 등의 수요처에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먹거리 관련 일자리, 교육, 체험수단 창출
-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귀농·귀촌인구(관계인구) 유입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3(2년간)
- 사업규모: 515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425백만원, 군비 90백만원)
- 사업대상지: 가평읍 승안리 126-1, 126-2

○ 사업내용

- 안정된 먹거리공급의 선순환을 위한 농산물 저온체계구축
 - 농산물 저장과 유통과정의 품질저하 방지 및 유통기간 연장, 상품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 규모: 저온저장고(165㎡)
 - 관내 계약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하여 저온저장고에 보관 및 소비처(공공급식 등)에 신선하게 유통·납품
- 저온저장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산물 수거: 1일 4~5명, 농산물 선별시설: 1일 6~7명 (연중소요)
- 관광객 대상 로컬푸드 유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관광객 대상 로컬푸드 기획상품(바베큐용 등) 제작 및 판매
- 관광객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군 방문 시 현장에서 수령

○ 재정지원 연계방안

- 가평군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사업”은 푸드플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 직매장, 소비처(공공급식소 등)에 공급하여 군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화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등 지역먹거리를 활성화 하고자 함
- 공공급식소 급식재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및 복지재단 등과 협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에서 지역가공품 생산 등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예정

○ 성과 목표

- 안정된 먹거리공급의 선순환을 위한 농산물 저온체계구축
- 푸드플랜 확대를 통한 안전 먹거리 공급률 향상
- 푸드플랜 참여농가 증가율
- 푸드플랜 참여자 만족도 향상

(2) 연천군 전략사업(안)

가. 청·장년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정착 촉진

□ 청년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

○ 추진목적

- 초고령화로 인한 도심의 활력이 줄어들고, 청년층의 비율도 축소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상황
- 지역 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출신자 청년의 지역 내 정착 및 가구 구성 등이 반드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22~`26년
 - 사업계획 선정 이후 단계별 진행
- (규모) 4,849㎡ (1,433평)
 - 연천군민회관 (군 소유부지)
 - (대상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449-1

○ 사업내용

- 청년 주택 20호 이상 구축과 함께 일자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축 운영
 - 1층과 2층에는 혁신 경제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거주자 문화,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유희공간 활용으로 창의적 경제활동 도모 체계 구축
 - 3층과 4층은 스터디 센터와 소그룹회의실을 조성하여, 재택근무의 특성을 살리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라이브커머스 시설 구축하여 다목적 다기능 스터디센터 조성을 지원
 - 5층과 6층은 현대화된 주거 편의공간 조성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

○ 성과 목표

- 청년들의 일자리와 함께 청년주택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인 1기능(맞춤형 일자리 교육)

○ 추진목적

-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고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교육 실시
-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2025년
- 연천군 기술학교 운영: 84백만원
- 5060신중년 교육 프로그램(국가자격증 연계)
- 과정명: 조정전지위험물식품가공측량기능사
- 중장비 운전기능사 과정: 2개 반, 7개 기수, 총 70명
- 통일평생교육원 정기프로그램 운영: 288백만원
- 자격증·기술·취미교양 분야 40개 과정 50개 반(상·하반기 1,200명)
- 통일미래대학 운영: 52백만원
- 4개 학과, 학과별 10회 교육 및 1회 견학, 총 120명
- 학과명: 리더스포럼학과, 연천학과, 세종학과, 효·인성학과
-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도) 운영: 20백만원

- 3개 분야(청소년, 성인, 특화) 운영: 공모를 통한 선정
- 인성함양 프로그램(도) 운영: 20백만원
- 청소년 협업 프로젝트(진로, 직업교육) 30회 지원

○ 사업내용

- 연천군 기술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공업 관련)
-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속 개발(기술, 자격증 과정 강화)
- 통일미래대학 안정적인 운영(명예학위제, 학과별 특색 강화)

○ 성과 목표

- 1인 1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군민 양성

나. 로컬 기반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 추진목적

- 연천군 주요 특산품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생산기반 구축 및 이를 통한 연천 BIX 산업단지 식물바이오클러스터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 사업위치: 연천BIX 산업단지
- 사업규모: 바이오소재 생산시설 3,000㎡

○ 사업내용

- 연물 정제/추출/가공 시설 구축 및 운영
- 천연추출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시설구축
- CMO 기준 설정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식물 추출물 내 단백질 전처리 추출시설 및 정제 등 생산·품질관리시설

○ 성과 목표

- 식물바이오 관련 다수 기업 이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향후 식물바이오산업 추진에 따른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지역경제 회생과 함께 인구소멸 위험의 근본적 해소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수소연료발전연계)

○ 추진목적

-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연계하여 온실 운영에 따른 난방비를 절감하여 경쟁력 강화와 신에너지 보급에 기여
- 도시가스 대량 사용처 유치로 도시가스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확대가 가능하여 에너지 취약지역에 에너지 복지 실현

○ 사업내용

- 사업규모: 50,000㎡
 - 온실 40,000㎡, 수소연료전지 3MW
- 스마트팜 시설 구축(온실)
 - 임대 계획을 감안하여 구획당 환경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 ICT 접목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관수, 차광, 환기 등 시설
 -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수소연료전지 발전 3MW
 - 민간사업자 주도 발전소 설치 및 스마트팜 열공급

○ 성과 목표

-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
- 노동과 자원 집약적인 농업에서 탈피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의 전환
- 수소연료전지 연계로 스마트팜 운영비 절감과 인근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

□ 연천 친환경 도시근로농업 확대

○ 추진목적

- 2017년 기준 채소류 재배 면적 및 생산량 현황
 - 조미채소류가 322.5ha(생산량 2,303톤)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채류 99.1ha (생산량 3,674톤), 엽채류 87.5ha(생산량 4,781톤), 근채류 12.8ha(생산량 586톤)로 재배면적으로는 조미채소류가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으로는 엽채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연천군의 친환경농업 인증 건수는 93건, 인증 농가수 128가구, 면적은

21.8ha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2016년 비교하여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인증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연천군의 경우 친환경 근교농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로 근교농업에 적합함
- 연천지역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와 기초 엽채류 재배로 소득증대 및 도시민에게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
- 특히, 기초 엽채류식량은 도시민에게 공급,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 먹거리 사업이 병행 가능한 작물로 수도권 시장에 인접한 연천군은 도시근교농업 활성화가 필요함
- 도시근교농업은 소비지가 근접거리에 있어 유통비용 절약 및 신선유통 가능한 수도권 농산물 소비자 대상 연천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이 요구됨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농업형태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 추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장남면 및 미산면 일원
-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 사업비: 4,0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
 -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 사업내용

- 시설재배: 50ha 내외
 - 6년근 개성인삼: 5ha 내외 배추, 파, 무, 고추, 마늘, 감자 등 식량, 양념 채소 : 45ha 내외
- 농업기반, 농작업, 생력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 우수 생산비 절감, 농업기술전수, 상품개발 등
 - 농작업, 재배, 수확, 저장, 재배포장 등
 - 종묘, 토양개선제, 비료, 작물보호제, 상품개발, 농작업도구, 농기계, 육묘비닐, 하우스, 관수, 수확, 저장시설, 기반시설, 재배관리농자재 등
- 유기농업자재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판로 확대 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대상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해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량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 화분매개곤충 공급
- 친환경농업 컨설팅
 -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
 -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프로그램 구축

○ 성과 목표

- 연천군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업체류 전략품목 육성 기반 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도시민 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질적 향상 도모
- 예산 및 유통 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다. 디지털전환시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

□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

○ 추진목적

- 기 운영중인 마을방송시스템은 소음, 난청, 울림, 부재 시 정보전달의 문제점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기존 마을무선방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효율·저비용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난,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의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사업예산: 331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242백만원, 군비 89백만원)

○ 사업내용

- ACS, ARS, TTS, 크로샷, 보안솔루션 등 시스템 구축
 - 관리자용 프로그램 및 모바일플랫폼 구축
 - 음성데이터 애용량 전송에 따른 회선 구축
- 2024년 3월: 설계 및 보안성 검토
- 2024년 7월: 시스템 구축 및 통신사업자 협약체결

- 2024년 8월: 시범운영 및 문제점 보완, 읍/면 주민설명회 개최
- 2024년 10월: 마을 확대 운영

○ 성과 목표

- 기존 마을방송 대비 사업비 절감
- 행정효율성 증대 및 정보접근성 확대

□ 청년 임대용 스마트팜 단지 조성 : ICT 기반 스마트 축산 조성 및 확산

○ 추진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장비 지원 필요
- ICT 기반 환경친화형축산업으로 전환으로 축산업의 지속 성장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고도화 추진 절실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은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년 2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연천군 백학면 및 장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추가 검출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237건): 파주 64건, 연천 70건, 철원 22건, 화천 81건
- ASF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 위축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연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스마트축산조성 및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전역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사업비: 5,0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
 - 국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산업 환경 조성(기존사업 계속)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및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지원
- 축산환경개선사업 및 이미지개선 사업
-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및 다용도 축분처리장비(트레일러) 지원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기존사업 계속)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
 -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역 백신접종지원 등
- 스마트팜기술 활용이 가능한 한우, 양돈, 가금분야 농업경영체대상 선정
 - ICT 융복합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
- ICT 축산융복합 확산 지원
 - ICT 융복합확산사업 계획 수립
 - 농가 예비 신청 및 서류 접수, 현장 방문 및 농가 컨설팅, 농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완료 및 정산
- 지속가능한 축산경영을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경영 지원
 - 가축사육업등록 농가 중 동물복지 전환 희망 농가 대상 사육환경 개선
 - 동물복지 전환에 소요되는 사육공간 확대 및 사육환경 개선
 -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지원 계획 수립
 - 농가 예비 신청 및 서류 접수 등
-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 양돈농가 집합교육 및 방역약품 배부
 -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및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등

○ 성과 목표

- 지능형 방역시설 및 사양관리로 가축질병과 전염병을 미연 예방
- FTA에 대응 스마트축산 구축으로 지속적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축산농가소득 안정
- 밀집사육 해소 등 근원적 구조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

3)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1) 가평군 전략사업(안)

가.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조성

○ 추진목적

- (육아환경 개선 및 정주민족도 향상) 공공형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정주 만족도 향상, 저출산 극복에 기여
-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산업화) 타 시설과 차별화되는 복합체험시설로 조성하고, 수도권 인접 입지여건과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화를 통한 인근 지자체와 결연 등 관계인구 유입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4(3년간)
- 사업규모: 12,0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12,000백만원)
- 사업대상지(2개소: 청평면, 조종면)
 -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49-6번지 일원
 - 가평군 조종면 현리 420-10 일원

○ 사업내용

-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 하늘과 정원조성, 상상공간, 액티비티공간, 물놀이 공간 등 상상력 자극 및 창의력 제고를 위한 모험·창의 체험 공간 조성
 - 연령에 맞는 다양한 키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놀이문화 조성
-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교실 구축
 - 가평군 및 인접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날 만한 재난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처럼 구성된 안전종합체험시설 조성
 - 심폐소생술, 구조요청신고, 화재진압, 지진, 버스교통안전체험 등
- 관내·외 교육청과 연계하여 체험교육 활성화

- 시설 운영방안

- 영유아·어린이 놀이 체험복합시설이 준공되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
- 시설 내 부대시설은 마을기업 등의 공모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거버넌스 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 공공형 시설이므로 수익성 창출보다는 저렴한 이용료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은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다수의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지원 연계 방안

- “영유아 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 놀이 시설을 구축. 이를 통한 출생률 증대를 목표로 함
- 가평군청 ‘7080 청평고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
- 경기도청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음악산 관광마을 조성 사업’과의 관광연계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여 생활인구의 확대 및 관계 인구 증진 기대

○ 성과 목표

- 가평군 내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육아시설 확충’
- 영유아·어린이 안전·놀이체험시설로 인해 연간 관광객 추가 확보
- 시설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영유아·어린이 놀이 체험복합시설 이용자 만족도

나. 교육자치 협업형 교육기반 확충

□ 지역인재를 활용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적

-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지속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
- 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공백과 교육 격차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 2028(4년간)
- 사업규모: 1,4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300백만원, 군비 1,100백만원)
- 사업대상지: 가평 장학관 or 가평도서관(비대면 멘토링 교육서비스 룸 설치)

○ 사업내용

- 시·군간 교육 불평등 및 교육격차 해소 목적의 비대면 1:1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포털서비스를 구축하여 비대면 1:1 멘토링 교육서비스 제공
- 가평군 관내 중학생과 가평군이 선발한 가평출신 대학생 멘토가 1(대학생) : 5(중학생)로 온라인 그룹을 이루어 방과후 학생의 학습(영어, 수학)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 멘티(중학생): 학습지원이 필요한 중학생 선발(가평교육청)
 - 6개월간 주 2~3회 실시간 쌍방향 그룹 화상 학습
 - 수업참여 의지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추천과 학부모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멘토(대학생): 가평지역 출신 대학생 선발(가평장학관 등)
 - 6개월간 주 2~3회 실시간 쌍방향 그룹 화상 학습지원 진행
 - 가평군과 가평교육청이 멘토(대학생)를 선발하고 관리
- 본 사업은 온라인스터디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멘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용역업체에서 지급

○ 재정지원 연계방안

- “지역인재를 활용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도시-농촌간 교육 불평등 및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인재(대학생 등)를 멘토로 일자리 창출이 목적임
- 이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강의 교육지원’와 연계하여 교육기획 제공 및 학습격 해소를 지원하고자 함

○ 성과 목표

- 가평군 지역인재를 활용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멘티) 수 참여자 수
 -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피드백

(2) 연천군 전략사업(안)

가. 지역 재창조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일자리 연계 기술학교 건립

○ 추진목적

- 현재 경기도 남부 1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기술학교를 경기 북부인 연천에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학교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의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창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군내 체계적인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프라 부족
- 한반도 평화 및 산업협력관계 강화를 대비한 북한산업 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전략 거점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137-1(군부대 유휴부지, 12,334평)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사업비: 57,0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고용노동부,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기술학교), 국비 50%이내

○ 사업내용

- 경기도기술학교 연천캠퍼스 유치
 - 직업능력향상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직업 전문 교육기관 건립
-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 건물: 군막사(30개실, 3층, 면적 약 1,350㎡), 식당(1층, 면적 약 520㎡)
 - 활용부지: 연병장 및 주차장 약 30,000㎡
 - 식당: 신당 및 대강당 활용(창업보육실 등록자 및 교육생, 직원 식사 제공)
 - 군막사: 사무실, 인재관리실, 교육실(4차산업과, 생활기술과), 창업보육실(15실) 활용

○ 성과 목표

- 직업능력향상교육 필요 증가 및 미래 시대 변화를 준비
- 경기북부권 기업과 연계하여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
-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북지원 기술 교육 허브기관 운영
- 기존 기술학교와 평생교육의 시스템 결합으로 유연한 과정 운영

□ 제대군인 정착기회 마련을 위한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 추진목적

- 연천군은 국내 대표적 군 주둔지역으로 매년 많은 제대군인을 배출하며, 이들은 관계 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의 경우 지역 내 정착하려는 수요 존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2026년 (5개년)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 및 인접지역 군인 대상 (약 7만명 내외 대상)
 - 연천군 관내(5만명 내외), 인접 지역 (2만명 내외)
 - 1차 대상 (직업군인), 2차 대상 (의무복무 군인)
- 대상(예정)지: 연천군 전곡읍 일대

○ 사업내용

- (추진 프로세스)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정착 희망자 모집 후 지원자 성향 및 역량종합 진단 후 적정(취업 또는 창업) 정착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 (취업 트랙) 민간기업 필요 기본 역량교육 제공, 지원자 종합분석 결과 활용한 일자리 매칭
- (창업 트랙) 창업 역량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성과 목표

- 청년 일자리 확보율 증대

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대학-기업 연계 활성화

□ 연천 일자리센터 연계 청장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 추진목적

- 관내 청장년층을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망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외식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외식산업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외식업체의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을 통한 외식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를 추진
- 로컬푸드 기반 경쟁력 있는 외식기업 경영인 육성
- 연천군 내 창업수요 창출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업시설 및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전국읍 일원
- 사업기간: 2023년 ~ 2030년
- 사업비: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 창업지원센터는 연천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청장년 신규창업 및 재창업 지원
- 청장년층의 창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협동으로 금융 등 패키지(교육, 네트워크, 공용시설, 회의실 등) 지원
- 창업전문 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전담육성체계 마련
- 지역청년층 및 제대군인 청년농업인 등 대상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지원
- 창업공간 및 지원시설 지원
- 빈집, 빈점포 및 유휴시설 우선 활용 : 공유주방지원 공모사업 연계
-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맞춤형 기술 등 우선 지원
- 은통산업단지 연계 식품 관련 업종 우선 추진(식품가공 등)
- 금융관련 패키지 지원
- 창업을 위한 금융 관련 컨설팅 및 용자 지원
- 창업전문 지원기관 활용 전담육성체계 구축
- 연천군 일자리센터 주관 창업전문 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성
- 청장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주방을 조성하고 이를 임대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홍보비 등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공모사업)
-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외식업 창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신규로 계상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12개소 중 3개소가 카페, 식당 등 외식업 분야에 창업할 예정
- 연천군 푸드플랜 기반 로컬푸드 연계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청장년층 및 제대군인,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지원 확대

○ 재정지원 연계방안

- 사업비 조달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단위사업: 한식 및 외식산업육성, 세부사업 : 푸드서비스선진화,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 국비 60%, 군비 40%

○ 성과 목표

- 1인 1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군민 양성

다.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 온종일 활기찬 보육 지원

○ 추진목적

-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 및 보육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대상: 어린이집 25개소 815명/ 가정양육아동 180명
- 사업기간: 2022~2026년
- 사업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외 42개 사업/ 12,072백만원(매년)

○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지원: 25개소, 1,456백만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실시
 - 어린이집 환경개선: 1개소 22백만원/ 안전점검 25개소 21백만원
- 연장보육서비스 등 운영: 인건비 44명 290백만원/ 보육료 3,827백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 283명 477백만원
- 장애경계선 아동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보육교사제 운영: 3명 72백만원
-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사업 추진: 영유아 및 보호자 검사 700명
-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사업추진
 - 영유아 및 보호자 검사,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실시
- 만 0-1세에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매달 449백만원

○ 성과 목표

- 양질의 보육 및 양육사업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

□ 아동이 행복한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 추진목적

-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찾아가는 드림스타트 사업
 -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지원 및 사례관리
 - 인지·정서·건강·가족 등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사업기간: 2022~2026년
- 사업비: 2,930백만원

○ 사업내용

- 만8세 미만 아동수당 지원: 1,755명 1,645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7개소(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369백만원
-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 구입 지원: 1개소 257백만원
-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동: 140명 62백만원
-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20명: 68백만원/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7명 34백만원
- 2022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신고접수: 11명(아동학대 사례 9명, 일반사례 2명)
 - 처리현황: 원가정보호 5명, 응급조치 1명, 5건 조사 중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매분기 지원
- 아동수당 및 가정위탁아동수당: 매월 지원
- 취약아동 및 대상가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아동 개인별 사례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타 기관 연계 실시: 수시

○ 성과 목표

-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양육·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기대

-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각 아동의 욕구와 가구여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리모델링) 및 운영

○ 추진목적

- 관내 저출산 및 가족구조, 취업구조의 사회적인 변화로 가정의 양육기능 약화로 인한 다양한 육아수요와 육아지원정책 요구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 사업개요

- 사업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리모델링) 및 운영
- 기간: 2022년~2023년(2년)
- 대상지: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2층 (160.55㎡)
- 예산규모: 425백만원('22. 182백만원, '23. 243백만원)
 - 설치비 244백만원, 기자재비 101백만원, 운영비 80백만원

○ 사업내용

- 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장난감도서관) 및 기자재 구입 등

○ 성과 목표

- 육아와 취업으로 인한 소득 창출 가구에 대한 양육 보조

라. 교육자치 협업형 교육기반 확충

□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지역 삶의 질 강화

○ 추진목적

- 지속적인 저출산 기조에 따라 인구 감소 및 농촌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수준 향상, 워라벨 확산 및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문화·예술·체육·복지 등 생활SOC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학교시설의 경우 다양한 경험 중심의 교육환경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과 학교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이 대두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30년
- 사업비: 14,300백만원(국비 8,000백만원, 군비 6,300백만원)

○ 사업내용

- 학교시설복합화 체육시설 확충
 - 학교시설개방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 정착
 - 유휴 시간대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학교 체육관 개방교에 시설개방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전 대책 마련
 - 야간 사용가능 조명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자연스럽게 주차장 개방 및야간 주차 편의 제공 가능
 - 학교숲 조성 및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사업을 통한 학교 개방 및 지역주민의 여가, 레크레이션 지원, 학교 주차장 개방 및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 생활체육단체 지원 활성화 및 스포츠 꿈나무 지원 사업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종목별 생활체육단체 지원
 - 다양한 클럽간에 리그전 등을 통해 볼거리 및 응원 문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여하는 스포츠 및 보고 즐기는 스포츠 역시 확충

○ 성과 목표

- 주민 편의와 학교시설 개선을 중복 실현 가능
- 생활권별 생활SOC와 학교시설 수요 예측 판단 가능

□ 접경에서 중심으로(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추진목적

- 군민의 학력증진과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소외 계층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 사업개요

-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비문해자, 장애인, 소외지역)
-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터 운영 확대 및 안정화
- 군민의 학습이력제, 강사 인력풀 구축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 추진

○ 사업내용

- 연천꿈샘학교 운영: 151백만원

- 한글교실: 집합교육형 9개 반, 가정방문형 5개 반(1~3명 단위)
- 중학교실: 1개 반(중등 3단계 운영-이수 후 졸업)
- 검정고시교실: 1개반(고등 졸업 1개 반)
- 학력 인증과정 운영: 초등 1개 반, 중등 1개 반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5백만원
 - 2개 과정, 52회, 총 40명
-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도) 운영: 30백만원
 - 1개 학습마을, 10개 프로그램
-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도) 운영: 62백만원
 - 4개 학습마을, 40개 프로그램
-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터 운영: 25백만원
 - 경로당 5개(5개 프로그램), 마을 5개(20개 프로그램)
-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도) 운영: 15백만원
 - 15개 동아리, 150회 교육 강사 지원

○ 성과 목표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보편적 평생교육 추진

4)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1) 가평군 전략사업(안)

가. 건강·의료시설 확보를 통한 웰니스 기반 구축

□ 힐링&행복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 추진목적

- 고령층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 어르신 교육, 여가활동, 노인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합 지원을 위한 노인 종합복지 서비스 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 2026(4년간)
- 사업규모: 10,0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4,000백만원, 군비 6,000백만원)
- 사업대상지: 가평읍 읍내리 282-2번지 (3,706㎡)

○ 사업내용

- 노인종합 복지서비스 센터 건립
 - 노인회사무실,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센터, 노인대학 등 혼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노인종합 복지서비스 센터 건립으로 통합 운영
 - 노인정책, 취업정보, 노인복지 등 제각각 운영하며 중복, 혼재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을 통합 운영을 통한 일관된 정보 플랫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 노인정책 통합 운영
 - 각각의 시설들의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정보 인프라 구축
 -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노인정책의 일관된 소통 창구 운영
 - 노인돌봄, 건강, 사회활동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긍심 부여
- 노인취업센터 운영
 - 노인취업정보,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 제공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계를 통한 중간네트워크 지원조직
 -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 지원
 - 안전교육 및 일자리 홍보, 컨설팅 등을 맞춤 지원
- 노인복지관
 - 교양, 문화예술, 취미여가활동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재가복지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저소득 노인 경로 무료식당 운영
- 시설배치(안)
 - 지하1층: 기계실
 - 지상1층: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 지상2층: 다목적실, 소회의실,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육실
 - 지상3층: 사무실(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휴게실

- 지상4층: 사무실(노인회), 취업센터, 노인대학, 소회의실

○ 재정지원 연계방안

- “힐링&행복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화가 지속될 전망과 지역적응 전략을 병행하고자 함
- 이에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민간 협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
-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참여도 등 높은 접근성을 기대

○ 성과 목표

- 종합적인 노인정책 및 다양한 서비스를 노인인구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설이용자 수 증대
- 다양한 노인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채용(일자리 창출)
-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시설이용 만족도 증대

나. 거점활력공간 조성으로 인구유출방지담 조성

□ 북한강 마리나 건립

○ 추진목적

- 마리나 개발을 통해 수상 스포츠의 기초 토대를 다지고, 이에 관련된 관광, 숙박 등의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
- 장비판매, 장비수리 등의 마리나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청년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운영을 통한 수상레저&관광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 2027(3년간)
- 사업규모: 15,000백만원(지방소멸기금 7,000백만원, 지방비 8,000백만원)
- 사업대상지: 가평읍 북장리 9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마리나 계류장 설치

- 요트, 모터보트 등 다양한 보트가 접안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도입한 독특한 디자인의 계류장 조성
- 국가하천 내의 시설기준을 검토하고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며 고정식 계류시설을 배제하고 부유식 계류시설을 도입하여 홍수 시에도 시설의 안전성 향상
- 이용 빈도가 낮은 보트는 육상보관시설에서 계단식으로 적재하여 전체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
- 마리아나 광장 및 클럽하우스 설치
 - 주차, 보트 출입, 육상정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 북한강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 자연 경관과의 어울림
 - 마리아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 사항의 컨트롤 타워
 - 보트 관련 상업시설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카페 등 복합상업시설 + 이용객 커뮤니티 시설
 - 수상레저 테크니션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실내교육장, 자료실, 세미나실 운영
- 수상레저 테크니션 양성과정
 - 보트엔진, 선체 등 레저선박의 수리, 유지보수에 대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청년층을 불러들이고 또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북한강 천년벚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유람선(수상 버스 개념)과 모터보트(수상 택시 개념)가 연계된 개별 맞춤형 관광으로 시너지 창출

○ 재정지원 연계방안

- “북한강 마리아나 건립”은 수상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사업과 연계
 -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활성화 모색’과 연계하여 캠핑장 및 수상클럽하우스 등북한강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과의 연계로 북한강 마리아나 관련한 개발계획 및 조성 후 홍보 강화 지원

○ 성과 목표

- 마리아나(클럽하우스, 마리아나 계류장, 광장 조성) 조성을 통한 수상레저 및 수변관광 활성화
- 마리아나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대 > 지역부가가치 창출 기여
- 수상레저 테크니션 양성과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창업활성화

다. 세대조화·통합형 정주기반 조성

□ 설악 눈메골 힐링둘레길 조성사업

○ 추진목적

- 기 조성된 창의천, 미원천 합류구간의 산책로와 연결,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확대
- 지역주민들과 새로운 인구 유입객에게 설악 눈메골의 깨끗한 힐링둘레길로 인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의욕 제고 효과 기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 사업규모: 약 80억원
- 사업대상지: 신천교→창의1리 마을회관→선화목장→엄소리 유원지→엄소사거리→미원천 하류구간→탐선골 캠핑장→선촌2교

○ 사업내용

- 창의천, 미원천 합류구간 산책로와 연계하여 단절된 산책로 연계성 확보
 -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
 - 신천 2,3,4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둘레길 주변 생활인프라 구축
- 쾌적한 산책환경을 위한 하드웨어 조성
 - 안전을 위한 도보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구획 분리
 - 반대편 하천으로 건널 수 있는 연결 징검다리 조성
 - 수변 동식물 보호를 위한 생태보존구역과 산책로 구분
 - 둘레길 시설안내, 동식물 생태정보, 이정표, 코스 구간별 거리 표식 등 안내판 설치
 - 야간에도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방법 CCTV, 경관조명, 비상벨 설치
- 둘레길 주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 인프라 구축
 - 장미정원, 덩굴나무터널, 메타세쿼이아길 등 테마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수목 식재
 - 주거지역과 가까운 둘레길 주변에 야외운동기구, 생활체조교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분수, 인공암벽장 등 생활편의시설 마련

- 일부 스팟에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축제, 다리밧 버스킹, 작은 음악회, 시화 전시회, 플라마켓, 야시장 등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
- 둘레길 구간별 포토스팟 인증샷, 스탬프 투어와 기념품 제공

○ 재정지원 연계방안

- “설악 눈메골 힐링둘레길 조성사업”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새로운 인구 유입객에게 설악 눈메골의 깨끗한 힐링둘레길로 인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의욕 제고
- 가평군의“설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설악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증대에 기여

○ 성과 목표

- 설악 눈메골 힐링둘레길 조성을 통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산책환경 제공
- 미원천, 창의천 주변 둘레길과 생활편의시설 구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 유도
- 둘레길 조성을 정주여건 주민만족도 증대

(2) 연천군 전략사업(안)

가. 건강·의료시설 확보를 통한 웰니스 기반 구축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지원

○ 추진목적

-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노인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2026년
- 사업규모: 154개소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3개소/ 운영비 등 7종
- 장기요양기관 기초의료수급자 시설·재가급여 지원
- 지원대상: 42개소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108개소/ 운영비 등 9종
 - (사)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운영 지원
 - 노인지도자 교육 및 경로당활성화 여가프로그램
 -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
 - 노인교실 운영
- 성과 목표
- 2026년까지 154개소 공급을 통한 노인복지 구현
- 보건의료원 국공립화를 위한 전문병원 강화
- 추진목적
- 공공재인 공공의료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는 국가이며, 공공의료 수급의 형평성, 국가와 지자체 재정분배 구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공립화 필요
 - 치유농업에 특화된 공공의료사업을 적극 육성한 전문 공공의료원이 필요
 - 의료 ICT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및 네트워크 강화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2026년
 - 사업비: 5,700백만원
- 사업내용
- 보건의료원 국공립화 추진 주민위원회 구성
 - 군내 의료수요 및 보건의료원, 보건소와 협력 강화
 - 의료 공공성 강화 및 확대를 위한 국공립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구상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공단 구성을 통한 공공의료 통합 추진
 - 민간병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공병상 및 공동 건강증진사업 협력 강화
 - 보건의료원의 특성화 병원 전환을 위한 치유농업센터 설립
 - 정신치유 특성화 전문병원 운영방안 제안(가칭 치유농업센터)
 - 치유농업을 농업과 의료가 융합 연계하여 연천특화 의료영역 구축
 - 정신치유관련 대안치유로 치유농업태동(치매, 요양, 치유농업, 자살, 아토피 등)

- 농업기술센터, 통일평생교육원, 요양원, 치매센터, 치유농업인 과의 협업 및 비전공 유가 우선됨
- 치유농업센터내 치유농업연구소 운영
-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치유농업 연계
-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유농업 연계
-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치유농업 연계
-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과 치유농업 연계

○ 성과 목표

- 공공의료 강화 및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원의 국공립화 추진
- 공공의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치유농업과 공공의료의 접목을 통한 선도적 치유산업 기반구축

□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복지 서비스

○ 추진목적

-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일반, 한부모, 조손, 다문화, 이혼위기 가족 등
- 사업내용: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 사업비: 875백만원(국 378 도 55 군 424)

○ 사업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중장년 동아리, 식생활 개선·건강돌봄, 재무·경제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의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학령기 다문화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
 - 한국어 교실, 통번역서비스, 서포터즈, 방문학습지,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 성과 목표

- 가족형태(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일반가정 등)와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

나. 거점활력공간 조성으로 인구유출방지담 조성

□ 도시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

○ 추진목적

- 대중교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복선전철로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필요함
- 또한 한 지역의 역세권개발은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의 주요 환승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장기적으로 연천군의 대중교통 환승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
- 역세권개발사업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므로 연천군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 여객 철도역사 주변 개발 : 초성리역, 전곡역, 연천역 중 우선순위 선정
 - 화물기지 역사 주변 개발 : 통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 구역 지정 : 2년 (2022 ~ 2023년),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 기본 및 실시계획 : 1년 (2024년),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의견수렴 및 확정 등
 - 사업 시행 : 3년 (2025 ~ 2027년), 공사발주 및 시공
- 사업비 : 50,000백만원 (국비 5,000백만원 / 군비 5,000백만원 / 민자 40,0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지원요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비용의 부담)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가능
 - 도시재생뉴딜사업(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 지자체+공기업(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LH 등) 협력사업 추진 가능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

○ 사업내용

- 주거재생형 구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 구도심 그린리모델링, 단독/다가구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확보 등
- 주거지원형 소규모 지역 정비사업
 - 주택개량,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 중심시가지형 원도심 재생뉴딜사업
 -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재생뉴딜사업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원도심 / 농촌지역 재생 활성화
- 농촌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
 - 귀촌·귀농자를 위한 빈집 활용
 - 수도권과 인접하여 귀촌·귀농하고자 하는 이주자들에게 빈집을 활용한 주거지 지원
 - 예술가들의 활동, 전시, 이벤트, 워크숍 등으로 공간 활용하는 리노베이션 사업 추진
-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
 - 농업과 보건, 복지를 결합한 케어팜(치유농장) 등 농촌 융복합 비즈니스를 위한 리빙랩 활용 공간 제공
 - 관광지 주변 빈집을 활용하여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로 정비

○ 성과 목표

-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노후주거지 정비로 지역민의 참여도 증가 및 지역활성화 유도 가능
- 농촌 빈집 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역 특성화 콘텐츠 개발 및지역내 인구유입 유도 가능

□ 연천군 역사·문화관광 자원 개발방안 및 랜드마크 신축

○ 추진목적

- 관광여건의 변화와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 대내·외적 추세에 발맞추어 연천군도 역사·문화·예술·관광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연천군의 경우 하계방학기간(8월)과 가을단풍철(10월), 겨울방학(2월, 3월) 기간에 국내관광객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특화계절인 동계프로그램 확대개발 및 비수기 관광 상품개발 등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전략을 수립 필요
- 따라서 연천군만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예술·관광자원의 경쟁력을 갖춘 관광·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천군 관광자원 개발방안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집결지용 랜드마크 관광 상품 개발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일원
- 사업기간: 2020년 ~ 2025년
- 사업비: 53,400백만원

○ 사업내용

- 연천군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최적의 집결지 개발
- 주요 집결지 연천군 랜드마크 신축
- 주요 집결지 관광홍보인프라 구축
- 연천 주요 출입로 관문설치

○ 재정지원 연계방안

- 연천군 역사·문화·예술·관광자원 개발[안] :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의뢰(지방비 100%)
- 주요집결지 관광인프라 구축 국고지원 사업 검토

○ 성과 목표

- 관광지 개발에 있어 집결지와 경유지, 목적지를 정확히 하여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천군의 경우 모든 문화·관광의 집결지이면서 출발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됨
- 또한, 주요 집결지 휴게소와 전망대 연계 새로운 상권형성 및 카페, 쇼핑문화 개발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유동인구유입 등에도 많은 기여

□ 연천군 문화특화지역 조성

○ 추진목적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및 문화도시 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정부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관광관련 시설건립, 경관조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연천군이 갖고 있는 대표 관광자원 외 소외된 지역 잠재자원에 대한 발굴 및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에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 문화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창조도시 사업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장남면, 미산면, 연천읍 연천심원사지 일원
-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 사업비: 10,5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사업용역비 2억원 포함], 국비 46%, 도비 20%, 군비 24%, 민자 10%

○ 사업내용

- 연천군 관광두레 조성사업
- 미강서원 복원사업
- 연천의 구곡과 다양한 8경 복원사업
- 보개산 및 연천심원사지 불교문화마을 지정·조성 사업
- 보개산 도립공원 및 국립공원화 사업 추진

○ 성과 목표

- 연천군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하여 연천군의 지역자체 고유브랜드 창출 및 연천 문화팔경을 통한 새로운 정적 관광명소 창출
- 연천군의 미개발 관광자원 및 소외된 지역 잠재자원에 대한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지원 및 실현

□ 연천군 역사·문화·관광권역 지정 개발

○ 추진목적

- 권역별 관광지와 관광자원은 접근성과 지역적 위치에 따라 연계되어 증폭될 수 있으며, 관광루트를 중심으로 관광상품 개발 시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연계시킴으로써 관광권역의 관광자원 이용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연천군은 다양한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권역별 개발계획을 통하여 주요자원의 잠재적 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지역별 차별화 전략 필요

- 또한, 본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 우선적 추진과제로 관광 및 문화자원의 개발이 전체 23.8%로 2순위로 조사되어 연천군민의 관광권역 설정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
- 따라서 연천군의 역사·문화·관광권역 지정을 통하여 문화·관광부문 발전·활용 방안 수립·제안과 연천군의 역사·문화·관광 정책적, 전략적 지원 및 지역별, 권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 수립·추진 가능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일원
-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 사업비: 3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군비 100%

○ 사업내용

- 제1권역 DMZ 평화·안보권역
 - 군사분계선 DMZ 평화의 길(강화-연천-고성) 중심으로 개발
 - 전망대: 승전OP, 상승전망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 연계관광: 철새도래지 등
- 신규/검토사업
 - DMZ 평화의 길(강화-연천-고성) 조기 개통
- 제2권역 역사문화·관광권역
 - 장남면에서 미산면을 연계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및개발
 - 역사유적: 연천경순왕릉, 박진장군묘, 연천송의전, 연천학곡리적석총·고인돌 등
 - 고구려 3대성: 호로고루성, 당포성, 은대리성
- 신규/검토사업
 - 고량포구를 재현한 관광지 개발
 - 전통(한옥)마을 등
- 제3권역 수변레포츠거점권역
 - 한탄강 중심의 수변관광자원 확대개발
 - 수변역사·문화자원: 연천전곡리유적지, 전곡선사박물관, 조선왕가, 지석묘·고분 등

- 수변레포츠시설: 한탄강관광지,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및 공원화 사업 등
- 신규/검토사업
 - 한탄강 좌상바위,아우라지 베게용암 광장조성사업
 - 버킷리스트공원 조성사업
- 제4권역 세계지질·생물권역
 -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서 주상절리길 중심으로 임진강주상절리,
 - 세계생물권역 연계 개발
 -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생물권역
 -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 보트놀이장, 야영장, 숙박시설(호텔), 식물원, 워터파크 등
- 신규/검토사업
 - 연천 문화·관광 제1집결지(합수머리 부근)광장조성사업
 - 임진강주상절리광장 및 전망대, 강의다리 조성사업
- 제5권역 근대문화·관광권역
 - 연천역 중심 그린팅맨, 허브빌리지 연계 근대문화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
 - 연천역급수탑, 그린팅맨, 군남홍수조절터를 연계하는 새로운 연천 관광명소화
 - 관광지 육성: 허브빌리지, 연강 Forest 조성사업 등
- 신규/검토사업
 - 도신리 비행장 연천 제2집결지 광장조성사업
 - 연천 신병훈련소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 현충원 중심 문화UN참전도시 육성
- 제6권역 산악레포츠거점권역
 - 고대산 중심으로 보개산, 연천삼원사지 등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개발
 - 고대산 평화체험특구(고대산 연천 베이스볼파크 등) 개발사업 지속 추진
 - 고대산 자연휴양림 산악스포츠체험시설 보강
- 신규/검토사업
 - 고대산 정상 별자리체험 연천천문, 고대산 야간캠프, 고대산 정상 노천영화관 등
 - 도신리비행장 ↔ 고대산, 도신리비행장 ↔ 보개산 연결 케이블카 운행
 - 고대산 ↔ 보개산 연계 구름다리 신설
 - 연천 삼원사지 복원 및 삼원사 템플스테이 지원

○ 성과 목표

- 연천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6개 관광권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원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지역특성 및 자원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육성 등 지원 가능
- 연천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잠재적 가치의 재발견 및 지역별 지속적 규상공품 개발 등을 통해 인접지역과의 차별화 가능성 배가

다. 생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 인큐베이터 센터 건립 및 50+ 프로젝트 강화

○ 추진목적

- 성인 재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증대
- 취·창업 준비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사업 운영으로 시민공동체 지원 확대 및 자율 공유공간 운영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세대 간 어울림의 장, 평생학습 캠퍼스 조성
- 학습자 간의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 공간 제공
- 전문 은퇴자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외부 은퇴자 유입 및 정착, 인생이모작 기회제공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 사업개요

- 위치 및 대상: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66번길 53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 사업비: 37,200백만원
- 사업비 조달: 교육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교육사업(군비)
 - 교육부, 국비 50%이내

○ 사업내용

- 평생교육 인큐베이터 센터 건립
 - 성인 재교육 서비스 제공
 - 취·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 50+ 프로젝트 추진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강화

○ 성과 목표

- 변화하는 시대사에 맞는 전문 기술 및 자격증 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구성을 통해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속발전 가능성을 제공
- 지역과 연계되는 평생학습 체제 마련을 통해 이론교육과 실습과정 병행으로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현실중심의 인재를 양성

라. 세대조화·통합형 정주기반 조성

□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

○ 추진목적

-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주민쉼터 신축 및 노후된 주민쉼터 리모델링 등으로 주민 복지 향상

○ 사업개요

- 주민쉼터 현황: 95개소
- 주민쉼터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5년간): 신축6/리모델링5

○ 사업내용

- 신축 및 리모델링 등 6개소

○ 성과 목표

-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

□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 추진목적

- 2023년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중앙도서관 3층 추가공사 신규 실시하여 2022년 1층, 2층 공사 실시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의 전관·전실 시설개선 완료
- 중앙도서관의 재개관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제반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중앙도서관(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9-26)
- 사업기간: 2022. 5. ~ 2023. 4.
- 사업비: 650백만원
- 시설개선 공사(3층): 387백만원

- 가구제작 및 설치: 197백만원
- 사인물 제작: 20백만원
- 개관준비 지압길 조성공사(토목) 등: 46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냉난방기 및 전기통신 설비 교체
- 1~3층 책장, 검색대, 열람석 사무용 가구 교체
- 데스크·층별 안내도, 대피도·게시판 등 돌출사인물, 로고 제작
- 지압보도(46㎡), 투수블럭 포장(71㎡), 조경 전정(1,000㎡) 등

○ 성과 목표

- 중앙도서관 공간 재구성으로 이용자 서비스 환경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도서관 이용률 증대

06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중점관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2022년6월10일)
-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대응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2021년 10월 18일)
 - 경기도 내 일부지역(가평군, 연천군)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인구감소 심각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향후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여건을 분석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 관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현상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정책수립에 활용을 목적으로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수립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함
 -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 및 시행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관련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강화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시행을 통해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원)으로 지원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75%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25%를 각각 배분하도록 함
- 광역지원계정 배분으로 재원의 90%('22년 1,687.5억원, '23년 2,250억원)는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에 배분함(재원의 10%는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자치단체 11개 배분금액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배분금액 규모가 큰 전라남도과 경기도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예, '22년 전남(378억원), 경기(4억원); '23년 전남(505)억원, 경기(5억원) 등)

□ 경기도 인구감소 변동요인 분석

○ 경기도의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에서 소멸위험에 진입한 단체는 대부분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소멸위험지수 상 경기도 시·군 중에서 연천군이 0.27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경기 북부 시·군의 노령화지수가 경기도 평균(149.38%)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기간 동안 경기도 전체 청년 전입이 전출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청년순이동률은 양(+)으로 나타나지만 가평군과 연천군의 경우 청년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역외 전출이 전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경기도 관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연천군 및 가평군)의 특성상 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과 다르게 수도권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심 교외지역에 부합하는 선택적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의 인구감소위험 개선을 위해 지자체 내 활동인구 및 생활인구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 필요함
- 향후 역내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요구됨

□ 경기도 청·중·장년이 찾아오고 출산과 양육으로 연계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역 건설 추진

○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증대함

- 원활한 생산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생산가능인구의 서비스 수요 충족

- 도시 서비스 증대로 인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확보함
 - 인구의 양적 팽창만이 아닌 지역 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건설 추진
- 경기도 격차 완화함
 -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여건 개선
- 살기좋은 경기도 건설함
 - 고령층의 생활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확보로 자연인구 확보함

□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대응 전력 목표 제시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 출산을 위한 일자리, 정주여건 등 환경 인프라 조성
 - 고령층을 위한 주거, 일자리, 급식 등의 복지 증진
-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통한 미래 세대에 대한 기회 보장
 - 학교 밖 청소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
- 인구구조변화 적응
 - 더 나은 출산 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 정책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세대 주기별/단계별 지원 확대
 -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보

□ 향후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도 조례로 제정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는 중앙부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분야와 방향성을 같이 하되, 경기도의 차별적인 특성 반영 필요
 - 반면, 지속적인 경기도의 인구 증가로 인해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주목적
 - 일자리, 정주여건에 대한 차별적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운영방안 설정함

2 정책제언

□ 지방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산업연
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방소멸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음
 - 행정안전부 등의 정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에 기인하여 인
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 못하는 일부 지방자치단
체의 이의도 존재함
 - 이는 인구감소 또는 지방소멸에 대한 기관마다의 지표가 혼재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의 위험 수준이 각 지표별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됨
- 따라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반영한 지방소멸지수
산정이 필요하며,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
소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지자체
별 배분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발전 정책,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
구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자체에 배분되나 지자체별 평균 배분
액은 80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에 불과하여 인구감소 추세를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에는 자원규모가 크지 않음
 -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및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에 대한 규제, 법정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는 생활인구, 인구감소 대응기본계획 등
이 유관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등 법정계획과 인구감소 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
와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인구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필요성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조로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발굴, 지역여건 분석 등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함
 -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등 지방소멸을 위한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발굴을 기조로 함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책발굴 단계에서 면밀한 지역여건 분석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나 지역여건 분석, 성과지표 발굴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 있음
 - 향후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지역 입주기업 중소기업육성 자금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 기업 유치와 육성에 지원 확대 검토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경기도는 연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자치단체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광역계정 내에서 용역과제 추진 요구됨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지역산업체-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확한 지방소멸 여건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필요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강화

-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필요함
 - 향후 경기도 조례를 통해 중앙부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지원과 부합하면서 경기도만의 차별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 제시 필요함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 주요사업 선정 추진체계 구축 필요함
 - 경기도 중심의 광역계정을 기준으로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 지원사업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함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및 경기도 추가 자체재원 투입을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사업의 부합성, 시의성, 중복성, 실효성 등 선정기준

제시 필요함

- 향후 우선 지원사업 선정 평가단 구성 (안) 등 추진체계 필요함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일률적인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실천과제 분류를 제시하기보다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지원 전략 및 실천과제 제시가 필요함¹⁷⁾

17)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시·군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상향식으로 관련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문헌

- 강동우 외(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강인호 외(2015). “도시수축 :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25-50.
- 강인호·노세희(2017). “인구소멸 시대의 일본 축소도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수축 전략”, 『한국정책학회보』, 21(3): 173-197.
- 구형수 외(2018).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 김수진(2021). 『프랑스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 김순은(2017).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공공정책연구』, 33(2): 25-54.
- 김예성·하혜영(2020).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김은경·문미성(2022). “프랑스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EU학 연구』, 27(1): 87-122.
- 김현호 (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 외(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31.
- 김현호·이제연·김도형(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류영아(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NARS 입법·정책』, 108.
- 류영아(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국회입법조사처.
- 박관규·주윤창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비판적 분석 : 발생가능한 문제와 해결방안”, 『이슈 & 정책공간』.
- 박승규·이제연 (20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 안소현·이순자·민성희·김민아·정봉경·강민석, Timothy Lee (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 오병기(2022).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향”, 『공공정책』, 28-30.
- 윤소연(2023).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방안”, 『지방자치 정책 Brief』, 162.
- 이경은(2022). “주요국 지역개발 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 801(2022.8).
- 이상대 외(2021).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원.
- 이상대 외(2022). 『인구소멸위험 대응 연천군 발전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 이상대·강식·신기동·남지현·김영룡·박진아·마강래·최충익·이혜령·오윤경·김도연 (2021).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2016년, 봄.
- 장문현(2022).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진단 모델의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28(1): 11-23.
- 장인수·우해봉·박종서·정찬우(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 정성호(2019).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험”, 『사회과학연구』, 58(1): 3-22.
- 정희훈·조정찬(2019). “인구소멸 대처 위한 신속·강력한 입법과 집행 절실”, 『주민자치』, 196: 38-45.
- 제현정(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1).
- 주상현(2023). “지역 소멸 대응정책 중요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26(4): 115-136.
- 차미숙 외(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제57호, 국토연구원.
- 차미숙(2020).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정책 추진 동향”, 『해외동향』, 41:45.
- 최예술(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인구유출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 최용환(2017). 『지방소멸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과제』, 충북연구원.
- 하혜영·류영아(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201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일본의 지방창생 제도 및 예산 규모 변화로 본 평가”, 『세계지방자치동향』, 41: 18-21.
- 행정자치부(2017). 『일본 지역창생 기관방문 결과보고』.

- James D. Nichols, James E. Hines, Jean-Dominique Lebreton and Roger Pradel (2000). "Estimation of Contributions to Population Growth: A Reverse-Time Capture-Recapture Approach", *Ecology*, 81(12), 3362-3376.
- R.F. Morris (1959). "Single-Factor Analysis in Population Dynamics",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40(4).
- Aditya Dey et al. (2018). "Factor Analysis of Population Growth using Data Analy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s and Engineering*, 6(9).
- Casterline, J.B. (2003). "Demographic Transition, in Demony", P., Mcnicoll, G. (eds.), *Encyclopedia of Population*, New York.
- G.C.Varley and G.R. Gradwell (1960). "Key Factors in Population Studies", *Journal of Animal Ecology*, 29(2).
- Guangging Chi and Sephen J.Ventura (2011). "Population Change and Its Driving Factors in Rural, Suburban, and Urban Areas of Wisconsin, USA, 1970-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 2011.
- INSEE(2012). "Le nouveau zonage en bassins de vie de 2012", *INSEE PREMIERE*, 1425.
- Martinez-Fernandez, C., Kubo, N., Noya A. and Weyman, T., (2012). "Demographic Change and Local Development: Shrinkage, Regeneration and Social Dynamics",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Working Paper.
- "고향올래,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 살린다.", 행정안전부(2022.12.21.).
-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 행정안전부(2022.7.7.).
- "지방소멸대책 '건물 집착'", 경향신문(2022.9.12.).
-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인구감소지역 통합 일자리사업 공모 실시", 행정안전부(2018.4.17.).
- 법령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법』(H.R. 4094).

Abstrac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financial support for the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local environmen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ecurity has implemented the new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which is to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and to improve the residence condition for the 'living population' in the designated areas facing population decline. The local governments also inte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anagement plan for the designate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o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mitigating population decline in the designated areas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within Gyeonggi Province, with the goal of ensur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This study proposes a few policy suggestions for strategic operation of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in the perspective of Gyeonggi Province. First,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 clear cause of the decline of local population. It would be uncertain to propose a specific solution to the decline of local population in each designated area of population decline without clear cause of local population decline. Second,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among sister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he pursue of revitalization of local population. There has allocated limited budget for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Therefore, it would be more effective if there were the cooperation among relevant funds of local governments while pursuing the same goal of local revitalization. Third, it is critical to implement supporting system for strategic operation of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in the long term. As required for local governments to submit the operation plan for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annually, it would demand for supporting system to perform selection process and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local policy and its condition, etc.

Keyword Gyeonggi Province, Local Extinction Reaction Fund, Designated Local Areas for Population Decline, Strategic Operation Plan

